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

A Study on 2022 Future Forecas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경훈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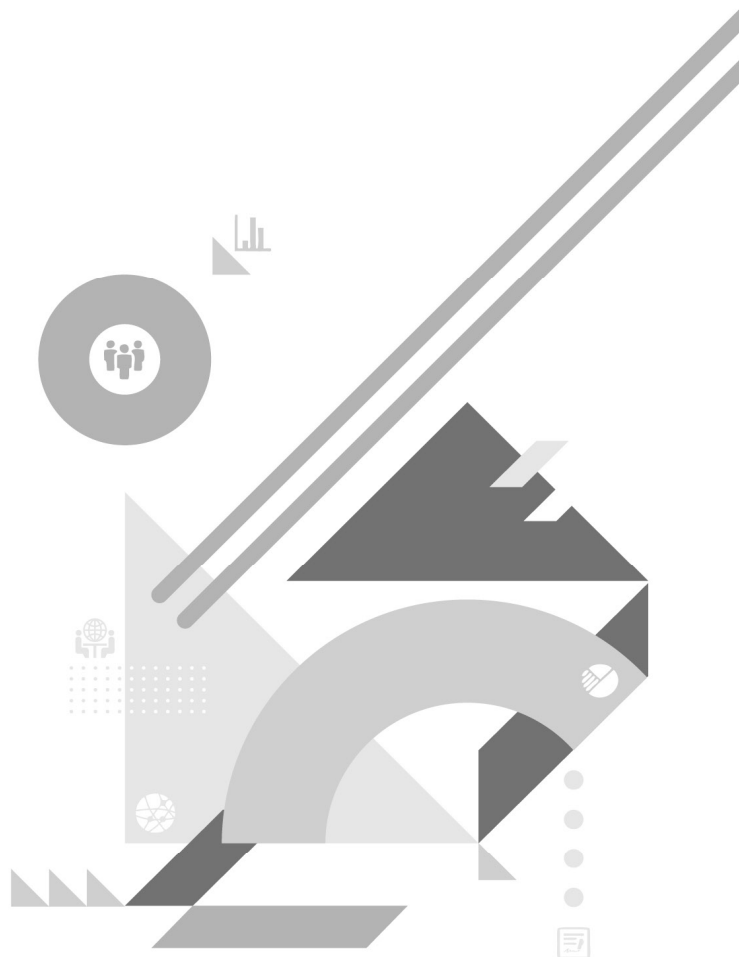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

A Study on 2022 Future Forecast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경훈 외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획 기반 강화사업(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총서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

1. 연구보고총서 개요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2-01-0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김경훈, 정용찬, 노희용, 이선희, 노희윤, 전의찬, 정성춘, 김상배, 노세리, 장영신, 박성원, 박상수, 손찬희, 김기태, 차미숙, 김형주, 조병구		
주관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경훈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정용찬 선임연구위원 노희용 부연구위원 이선희 전문연구위원 노희윤 전문연구위원	
협력 연구기관	탄소중립위원회	전의찬 기후변화분과위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부원장		
	국제정치학회	김상배 회장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신 팀장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그룹장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		
	한국교육개발원	손찬희 실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형주 선임연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권 호 열

국문요약

2021년 세계 경제는 5.9% 성장 후 2022년에는 4.6% 성장하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을 전망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2022년에도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 2019년에 비해 2022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한편,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망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9%에서 3.3% 사이에 있다. 다만 전망 시기에 따른 전망치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올수록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2022년 13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은 세계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 폭은 둔화하여 전년(25.6%)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경쟁은 전통적인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서, 그 이면에서 미래국력을 좌우할 기술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기술경쟁의 양상도 전통적인 자원 권력 계임을 넘어서 좀 더 복잡한 '신흥권력' 계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부 분야별로 경쟁과 갈등 및 협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좀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경쟁의 주체가 더이상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양국의 거대 테크기업들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그 결과로 발생할 글로벌 권력구조의 변환도 과거와 같은 '세력전이'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세력망 재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 세계적인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측면에서 21세기 말(2081~2100년), 전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995~2014) 대비 +1.9 ~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 1.5℃ 또는 2℃를 달성하더라도, 50년 빈도 이상기상은 8.6배 또는 13.9배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1.5℃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 기온이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집체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코로나19로부터 노동력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제도화 가능성을 가진 근무제도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쉽사리 종식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제2 또는 제3의 팬데믹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

공간에서', '다같이', '같은 시간에' 등이 전제된 보편적인 일하는 방식이 무너지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정부는 팬데믹 극복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며, 이로 인한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역할은 GAFA로 대표되는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이들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경쟁법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테크 대기업들의 지배력과 승자독식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을 위한 경쟁 당국 중심의 규율 강화 필요성, 디지털 경제의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나 그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비교형량이 쉽지 않아 규제 도입에 있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방침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상병수당 도입은 한국 복지국가의 '마지막 미싱 피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클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은 노동 문화에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문화적 변수와 상병수당 부재라는 제도적 변수가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한국에서의 노동 문화 및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 19세-34세 인구수는 2020년 1,089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496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현시대의 청년들은 단적으로 사회적 격차는 인정하지만 기회의 균등 부여보다는 진입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성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벼락부자는 못돼도 벼락 거지는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사회 첫 진출 때부터 사회적 약자로 몰리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 논의는 주로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 전환 논의에서 '초개문화'의 등장은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발표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학습자의 특성, 상황, 수준, 정서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위한 '초개문화 학습환경'으로, 이를 위한 기반으로 데이터와 지능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0~2022년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51곳(66%)의 시·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고, 30% 이상 감소한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또한 1975년 이래 인구정점 대비 현재 절반 이상이나 인구가 감소한 지방 중소도시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이외에, 생산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화, 지역적인 편재로 인해 지방의 인구구조 취약성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미래전망, 미래예견, 증거기반 의사결정

Abstract

The global economy is expected to grow by 4.6% in 2022 after 5.9% growth in 2021, continuing the recovery trend. With this growth rate forecast,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recovery of major countries leading the global economy will continue into 2022. China is the only country where growth is expected to be lower in 2022 compared to 2019. Meanwhile, Korea's economic growth forecast for 2022 is generally between 2.9% and 3.3%,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forecasting institution. However, if you look at the trend of forecasts according to the forecast period, the more recent the forecast, the more likely it is to raise the forecast. Exports of 13 major industries (automobiles, shipbuilding, general machinery, steel, oil refining, petrochemicals, textiles, bio-heal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home appliances, semiconductors, displays, and secondary batteries) in 2022 will increase due to the recovery of global demand and increase in export unit prices. The increase is expected to continue, but the increase is expected to slow down due to the base effect, the spread of the Corona 19 mutant virus in Southeast Asia, imbalance in semiconductor supply and demand, and the economic slowdown in China, resulting in a 3.4%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25.6%).

The current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goes beyond the traditional military and economic fields, and is centered on the technological competition that will determine future national power behind the scenes. It reveals the aspect of the game of 'power'. In this process, aspects of competition, conflict, and cooperation will appear in a complex manner in each sub-field, and more importantly, the subject of such competition is no longer a traditional national actor. Big tech companies from both countries have already emerged as major actors. As a result, the transformation of the global power structure is likely to appear as a more complex 'power network reorganization' rather than a pattern of 'power transfer' as in the past.

Meanwhile, in terms of climate change, which is emerging as a global crisis, at the end of the 21st century (2081~2100),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by +1.9~5.2°C compared to the present (1995~2014) depending on the degree of greenhouse gas emission. Global warming is clearly accelerating continuously and more rapidly, and even if the Paris Agreement target of 1.5°C or 2°C is achieved, it is estimated that the 50-year frequency anomaly

will increase 8.6-fold or 13.9-fold. If carbon neutrality does not succeed by 2050, the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by 1.5°C will not be suppressed by 2100, and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is expected to rise to 5.7°C by the end of the 21st century without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Changes in the way people work are also expected. As the face-to-face and group-centered work methods have changed due to COVID-19, companies have implemented telecommuting to maintain their business while protecting their workforce from COVID-19, which can be seen as a work system with potential for institutionalization. The possibility that Corona 19 will end easily is decreasing, and in the sense that a second or third pandemic will continue to threaten us in the future, 'in one space', 'all together', 'at the same time', etc. are the premis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old, universal way of working will be disrupted and a new, more sustainable way of working will emerge.

Governments of each country are actively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while using the digital economy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pandemic, and the key role in the digital economy is a tech platform company represented by GAFA. is being discussed. Specifically,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 dominance and winner-take-all structure of tech giants, the need to strengthen discipline centered on competition authorities to recover competition in the online platform market, confidence in the pro-competitive and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 digital economy, or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a cautious approach in introducing regulations as it is not easy to compare punishments for size. With the digital transformation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With-Corona era, attention is paid to the regulatory policie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online platforms.

The introduction of sickness and sickness allowance can be understood as the “last missing piec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ill have great significance in providing an institutional basis for a culture where workers can rest when they are sick. Korea has one of the longest working hours among OECD countries. In such a labor culture, cultural variables that cannot rest even when sick and institutional variables such as the absence of sickness and sickness benefits acted. Considering these points, the introduction of the sick-

ness and sickness allowance system is expected to contribute greatly to forming a work culture and work-family balance in Korea.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Youth」, the number of the population aged 19–34, the age of youth, is expected to decrease from 10.89 million in 2020 to 4.96 million in 2065, or less than half. Overall, it can be seen that the youth of the present age clearly acknowledge the social gap, but value a society in which competition for entry is fair rather tha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y. In addition, in the perception of the established society, we want a society in which the rich and the rich do not become beggars. .

The discussion on the paradigm shift in education mainly focuses on the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for nurturing talents required by the changing society, that is, what to teach and how to learn. The emergence of 'superpersonalization' in the discussion of paradigm shift in education in Korea is clearly revealed in the 'direction and core tasks of education polic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nounced jointly by relevant ministries in 2020. One of the key announcements is the 'super-personalized learning environment' for individualized educatio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situation, level, and emotion of the learner. Data and intelligence are emphasized as the basis for this. Despite the increase in the total population in Korea from 2000 to 2022, the population decreased in 151 cities, counties, and gus (66%), and 11 local governments decreased by more than 30%. In addition, there ar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the provinces, where the population has decreased by more than half compared to the peak of the population since 1975. In addition to the significant decrease in the local population, the vulnerability and disparity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of the provinces are deepening due to the full-scale decline of the working population, aging, and regional ubiquit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reverse the crisis of local extinction unless special measures are taken.

Keyword : Future Forecast, Future Foresight, Evidence-based Decision Making

정책 제안

1) 경제·통상

-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유망 기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 친환경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과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대응
-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 원료·소재의 대중 의존도 경감, 수출입선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 공급망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 정책 마련
-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 역할 강화 필요
 - 직접세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방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히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

2) 과학기술·ICT

-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책 수립
 - 과거의 공급자 중심적이고 산업진흥에 국한된 ICT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 정책 집단의 디지털 리더십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디지털 안전망 구성, 디지털 신뢰 기반 구축, 디지털 포용 기반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 균형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
 - 사이버 팬데믹 대비, ICT 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보안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의 태도에 기반을 둔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디지털 양극화 해소

-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구조화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근무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여 디지털이 급속하게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 미국, 중국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를 갖춘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보 관점에서 산업·기술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 협력 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연결하는 것이 중요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이분법적 발상의 전환 필요

3) 여성·청년

- 젠더 불공정 해소 및 저출산 사회 대비

- 젠더 공정성 관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임금, 고용 등의 영역에서 해결 방안 제시
-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임신·출산 양상에 따른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현상을 출산 자체의 행위보다는 남녀 불평등 문제(여성 경제활동 비율)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

-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등이 필요
-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등이 필요

-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이 필요
-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등이 필요
-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필요
-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이 필요
- 공정 이슈에 대한 재논의
 -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기대를 키워나가야 함

4) 노동·교육

-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주체적인 노사문화를 장려하고 정부 기능의 축소 및 전문화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
- 재택근무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기존의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과노동 리스크를 관리
 -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
 -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정비 비용을 제공
 - 일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
 - 인사관리 방향성과 제도의 재검토
-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생태계적인 접근 필요

- 대학 정원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미래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AI, 데이터사이언스 등의 전공에 한해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5) 국토·교통

-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출산력 제고 위주의 기존 인구사회정책 접근을 탈피하여 지역발전정책과의 정책 융합을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자체가 주도하여 특성적인 지원정책 발굴 및 통합적인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등 정책 추진방식의 전환이 필수
- 사회문제 해결 및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모색
 - 도로, 교통,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집중적인 SOC 투자를 통해 지방 초광역 경제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방 인구구조 변화를 모색
 -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함께 온-디맨드(On-demand)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 제공에 초점을 맞춰 직주근접의 범위 확대로 다양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
 - 차세대 모빌리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관련 경제·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인적 역량 확보가 최우선으로 선행

6) 환경·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환류(Feed back) 체제 구축
 -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기술 개발 지원, 산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
 - 국외감축 정책 정비, 국외감축 참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EU의 국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확대 등 추진

- 남북 산림협력 추진

-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경험을 살려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활용

-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장려하고,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과 언론홍보 및 탄소포인트 제도 개발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범위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대상 및 범위	3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5

제2장 2022 글로벌 전망

제1절 세계 경제·통상	9
1. 배경 및 목적	9
가. 배경	9
나. 목적	9
2. 주요 내용	10
가. 2022년 세계 경제전망 개관	10
나.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	14
다. 주요국 경제전망	16
3. 정책적 시사점	17
가. 대전환 비용부담과 정부 예산제약	17
나. 녹색전환에 따른 민간 병목 및 지체 현상	18
다. 국제협력의 지체	18
제2절 평화·안보	19
1. 배경 및 목적	19
가. 배경	19
나. 목적	19
2. 주요 내용	20

CONTENTS

가. 전통적 국가안보 전망을 넘어서	20
나. 코로나19와 환경에너지 및 사회안보	21
다. 사이버 안보와 기술 및 경제안보	22
라. 전통 국가안보와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	28
3. 정책적 시사점	31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망	31
나.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와 한국	32
제3절 환경·에너지	34
1. 배경 및 목적	34
가. 배경	34
나. 목적	35
2. 주요 내용	35
가. 기후위기시대의 도래	35
나. 제26차 기후변화총회와 신기후체제의 출범	37
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미래	38
3. 정책적 시사점	40
제4절 노동	41
1. 배경 및 목적	41
2. 주요 내용	42
가.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은 무엇인가	42
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	49
3. 정책적 시사점	55
제5절 플랫폼	57
1. 배경 및 목적	57
가. 배경	57
나. 목적	58
2. 주요 내용	58
가.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법적 이슈	58
나.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반독점 규제 동향	61
3. 정책적 시사점	64
가.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평가	64
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시 고려사항	64

제3장 2022 국내 전망

제1절 거시경제·산업	69
1. 배경 및 목적	69
2. 주요 내용	69
가. 2022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69
나. 2022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71
3. 정책적 시사점	74
가.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74
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75
다.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76
제2절 보건·복지	77
1. 배경 및 목적	77
2. 주요 내용	78
가. 상병수당의 개념	78
나. 한국에서 상병수당 부재의 현황	79
다. 한국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	81
3. 정책적 시사점	83
제3절 청년	85
1. 배경 및 목적	85
가. 배경	85
나. 목적	86
2. 주요 내용	86
가.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개요	86
나.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87
3. 정책적 시사점	95
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95
나. 정책 제언	96
제4절 인력·교육	97
1. 배경 및 목적	97
2. 주요 내용	98

CONTENTS

가. 초개인화와 교육	98
나.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100
3. 정책적 시사점	101
가. 디지털과 피지컬 융합 학습 환경 조성	101
나. 초개인화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 제도 개선	102
다.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전환	102
제5절 국토·교통	104
1. 배경 및 목적	104
2. 주요 내용	105
가. 지방의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105
나. 지방소멸 대응 현실과 과제	107
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110
3. 정책적 시사점	112
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행 방향	112
나. 지역 주도의 분권형 추진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등	112
 제4장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및 정책 제언	
제1절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117
1.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15선	117
가.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및 주요 내용	118
나.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및 주요 내용	120
2. 시사점	121
제2절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요약 및 시사점	123
1. 요약	123
가. 2022 글로벌 전망	123
나. 2022 국내 전망	126
2. 시사점	130
제3절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에 따른 정책 제언	131
1. 경제·통상	131

가.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131
나.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131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132
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 역할 강화 필요	132
2. 과학기술·ICT	132
가.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책 수립	132
나. 디지털 양극화 해소	133
다.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133
3. 여성·청년	133
가. 젠더 불공정 해소 및 저출산 사회 대비	133
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134
다. 공정 이슈에 대한 재논의	134
4. 노동·교육	135
가.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135
나. 재택근무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135
다.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생태계적인 접근 필요	135
5. 국토·교통	136
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36
나. 사회문제 해결 및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모색	137
6. 환경·에너지	137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137
나. 남북 산림협력 추진	138
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138
 ■ 참고문헌	 139
 ■ 부록 :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결과보고서	 143

표 차례

〈표 1-1〉 글로벌 5대 분과	4
〈표 1-2〉 국내 5대 분과	4
〈표 2-1〉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3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9
〈표 2-2〉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2000년 이후)	59
〈표 2-3〉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 주요 내용	62
〈표 3-1〉 산업별 환경규제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75
〈표 3-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방안	75
〈표 3-3〉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76
〈표 3-4〉 2018~2020년간 인구이동 양상(연령별, 지역별)	107
〈표 4-1〉 위기의 다층화 진행 및 주요 내용	122
〈표 4-2〉 개인 대 집단(공공) 프레임 비교	122

그림 차례

[그림 1-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개요	5
[그림 2-1]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11 시점)	11
[그림 2-2]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12
[그림 2-3]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12
[그림 2-4] 백신접종률 추이	13
[그림 2-5] 주요국 국채금리(10년물) 추이	14
[그림 2-6] 달러인덱스와 달러/유로 및 엔/달러 추이	15
[그림 2-7] 국제유가 추이	16
[그림 2-8] 신흥안보의 창발	20
[그림 2-9]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	33
[그림 2-10] 지구 대기 CO2 농도(미국 마우나 로아 관측소)	36
[그림 2-11] 온실가스 배출시나리오와 지표기온 상승	37
[그림 2-12]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ITMO)' 구조	37
[그림 2-13] 산업별 재택근무제 시행률	43
[그림 2-14] 기업규모별 재택근무제 시행률	43
[그림 2-15] 재택근무제 시행 인식 정도	44
[그림 2-16] 재택근무제 시행 비율	44
[그림 2-17] 일주일 기준 재택 근무 일수	45
[그림 2-18] 선호하는 근무방식	46
[그림 2-19] 사업체 재택근무제 평가	46
[그림 2-20] 근로자 재택근무제 평가	47
[그림 2-21] 재택근무제 생산성 평가, 2020-2021년	48
[그림 2-22]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계획	48
[그림 2-23]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활용 의사	49
[그림 2-24] 재택근무제와 근로시간과 노동강도 간의 관계	50
[그림 2-25] 고용형태별 재택근무제 활용 가능성	51
[그림 2-26] 재택근무제 시행에 대한 협의	51
[그림 2-27] 사업체 제공 인프라	52
[그림 2-28] 근로자 희망 인프라	52
[그림 2-29] 재택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 보상관리 체계 변화	53

CONTENTS

[그림 2-30]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 어려움	54
[그림 2-31]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활용 어려움	54
[그림 2-32]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data-flow proxy)	57
[그림 2-33] 전통산업과 디지털 생태계의 거래구조 비교	58
[그림 2-34] 2021년 미국의 경쟁정책 관련 주요 진행경과	62
[그림 3-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율 전망	72
[그림 3-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가율 전망	73
[그림 3-3]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가율 전망	73
[그림 3-4]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가율 전망	74
[그림 3-5] 상병수당의 개념	78
[그림 3-6]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79
[그림 3-7]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말하는 1년 중 아파서 쉬는 날	80
[그림 3-8] OECD 회원 국가의 노동자들 1년 평균 노동 시간	80
[그림 3-9]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81
[그림 3-10]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82
[그림 3-11] 청년층 인구 전망	87
[그림 3-12] 결혼 의향과 적정 결혼 시기	88
[그림 3-13] 대학 학자금대출 비율	88
[그림 3-14] 학벌에 대한 인식	89
[그림 3-15] 비정규직 비율	89
[그림 3-16] 청년층 채무 여부	90
[그림 3-17] 청년 1인 가구 비율	91
[그림 3-18] 부모 도움 없이 주거 마련 가능성	91
[그림 3-19] 우울증 유병률	92
[그림 3-20] 건강검진 수검 여부	92
[그림 3-21]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93
[그림 3-22]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 선호도	93
[그림 3-23] 세대 갈등	94
[그림 3-24] 단체 참여	95
[그림 3-25]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비전 및 제어 분야	96
[그림 3-26] 학습분석 기반 초개인화 교육의 흐름과 요건	99
[그림 3-27]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와 시군구별 데드크로스 실태	104
[그림 3-28] 지방의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유형화와 공간 분포 현황	106
[그림 3-29]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심층조사 대상	109

[그림 3-30]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110
[그림 3-31]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실행의 기본 방향	112
[그림 3-32]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원 방안 (예시)	113
[그림 4-1] 가능성과 파급력 순위로 분류한 이머징 이슈	118

01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범위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미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현실을 충실히 살아간다.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문·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진단과 전망에 대한 국내 최고 권위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경제, 외교, 기술, 산업 등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기관별로 연간 전망, 신년 포럼 등을 개최하거나, 언론사에서 신년 기획 기사 시리즈 등을 기사화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미래 전망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에서는 부처별 칸막이가 존재하며, 매년 초 연차계획을 수립하지만 정성적·정량적인 증거(evidence)에 기반하기보다는 기존의 업무추진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대국민 성과보고회와 함께 종합적 정책 전망·기획·확산 과정에서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연구 결과의 확산·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거 기반의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2022년도의 대한민국 경제·인문·사회 전 분야의 종합 전망을 통해, 국가 핵심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합적·미래예견적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전망을 통해, 국민에 부응하는 국가정책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국책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적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를 운영한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포괄적·통합적 미래전망을 위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5대 분과, 국내 차원의 5대 분과를 선정하여 각 분과에 따른 주요 주제 및 이슈를 발굴하였다. 우선 글로벌 5대 분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① 세계 경제·통상, ② 평화·안보, ③ 환경·에너지, ④ 노동, ⑤ 플랫폼 분야를 선정하였다. 국내 5대 분과는 현재 국내에서 나타나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쟁점과 소관 연구기관의 특성 및 역량에 기반하여 ① 거시경제·산업, ② 보건·복지, ③ 청년, ④ 인력·교육, ⑤ 국토·교통 분야를 선정하였다.

〈표 1-1〉 글로벌 5대 분과

분과	선정 이유
세계 경제·통상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
평화·안보	아프가니스탄-탈레반 등 글로벌 분쟁 이슈 대두
환경·에너지	기후변화외 이를 해소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노동	비대면 사회 도래에 따른 노동 구조 변화
플랫폼	플랫폼 중심의 산업 구조와 이를 통해 야기되는 전세계적인 규제 이슈 심화

출처: 저자 작성

〈표 1-2〉 국내 5대 분과

분과	선정 이유
거시경제·산업	코로나 19에 따른 민생경제의 회복과 산업 경쟁력 확보
보건·복지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집단 간 사회갈등 심화
청년	MZ세대의 출현과 이로 인한 문화적 소비 행태 변화
인력·교육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
국토·교통	고령화·초고령화의 급속화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출처: 저자 작성

제2절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앞서 선정한 글로벌 5대 분과와 국내 5대 분과별 미래 전망에 대한 확산 활동으로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¹⁾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그림 1-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개요

시간	주제	발표자(소속)
개회식		
09:30~10:00	인트로 영상	-
	사회자 오픈팅	-
	개회사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축사	문상로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환영사	권호열 회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념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기조연설		
10:00~11:00	대한의 디지털 민주주의	오드리 탕 장관(대한 디지털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전환	전원찬 위원장(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정성준 부위원장(고위경제정책연구원)
특별 세션(경청인의)		
11:00~12:0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최문식 사무관(국민권익위원회 민원장부분석과)
	데이터 기반 주요 국가 의제 분석	김경준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NPC데이터정보시스템과 연구기획	정현주 전문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오전 12:00~13:00		
글로벌 전망		
13:00~14:00	2022 안보환경 전망	김상배 회장(국제정치학회)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과제	노재리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플랫폼 경제와 반독점법 규제	장영신 팀장(고위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태평양팀)
국내 전망		
14:00~16:00	2022년 주축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그룹장(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2022년 산업전망	박상수 실장(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초개연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	손찬희 실장(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및 향후 방향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안사회연구원)
	지평소멸 위기와 대응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한국 청년의 일과 삶		
휴식 16:00~16:10		
종합 토론		
16:10~16:30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조병구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 찬성 : 김현진 원장(한국미래연구원) * 토론 : 김재진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문미옥 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문유경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 경 원장(한국장로사회연구원) 오재학 원장(한국고용연구원) 이준태 원장(한국언론진흥재단) 임준혁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황미순 원장(한국노동연구원)
16:30~17:50	국민의 소리와 국정 운영 방향	
폐회 17:50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1) 본 행사의 결과보고서는 부록을 참조

본 연구의 제2장(2022 글로벌 전망)과 제3장(2022 국내 전망)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며, 제4장(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및 정책 제언)에서 이러한 전망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으로 마무리한다.

2022 글로벌 전망



제1절

세계 경제·통상²⁾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든 국가는 국경을 봉쇄하였고 국내적으로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제하였다.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진행된 부유한 국가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가난한 국가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백신보급이 잘 이루어진 국가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여력을 가졌으나 그렇지 못한 국가는 여전히 봉쇄와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세계는 아직 코로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세계 경제, 그리고 각각의 개별 국가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본 절에서는 2022년의 세계 경제를 개관하고 국제 금융시장 및 상품시장, 주요국의 국가 경제에 대해 고찰한다. 세계 경제 전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그 내용은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서는 2021년 11월의 시점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2022년의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을 담고자 한다.

나. 목적

본 절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제는 세계 경제와 밀접히 연결된 글로벌 개방경제의 하나이다. 한국경제가 2022년에 어떠한 성장경로를 따라 전진할지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는 세계 경제가 어떠한 성장경로를 따를 것이며 이에 수반된 위험요인과 기회 요인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한 전망과

2)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정성춘(202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더불어 세계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국가들의 성장 전망, 경제정책, 위험 및 기회 요인 등에 대해 국별로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2022년 세계 경제전망 개관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 기관별 전망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코로나 19 관련 확진자 추이, 백신 보급 추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이 등을 정리하고 세계 경제성장의 키워드와 리스크 요인을 제시한다. 둘째는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에 대한 전망이다. 금리, 환율, 유가 동향은 한국경제에 중요한 국제경제변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결정되는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을 고찰한다. 셋째는 주요국 경제전망이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2022년의 성장 전망을 제시한다. 2022년 세계 경제에 대한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절의 목표이다.

2. 주요 내용

가. 2022년 세계 경제전망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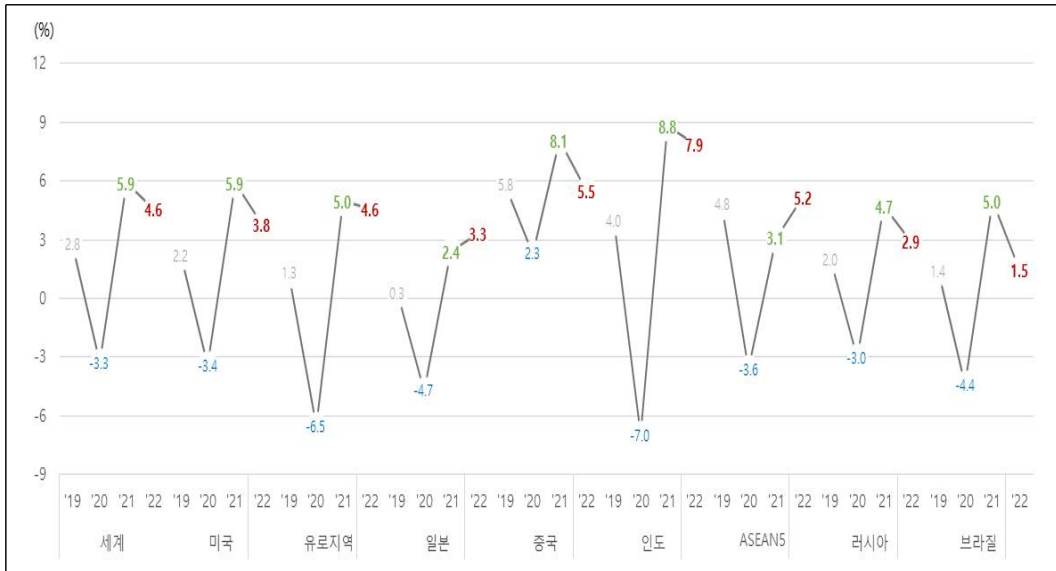
1)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11월 시점에서 발표한 세계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다.³⁾ 먼저 2021년 세계 경제는 5.9% 성장한 후 2022년에는 4.6% 성장하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국별로 2022년 성장률을 보면, 미국 3.8%, 유로 4.6%, 일본 3.3%, 중국 5.5%, 인도 7.9%, 아세안5 5.2%, 러시아 2.9%, 브라질 1.5%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2022년에도 지속되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 이유는 2022년 성장률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성장률보다 대부분 국가에서 더 높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비해 2022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경제가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인하여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대부분 국가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성장세가 급반등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본과 아세안 5 국가에서는 2022년에 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었다.

3) 세계경제전망은 2022년에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신흥국에도 백신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조화로운 통화정책 정상화로 급격한 국제자본이동이 억제되고 유가는 60달러대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에 크게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1]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11 시점)



출처: KIEP, 2022년 세계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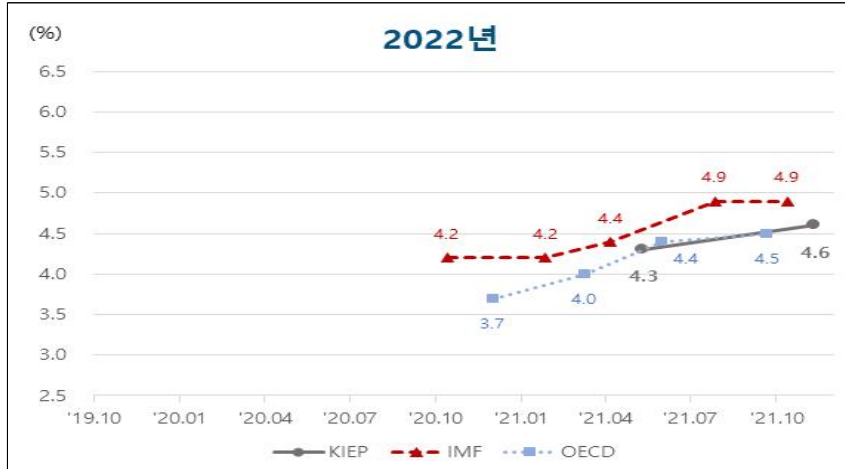
2)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2022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망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9~3.3% 사이에 있다. 국내기관인 한국은행과 KDI는 3.0%를 전망하였고 IMF는 3.3%로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OECD는 2.9%로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하였다. 다만 전망 시기에 따른 전망치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올수록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3) 코로나 백신의 보급 현황('21. 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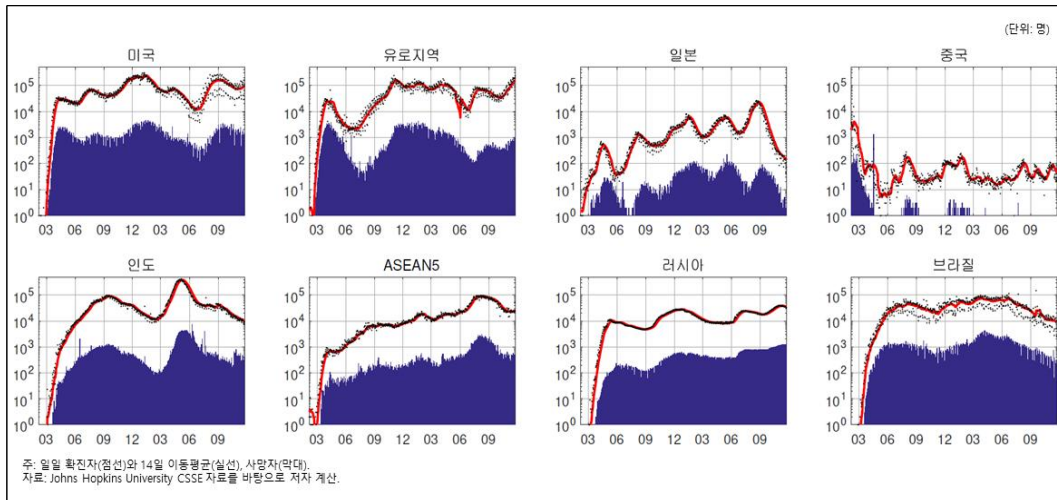
코로나19는 여전히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21. 11. 24, 시점).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여전히 일일 확진자 수의 현저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일본에서 일일 확진자 수의 감소가 나타났을 뿐이다.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주요 거대 신흥국에서는 매일 1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고 미국, 유로 지역은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림 2-2]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출처: 한국은행, KDI, IMF, OECD

[그림 2-3]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및 사망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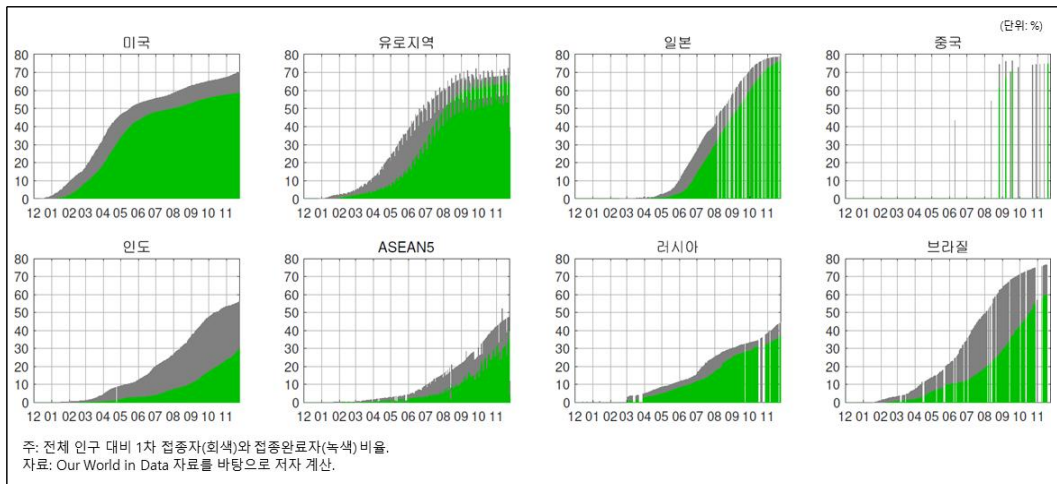


출처: Johns Hopkins University CSSE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코로나19 백신 보급률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선명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의 접종 완료자 비율은 2021년 11월 시점에 60%를 넘어서고 있지만 신흥국은 그 절반 수준인 30%대에 머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백신 보급률의 격차는 경제활동의 회복에서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이 점차 방역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지만 신흥국은 여전히 방역 규제를 완화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격차를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성장률이 러시아나 브라질 등 신흥국 성장률보

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경제 성장률은 점차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신 보급률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차이가 하나의 원인이다.

[그림 2-4] 백신접종률 추이



출처: Our World in Data 자료를 토대로 저자 계산

4) 세계경제성장의 키워드와 리스크 요인

이번에 제시하는 세계 경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글로벌 대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인류 생활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에 더해 각국은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경험을 보면 위기 이후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그 중심에 있다. 2022년은 이러한 전환이 가시화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크게 세 가지의 리스크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대전환 비용 부담에 필요한 정부의 예산 제약이다. 구조 개선을 위해 각국은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도 수년 간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미 집행된 재정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향후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위기 이후 정상화 시점이 가시화되면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기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급작스러운 정책 환경 변화에 경제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적응이 지연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미, 녹색 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이

중국, 유럽 등에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마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지만, 정책변화에 대한 적응 경로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풍선효과라고 말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새로운 정책과 규제에 대해 민간 부문의 우회 시도가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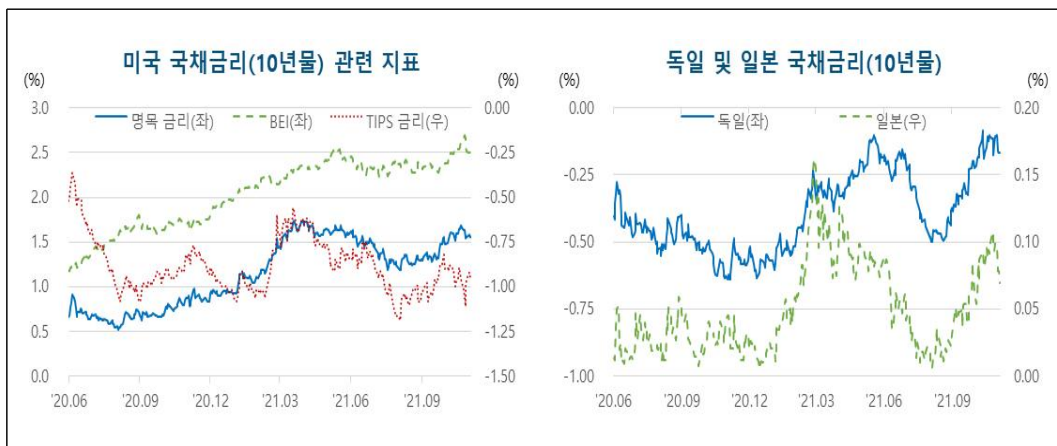
셋째, 국제공조의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대전환을 위한 자원 확보 문제는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한 나라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국제공조에 복귀하면서 올해 들어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남아 있다.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비중 갈등의 양상은 더욱 정교화되는 모습이다. 여전히 자국 우선주의의 불씨가 남아 있어 부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나. 국제금융 및 상품시장

1) 금리

주요국의 국채금리는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로 인하여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따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종전의 예상과 달리 지속적인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국채금리(10년물)는 최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2-5] 주요국 국채금리(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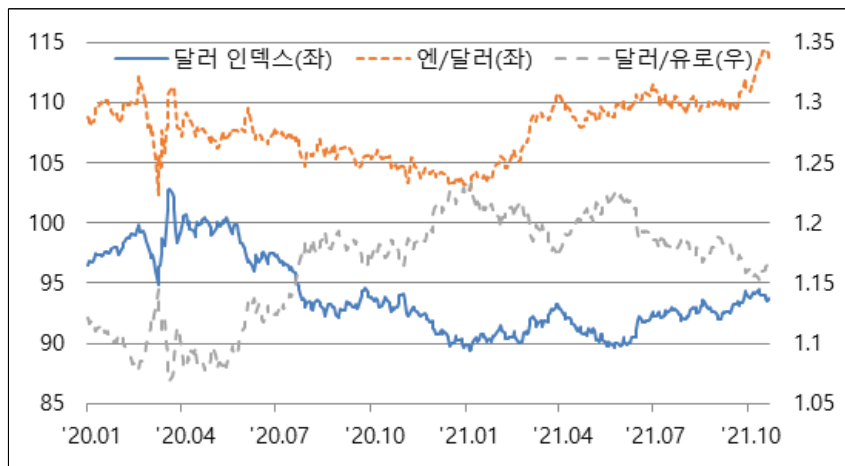


출처: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좌, 검색일:2021. 11. 4.), Bloomberg(우, 검색일: 2021. 11. 4.)

2) 환율

미국 통화정책의 차별화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의 강세가 전망된다.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유럽이나 일본의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선진국 간 통화정책 기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화에 대한 기대가 달러화 강세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정상화 조치는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신흥국 금융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림 2-6] 달러인덱스와 달러/유로 및 엔/달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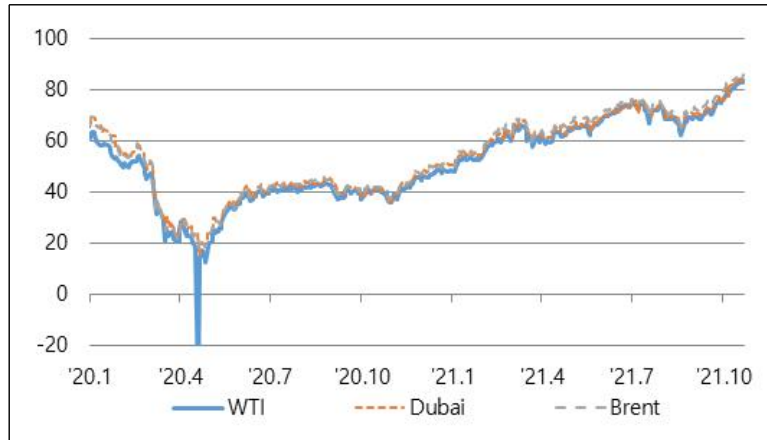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검색일: 2021. 11. 1)

3) 유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의 영향에 따른 공급제약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전망된다. 코로나 19의 영향뿐만 아니라 탈탄소화로의 전환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신규투자가 정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그림 2-7] 국제유가 추이



출처: Bloomberg(검색일: 2021. 10. 25)

다. 주요국 경제전망

1) 미국

미국경제는 2021년 하반기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일자리 복귀가 지연되면서 인력난에 당면하였다. 소매산업이 위축되었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한 의회 내의 다양한 이견으로 해당 투자계획의 실행을 통한 부양효과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가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미국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용회복 및 경기부양효과의 가시화 지연으로 미국경제는 2022년 3.8% 성장이 예상된다.

2) 유럽

유럽경제는 델타변이 확산으로 경기회복에 일부 지체가 발생하였으나 고용시장 회복과 민간의 소비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EU는 경제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지출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출은 기후 관련 투자 및 개혁, 디지털 전환 분야에 지출될 예정이며 이러한 대전환에 따른 투자증가와 민간소비 활성화로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일본

일본경제는 방역규제의 단계적 완화와 소비 관광 지원책 재개로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회복이 예상된다. 2021년 10월 워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Go To Travel' 캠페인을 통

한 소비촉진책이 재개되었다.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수익이 개선되었는데 향후 설비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디지털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T업종, ESG 등 신성장 산업에서 투자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일본경제는 3.3% 성장이 전망된다.

4) 중국

중국경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그 영향으로 2021년 하반기 성장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다. 중국정부는 반독점 규제, 사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도 불거져 나왔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진핑 정부가 제시하는 이른바 ‘공동부유’ 실현과 ‘중국식 사회주의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라 대외환경도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는 2022년 5.5%의 성장이 전망된다.

5) 기타 신흥국

인도는 백신접종인구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7.9% 성장이 예상되며 러시아는 민간소비 회복과 견조한 국제유가로 2.9% 성장이 전망된다. 다만 러시아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4%를 상회하면서 기준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점, 미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백신접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 브라질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공급부족이 있고 가뭄으로 전력요금과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였다. 브라질 경제는 2022년 1.5% 성장이 예상된다.

3. 정책적 시사점

가. 대전환 비용부담과 정부 예산제약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였다. 코로나 대응 관련 지출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체질을 형성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이러한 경제체질 변화의 두드러진 분야인데 각국 정부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투자가 도중에 좌초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2022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프라 예

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다. 신흥국은 재정여력의 약화로 선제적 투자를 할 여유가 적고 투자하더라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나. 녹색전환에 따른 민간 병목 및 지체 현상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탄소중립정책을 천명하고 나섰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녹색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촉발하고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경제에 필요한 희토류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의 가능성도 높다. 녹색전환의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다. 국제협력의 지체

글로벌한 이슈의 해결에는 국제협력이 긴요하나 이러한 국제협력이 원활히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백신격차는 그 단적인 예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대립과 반목은 백신 이외에도 매우 많다. 미중 갈등의 고조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국제협력을 지체시킬 것이다.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하다. 향후 국제협력의 지연으로 인하여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제2절

평화·안보⁴⁾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2021년 안보환경 변화의 핵심에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글로벌 패권경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은 이러한 양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코로나19의 발원지와 관련된 책임 논란을 벌이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 난습해졌으며,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는 자국 체제의 우월성을 뽐내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대응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리더십 경쟁을 벌였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미중 갈등의 이면에서 미래 국력의 성패를 내건 안보와 경제 분야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코로나 19 시대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창출된 비대면 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기술경쟁도 전개되었다.

나. 목적

본 절은 이렇게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맥락에서 본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를 기존의 전통 국가안보 경쟁의 시각을 넘어서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2020년 안보환경을 전망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중과 일러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한반도 주변 4국의 국가간 안보 갈등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안보, 기후변화와 환경에너지 안보, 난민-사회안보, 그리고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보, 공급망 안보와 경제안보, 더 나아가 우주공간의 기술안보 및 인공지능(AI) 탑재 무기의 군사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이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주변국가들이 전개하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경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작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4)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김상배(2021), 2022 안보환경 전망”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2. 주요 내용

가. 전통적 국가안보 전망을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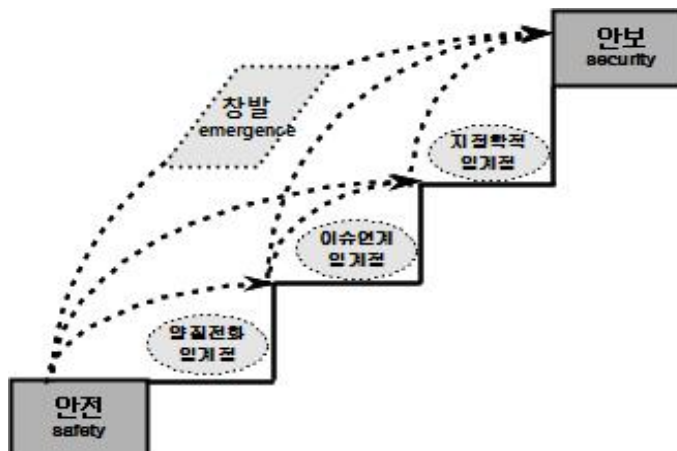
1) 전통 국가안보를 넘어서

안보(security)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여기서 비롯되는 불안(insecurity)을 해소하는 문제이다.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라고 물었을 경우, 또는 “미·중 세계대전이나? 코로나19 팬데믹이나?”라고 물었을 경우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따라서 전통 안보를 기준으로 안보를 묻던 접근을 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러한 연장선에서 안보 질서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는 핵무기와 같은 전통 안보의 문제가 여전히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미리 대비해야 하는 안보 위협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우리 삶에 위협으로 다가온 코로나19, 미세먼지, 해킹, 공급망 교란, 에너지 수급 등의 문제가 주는 안보위협은 무엇인가?

2)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이 글은 [그림 2-8]에서 요약한 바와 같은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시각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두고 미래 안보 질서를 전망하였다.

[그림 2-8] 신흥안보의 창발



출처: 저자작성

나. 코로나19와 환경에너지 및 사회안보

1) 코로나19와 신항안보

2020년 상반기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정치학에서 환경·보건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환경·보건 문제가 중요하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환경·보건 문제가 그야말로 국제정치학의 내재적 변수임을 각인시켰다. 그도 그럴 것이 100년 후나 닥칠 것 같던 지구온난화 문제와는 달리 단기간 내에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창발’(創發, emergence)한 코로나19 감염병은 바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를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체감되었기 때문이다(김상배, 2020).

여러 가지 점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세계정치의 ‘변환’(變換, transformation)을 야기한 획기적인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안보 연구 관점에서 볼 때,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 질서에서 탈냉전(Post-Cold War) 질서로의 변환을 겪었고,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근대 질서에서 탈근대(Post-modern) 질서로의 변환이 발생했다면, 2020년 코로나19 사태는 ‘인간 중심 질서’에서 ‘탈인간(Post-human) 질서’로 변환하는 시대극의 서막을 열지도 모른다.

최근 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국면전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역에서 백신으로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새로운 질서의 건설로 이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변이와 재확산, 공진화 등이 발생하면서 미래 안보 질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한편 탈(脫)코로나19의 기대와 넥스트 팬데믹의 우려도 교차한다. 2022년에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우려와 대비의 차원에서 신항안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2) 환경에너지 및 사회안보

코로나19 이외에도 기타 보건안보 위협에도 주목해야 한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바이러스 등의 연속선상에서 보는 신종 감염병의 위협도 남아 있다. ASF,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도 위협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X-이벤트(극단적 사건) 형태로 발생한다. 발생할 확률이 낮아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발생하면 붕괴와 격변을 야기한다(Casti, et al., 2011). 이는 정규분포 밖의 두터운 꼬리(fat tail)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환경·에너지 안보 문제도 우려된다. 화석연료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한 미세먼지 문제, 탄소중립의 부담과 에너지 문제는 원자력 안전 문제로 연결되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화, 강수 패턴의 변화, 홍수와 가뭄의 빈발 등도 제기된다. 또한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의 차원에서 본

코로나19와 사람의 이동 문제도 논란거리다. 난민·이민안보, 경제적 불평등, 사회양극화, 문화적 갈등 등도 상존하는 위험이다.

다. 사이버 안보와 기술 및 경제안보

1) 사이버 안보위협에 증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성된 비대면 환경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삶의 많은 영역이 사이버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겨냥한 범죄와 테러, 스파이 활동도 사이버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악용하는 사이버 공격들이 등장하고 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줌(ZOOM)과 같은 원격회의 소프트웨어는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기업 및 국가 기밀을 노출시켰고,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한 스미싱과 가짜뉴스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타국 백신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백신개발 정보를 빼내려는 사이버 첩보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임종인, 2020).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간 자리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급습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 행위자들이 연루된 사이버 공격 논란도 늘어났음은 물론이다. 2021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미국과 러·중 간의 사이버 갈등이 유난히 떠들썩해졌다. 결국 7월 미 바이든 대통령은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을 방문한 자리에서 러시아에 대해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7월 초 미국은 이라크 철군 이후 중국과 사이버전에 치중하겠다고 발표하며 사이버 갈등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사안임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사이버안보 이슈는 공급망 디커플링 논란, 첨단기술 관련 수출입통제,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 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굵직한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주요 어젠다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이면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증가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20년 하반기 사이버 공격과 가짜뉴스 등을 활용하여 미 대선을 방해하려는 러시아 배후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미 정가의 화두가 되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선거에 개입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지칭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2020년 12월 보안 솔루션 업체 솔라윈즈에 대한 해킹도 러시아 해킹조직인 ‘노벨리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러시아 해킹조직인 ‘다크사이드’는 2021년 5월 미국 최대 송유관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이어, 세계 최대 육류 공급업체 JBS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 7월 초 소프트웨어 업체 카세야가 받은 랜섬웨어 공격은 7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랜섬으로 요구받은 것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러시아 해킹조직 ‘레빌’의 소행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해킹이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양상이라면, 중국의 공격은 기술과 정보를 빼내는 산업스파이를 방불케 한다. 중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술과 정보 해킹에 집중하고 있는데,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길어드사이언스(렘데시비르 개발사) 등을 해킹하였다. 2021년 1월과 3월 중국의 해커조직인 ‘하프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메시지 플랫폼인 익스체인지 서버를 해킹했다. 2021년 4월 ‘APT5’라 부르는 중국 해커조직은 보안 솔루션 업체 펄스시큐어의 가상사설망(VPN)의 취약점을 이용해 해킹했다. 또한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했는데, 해커들이 열차 통제 시스템에까지는 접근하지 않아 피해가 적었지만,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이 뚫렸다는 취약성을 노출해서, 자칫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아찔한 사건이 터질 뻔했다. 2021년 초에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일명 ‘키메라’ 조직이 대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해킹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2020-21년에 걸쳐서 북한 배후 세력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월 북한은 뉴욕 금융기관을 해킹했는데, 이후 2020년 12월 미 법무부는 북한 경찰총국 소속 해커 3인을 미국 등 전세계 은행과 기업,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13억 달러 규모의 현금과 가상화폐를 절취 또는 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라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백신과 치료제는 물론 그 연구개발 성과물을 절취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 2021년 5-6월, 북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 북한이 한국의 극비 기술을 빼내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대우해양조선도 제3국으로 추정되는 해커로부터 침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 데이터 안보 논란

최근 데이터 이슈가 국제안보 분야의 새로운 외교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수집·처리·분석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 마케팅이나 공공정책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많은 사용자들의 경제활동의 동향과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사적 권력인 민간기업에 집중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구글(G), 아마존(A), 페이스북(F), 애플(A), 즉 GAFA로 대변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빅데이터 권력이 커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중국의 BAT 기업들, 즉 바이두(B), 알리바바(A), 텐센트(T)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중국은 서구 국가들보다 느슨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고 있다. 사생활 보호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에 더 적극적이다.

이들 미중 기업이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안보화에

서 시작되어 수출입규제 문제로 비화된 미중갈등의 불똥은 데이터 안보 분야로 옮겨붙고 있다. 최근 데이터가 국제안보의 어젠다로 부상한 데는 단순한 산업경쟁력의 이슈를 넘어서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문제로 데이터를 각인시킨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미국의 도청과 감시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고, 2015년을 전후하여 사이버 안보 분야의 미중갈등이 고조되었으며, 2018-19년에는 앞서 살펴본 화웨이 사태가 터졌다. 이러한 추세는 그대로 이어가서 데이터 안보와 관련하여 화웨이 다음으로 표적이 된 것은 민간 드론 시장을 석권한 중국 업체 DJI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17년부터 하이커비전, 다후아 등과 같은 CCTV업체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 2019년 말에는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앱인 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트댄스가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근거로 새로이 미국의 경제대상 목록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데이터만은 아니었다. 스몰 데이터 시대였다면 ‘속성론’의 차원에서 이해된 ‘안보 데이터’가 쟁점이였겠지만, 빅데이터 시대의 관건은 데이터가 안보문제로 쟁점화되는 과정, 즉 ‘데이터 안보화’의 문제였다.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개인정보나 집단보안의 문제에 불과한 데이터일지라도, 큰 규모의 수집과 처리 및 분석의 과정을 거치고 여타 비(非)안보 이슈들과 연계되는 와중에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숨어있던 ‘패턴’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다국적 기업들이 수집하는 비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데이터일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군사안보적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국 단위에서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의 논쟁이 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데이터 안보 문제가 군사 분야의 정보·데이터 안보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 공급망 안보와 경제안보

최근 신기술 국제안보의 대상으로 떠오른 대표적 사례는 5G 이동통신 장비이다. 미래 디지털 인프라인 5G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가 앞서가고 있다. 이러한 화웨이의 기술적 공세에 대해서 미국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제재를 가했다. 화웨이 제품에 심어진 백도어를 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데이터와 정보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화웨이 문제는 ‘실재하는 위협’으로 ‘안보화’되어 부각되었으며, 이러한 담론에 근거해서 대내외적으로 화웨이 제재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대해 화웨이와 중국 정부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심과 경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주관적으로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이를 통해 달리 얻고자 하는 속내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Gu et al., 2019; Johnson and Groll, 2019).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 제기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이 일이 외교적 현안으로 급부

상한 것은 2018년 초였다. 2018년 2월 CIA, FBI, NSA 등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일제히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2018년 12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첫째 딸인 명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되며 논란이 시작됐다. 2019년 5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화웨이와 68개 계열 기업을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화웨이에 주요 부품과 운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구글, 인텔, 퀄컴, 자이링스, 브로드컴 등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화웨이의 5G 경쟁 계획은 물론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영향력 확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조치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조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파장을 낳았다. 화웨이가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 공급차질에 따라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등이 막힌다면, 화웨이는 미국의 의도대로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이 반도체, 항공기술, 로봇기술의 자급화를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행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화의 시대 긴밀히 구축해 온 글로벌 공급망을 와해시키고 경제와 기술의 ‘신냉전’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Lim, 2019).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 문제는 반도체 산업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도체 원천기술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반도체를 대중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5G 통신장비 문제로 논란이 된 화웨이의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만 업체인 TSMC를 압박하고 중국 기업인 SMIC를 제재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기존의 대중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 내 생산 비중이 44%밖에 안 되는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리쇼어링(re-shoring)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의 반도체 기술혁신과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반도체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 확대에 맞섰다.

반도체와 함께 쟁점이 된 분야는 배터리, 전기차, 친환경 소재 등과 같은 이른바 그린테크(GreenTech)였다. 반도체와는 달리 배터리 분야는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여서 미중 갈등이 악화될 경우 미국의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은 한국, 일본, EU 등과 그린테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백신의 개발과 공급이 문제가 되면서 바이오·제약 산업의 공급망 취약성 문제도 쟁점으로 불거졌다. 미국은 의료장비와 의약품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료의약품 공급 지연이 발생하면서 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100일 공급망 검토’에 제약 산업을 포함시키기에 이르렀다.

4) 우주공간의 안보

최근 우주공간이 새로이 조명을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정보·데이터 환경을 배경으로 우주공간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이 계기이다. 아울러 인공위성 및 GPS 장치를 이용한 사이버·우주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Zhao and Jiang, 2019). 예를 들어, 위성을 활용한 정찰, GPS를 이용한 유도제어, 군 작전 수행 등 민간 및 군사 분야에서 우주자산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우주공간은 육·해·공·사이버 공간의 연속선상에서 나열되는 또 하나의 별개 공간이 아니라 전통적인 공간과 복합적으로 연동되면서 미래 인류공간을 입체화시키는 ‘확장된 신(新) 복합공간’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김상배 편, 2021b).

고도의 과학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과거 우주개발은 참여국의 숫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우주진입 초기에는 미국과 구소련 간의 양자 경쟁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진입으로 경쟁구도가 확장되었다. 이들 우주강국들은 우주공간에서 전쟁 수행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중국의 위성역량 증대는 미국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되었다(He, 2019). 또한 중국이 2019년 1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 ‘창어(嫦娥) 4호’를 착륙시키자, 미국은 우주군 창설을 공포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 우주 강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인도, 한국 등도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Drozhashchikh, 2018).

오늘날 우주 경쟁은 인공위성,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등 우주시스템 등의 연구개발 경쟁을 근간으로 한다. 우주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상업적 목적의 우주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역설적으로 우주공간과 관련된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주공간에서의 상업적 활동은 사실상 군사적 활동을 전제하거나 또는 수반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주산업 관련 민군겸용기술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모든 국가의 군과 정부는 상업적 우주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 모델’로부터 민간 업체들이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뉴 스페이스’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바탕에 깔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 주목을 받는 우주 관련 기술은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기간시설을 지원하고, 개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국가의 주요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위성항법시스템은 항법, 측지, 긴급구조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과 같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까지 그 활용 영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현대전이 인공위성의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우주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그 디지털 안보적 함의가 크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미국과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및 인도 등의 국가도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했거나 또는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펼치고 있다.

5) AI무기와 군사안보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기술발달은 첨단 군사기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인로봇,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3D 프린팅, 생명공학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신흥 및 기반 기술(EFT)을 적용하여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자율로봇 기술을 적용한 자율무기체계의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기술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이중용도이다. 기술의 융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개별 무기체계의 개발과 도입을 넘어서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전반의 구축,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 제조-서비스 융합 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장원준, 외, 2017). 또한 기술변화는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작전운용, 그리고 전쟁양식까지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커졌다(김상배 편, 2021a).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국들은 첨단기술을 개발하여 더 좋은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분야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3차 상쇄 전략’의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자율무기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도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구도에서 자율무기체계 경쟁에 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자율무기체계 경쟁은 미중이 벌이는 글로벌 패권경쟁과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자율무기체계의 기술혁신 경쟁은 단순한 군사력 경쟁을 넘어서는 미래전 수행의 기반이 되는 복합적인 사이버 권력 경쟁의 성격을 띤다. 냉전기 미소 핵군비 경쟁에서 보았듯이 자율무기체계 경쟁도 군비경쟁을 야기하고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Gill, 2019).

최근 미중 간에는 첨단 무기체계 관련 전략물자와 첨단 민군겸용기술의 수출통제도 관건이다. 전통적으로 첨단 군사기술 분야는 수출통제의 대상이었는데, 최근 미국은 미중경쟁의 맥락에서 이러한 수출통제의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2018년 8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수출통제개혁법’(ECRA)은 신흥기술의 최종 사용자 및 목적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보의 바탕에는 첨단기술의 수출통제가 기술경쟁력의 보호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 전개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법제 개혁의 행보는, 앞서 살펴본, 최근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했다.

라. 전통 국가안보와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

1) 미중 패권경쟁의 미래?

미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중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수년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미중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미중경쟁의 결과는 세력전이를 통해서 글로벌 권력구조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우세를 보이는 군사적 비대칭은 당분간 역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양국 간의 군사적 대립과 충돌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상대적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던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다소 소강기에 접어들어있던 양국 갈등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상호의존'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구조화되어 있어 쉽사리 파국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교착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미중 양국은 미래국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패권을 놓고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미중은 반도체와 5G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는 인공지능(AI), 사이버, 데이터, 우주 등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수출입통제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며, 장차 무역 분야의 갈등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당장 쟁점이 되는 미중 기술경쟁의 면모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술혁신의 국내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보호주의 담론이 득세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글로벌 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과 연계되어 해외 생산시설을 리쇼어링(reshoring)하는 기술민족주의적 행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패러다임의 부상은 미중 간에 초국적으로 구축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높였다. 최근 미중 플랫폼 경쟁의 관심거리는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데이터 플랫폼 분야의 경쟁이다. SNS 및 동영상 플랫폼, OTT 및 게임 플랫폼을 둘러싼 미중 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각 분야별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틱톡, 텐센트, 알리바바 등과 같은 미중 기업들이 주요 경쟁자들이다. 향후 뜨거운 쟁점은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분야에서 전개되는 플랫폼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최근에 나타나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이다. 여태까지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모방해 탄생했다면,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이 차세대 플랫폼을 주도할 가능성도 내보이고 있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향후 미중 기술경쟁은 코로나19 관련 과학연구와 기술개발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 그 밖의 바이오·제약·보건의료, 의료

장비, 헬스케어 기술개발을 둘러싼 양국 경쟁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사태의 발생은 바이오기술(BT) 패러다임 또는 '5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향한 양국의 경쟁을 앞당기는 효과를 낼 것이다. 감염병에 의한 죽음의 공포를 절박한 위협으로 각인시킨 코로나19의 발생은 여태까지 인류가 추구해온 기술발달의 경로를 좀 더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계와 생존, 그리고 생태를 내재적 변수로 설정하는 마인드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친환경 제품 등과 같은 이른바 그린 테크(GreenTech)가 강조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최근의 미중 기술경쟁이 국가안보를 내세운 지정학적 논리에 의해서 덧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화웨이 사태나 민군겸용기술 분야의 갈등은 기술과 안보가 만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들 사례를 과거 '고전지정학'의 시각으로만 보기에는 그 성격 자체가 새롭고 복잡하다. '비(非)지정학'의 공간인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경쟁과 협력도 벌어지고 있고, 이념과 규범 및 가치를 둘러싼 '비판지정학'의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분야의 기술경쟁은 대부분이 '탈(脫)지정학'의 공간으로서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 그야말로 최근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경쟁은 전통적인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서, 그 이면에서 미래 국력을 좌우할 기술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기술경쟁의 양상도 전통적인 자원권력 게임을 넘어서 좀 더 복잡한 '신흥권력' 게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부 분야 별로 경쟁과 갈등 및 협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좀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경쟁의 주체가 더 이상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양국의 거대 테크기업들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은 전통적인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라기보다는,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벌이는 일종의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발생할 글로벌 권력구조의 변환도 과거와 같은 '세력전이'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세력망 재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경쟁이 '단판의 복싱 게임'이 아니라 '올림픽 종합 게임'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2) 국제질서의 변환

코로나19 사태는 미중경쟁의 가속화가 초래할 미래 국제질서의 모습을 앞당겨 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미중 양국이 벌이는 체제경쟁의 양상을 부각시켰다. 미중 체제경쟁은 이전에도 무역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 성격을 변화시켰다. 자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경쟁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 즉 적응력(fitness)과 복원력(resilience)의 경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봉쇄 모델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및 회복의 전 과정에 걸친 거버넌스 역량이 위기해결 모델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 리더십의 판단과 결단력,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등도 쟁점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러한 차이점을 상대국에 대한 체제 우월성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활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국내체제 모델에 기반을 둔, 미중 양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기존의 국제기구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새로운 국제체제의 창설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국제협력의 어젠다를 주도할만한 국가의 부재 현상과 맞물리면서, 일종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이 우려되었다.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위기 이후 G20가 일종의 ‘제도적 혁신’을 이루어냈다면, 코로나19의 시대에도 그러한 제도적 혁신이 절실히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미중은 상호비방전의 형태로 ‘이야기 전쟁’(a war of narratives)을 벌이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음모론 수준의 이야기들이 미중 양국의 지도자들 입으로 비화되어 책임 전가성 발언과 조치들로 이어졌다.

미중은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는, ‘코로나 책임담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회복담론’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각기 동맹의 결속을 모색하는 진영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맹외교의 추진에 있어서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행보 앞에 동맹의 균열이 우려되었다. 글로벌 리더십의 장주기 이론에서 말하는, ‘탈정당화’(delegitimization)를 넘어서 ‘탈집중화’(decentralization)의 국면에 접어든 미국의 지도력에도 한계가 드러났다. 중국의 외교적 리더십이 보여준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라는 ‘중국 책임론’을 코로나19 해결사라는 ‘중국 공헌론’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중국 체제 내부의 경직성 문제뿐만 아니라 거칠게 수행된 중국의 외교공세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중국 모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설적 효과마저 창출했다.

어느 국가도 자국의 안전이나 이익을 보장할 만한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세계적 개방성의 후퇴와 폐쇄적 고립주의가 대두하는 양상이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등과 같은 보수주의적인 포퓰리즘의 확산을 가속화시켰고, 이러한 와중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와해와 다자주의의 퇴조가 점쳐지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개별국가 단위의 권력을 강화하고 민족주의의 재발흥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개방의 문제는 개방의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국제협력의 전망도 없지 않았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사라지면 다시 국가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협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팬데믹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또는 초국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2021년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강조하며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미중경쟁의 결과로 인해서 향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질서의 미래는 어떠할까?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민족주의적 고립주의의 경합 속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정치질서의 성격은 무엇일까?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는 국가·국민 정체성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새로이 구성될까?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정치질서가 다자주의의 약화와 국가주권의 강화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에서 요청될 국제협력과 정치질서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미래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연구해야 할 주제들인 동시에,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 도 진지하게 탐구해야 할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전망

코로나19와 미중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한국의 대전략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이분법적 발상을 넘어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사안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이해관계의 구도를 파악하고, 각 이슈마다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관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발휘할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라는 것이 적당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주문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외교원칙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대적 변환 코드에 맞추어 한미동맹을 포괄적이면서도 발전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과제를 안고 있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외연을 기후변화, 신기술, 동남아 개발, 우주 협력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권, 기후변화, 규칙 기반 국제질서 규범, 민주주의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지향형 외교에 한국이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다만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목표를 중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대중국 견제의 정책조율을 위해서 최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외교와 사이버 동맹의 네트워크, 특히 쿼드

안보협력체에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도 난제이다. 다만 최근 쿼드가 군사적 색채를 약화시키고 주요 신흥안보 분야의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협력체로서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도 그동안 쿼드 참여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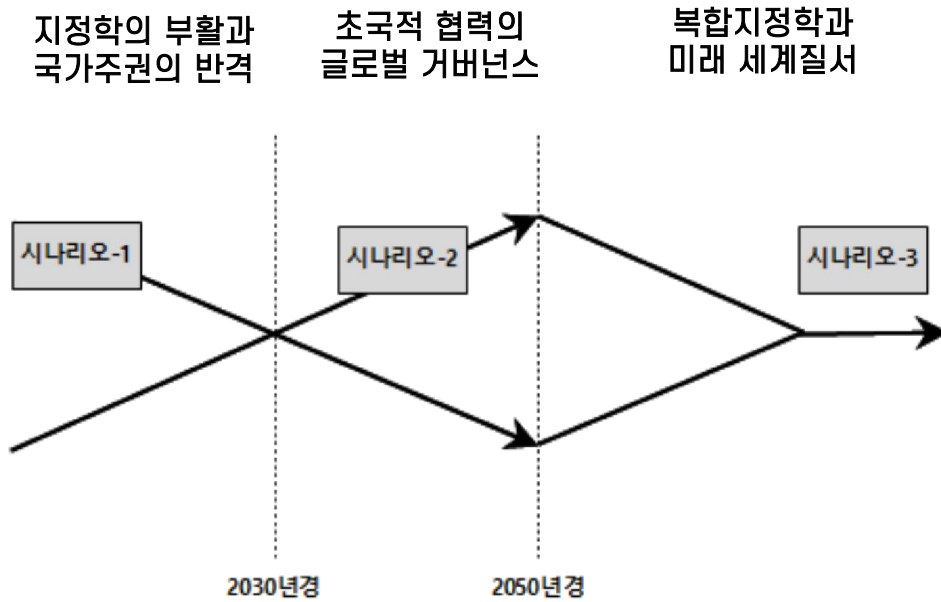
한국 대전략의 근간으로서 미국과의 네트워크 유지는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한중관계를 ‘적대적’이 아니라 ‘포용적’으로 품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한국이 쿼드, G11, 클린 네트워크 등과 같은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경우, 과거 사드 사태와는 달리 중국의 보복성 대응을 피할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경제보복 등 과거와 같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사안별로 적절한 중국 달래기 전략의 논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성격상 한국이 미국과의 가치동맹이나 글로벌 이슈 해결에 협력하는 동맹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중요하다. 중국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 지불이 불가피하다면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단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와 한국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 안보질서를 전망해 보면,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 시나리오가 압도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고 단기-중기-장기 시기 설정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상호 교차 또는 중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첫째, 약 15년 후, 대략 2030년경까지의 단기 전망으로는 <시나리오-1>이 당분간 상승세를 타면서 지속되지만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의 부활과 국가주권의 반격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시진핑, 푸틴 등의 정치지도자들의 임기가 끝나는 무렵을 전후해서는 이러한 경향은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약 30년 후, 대략 2045년경까지의 중기 전망으로는 <시나리오-2>가 꾸준히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은 <시나리오-1>의 경향과 상쇄되면서 그 전개 속도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화, 정보화, 민주화를 배경으로 한 초국적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및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는 21세기 신문명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시대사적 트렌드로서 형태와 내용의 부침은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끝으로, 이상의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30년 이후를 장기 전망하면, <시나리오-3>에서 제시한 복합지정학과 네트워크 국가 시나리오가 그 모습을 구체화해 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세계 안보질서의 미래



출처: 저자 작성

제3절

환경·에너지⁵⁾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지난해 8월 승인된 IPCC 6차평가주기 WG1보고서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1.5℃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밝히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기준 40%로 상향하였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 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우리나라의 상향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국가비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전 지구적 의제이면서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이기도 하며,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탄소중립’으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전의찬(2021), 기후위기사대 탄소중립 전망”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나. 목적

우리나라가 글라스고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약속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2018년 기준 4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4.2%씩 감소시켜야 한다. 1990년 이후 2018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평균 5.1%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온실가스의 상대적인 감축 속도는 9%가 넘는다. 유럽국가들은 30년 전에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달성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이제 정점 근처에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단시간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제조업의 비중이 30% 가까이 되는 상황이니, 문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과감한 목표’이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본 절에서는 IPCC의 최근 발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인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탄소중립’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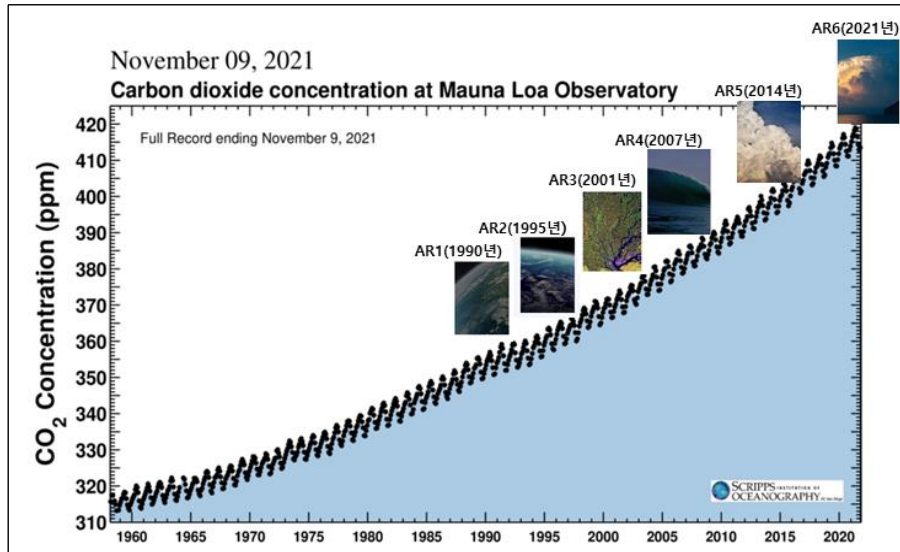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가. 기후위기시대의 도래

1) 전 지구적 기후변화 현상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50도 가까운 폭염으로 평소보다 3배가 넘는 700여 명의 주민이 돌연사하였다. 84년 만의 최악의 폭염 때문이다. 미국 북서부도 47℃의 역대 최고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폭염의 원인을 ‘열돔(Heat Dome)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 지방의 온도가 오르고 아열대 지방과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고기압이 특정 지역에 정체하게 되어 발생하는 기상 현상이다.

이와 같은 이상기후의 원인은 기후변화이다. 지구온난화 원인물질은 CO₂의 대기 중 농도는 산업화 이전 280ppm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지구 평균 대기 중 CO₂ 농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배 증가한 420ppm이다([그림 2-10] 참조). 현재 속도로 CO₂의 농도가 증가한다면, 과학자들이 임계농도로 평가하는 450ppm에 도달하는데 20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임계농도를 넘어서면, 그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기상이변이 빈번히 발생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림 2-10] 지구 대기 CO₂ 농도(미국 마우나 로아 관측소)

출처: Scripps 연구소(<https://keelingcurve.ucsd.edu/>)

2) IPCC 제6차 평가주기 WG1보고서

지난 8월 IPCC 제6차 평가주기 WG1보고서가 발표되었다. IPCC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 추세 및 원인규명(WG1보고서),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WG2보고서), 대응전략에 대한 과학적 정보(WG3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정부간 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하여 1.09℃ 상승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제1차 평가보고서(1990년)에서 밝힌 평균기온 상승 0.3~0.6℃(100년간)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다. 21세기 말(2081~2100년), 전 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995~2014)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는 시나리오(SSP5-8.5)의 경우 4.4℃(3.3~5.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해수면 높이는 1901~2010년 기간 동안 0.19 [0.17~0.21] m 상승하였는데, 21세기 말 전 지구 해수면 높이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 대비 +0.46~0.87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1세기 말,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 대비 북극 해빙은 19~76% 감소하며, 남극 해빙은 20~5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북극 지역의 높은 기온상승으로 북극의 해빙 면적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COP26은 신기후체제를 이끌어갈 구체적 방안 및 규칙들이 논의되어 매우 중요한 상황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이 이번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공식 발표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기금 마련,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SDM,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된 이후 8개 분야 16개 지침이 채택되었으나, 제6조(시장메카니즘)이 타결되지 않아서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COP26에서 제6조가 타결됨으로써, 신기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동하게 되었다.

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미래

1)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8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8월 25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8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24일 ‘탄소중립기본법’으로 공포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법에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되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提高,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본 법에서는 기본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확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난화 1.5℃ 제한 등을 밝히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내용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명시(시행령),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명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기후대응기금’(2조 원 규모)의 조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도입,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대책 명시, 범국민적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실천, 지역(지자체) 중심 탄소중립 대책 등이다.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시나리오를 확정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727백

만톤CO₂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436.6백만톤CO₂eq으로 40% 감축하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0)인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50년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을 완전히 폐기하고, 2018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을 2030년 30.2%, 2050년 최대 70.8%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전기가열로, 수소환원제철 등을 통하여 2018년 260.5백만톤CO₂eq의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222.6백만톤CO₂eq으로 감축하고, 2050년 51.1백만톤CO₂eq.(80% 감축)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해, 2018년 기준 98.1백만톤CO₂eq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61.0백만톤CO₂eq, 2050년 2.8백만톤CO₂eq으로 97%를 감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림을 통한 흡수로 2,500만톤, CCUS로 5500만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여, 완전한 탄소중립(순배출 0)을 달성할 계획이다.

〈표 2-1〉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3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구분	부문	'18 년	2030 년		2050 년	
			前 NDC	現 NDC	A 안	B 안
배출량		686.3	536.1	436.6	0	
분야별 배출	전환	269.6	192.7	149.9	0	20.7
	수송	98.1	70.6	61.0	2.8	9.2
	수소	-	-	7.6	0	9
	탈루	5.6	5.2	3.9	0.5	1.3
	산업	260.5	243.8	222.6	51.1	
	건물	52.1	41.9	35.0	6.2	
	농축수산	24.7	19.4	18.0	15.4	
	폐기물	17.1	11.0	9.1	4.4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25.3	
	CCUS	-	-10.3	-10.3	-55.1	-84.6
	직접 공기포집	-	-	-	-	-7.4
	국외감축	-	-16.2	-33.5	-	-

출처: 2050 탄소중립위원회

3. 정책적 시사점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기준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감축목표인 26.3%를 1.5배 상향한 것으로, 문대통령의 표현대로 ‘과감한 목표’이며 ‘도전적인 과제’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환류(Feed back)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글래스고 합의’로 국제탄소시장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NDC 이행 보조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 NDC에서 4.6%p에 해당하는 3,350만톤을 해외감축분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외감축 정책 정비, 국외감축 참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EU의 국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서명하였으며, 정상 연설을 통해 ‘남북 산림협력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산림은 남새밭 확대와 연료용 나무 채취 등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경험을 살려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의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장려하고,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중심에 ‘탄소중립’이 자리 잡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과 언론홍보 또한 매우 중요하며, 탄소포인트 제도와 같은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지구 전체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하에 산업계의 동참과 국민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4절

노동⁶⁾

1. 배경 및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던 대면 중심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전면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대면성을 줄이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재택근무제를 통해 일하게 되었고, 모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 회의와 같은 비대면적 상황이 보통이 되었다. 이는 분명 이전과 다른 업무 방식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 방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나 일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존속 가능한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과연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퇴장할지에 대한 의문은 확산되고 있다.

재택근무제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근무제도는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도입률은 2018년 4.7%, 2019년 4.5%이다. 그리고 실제 사업체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2019년 기준 1.5%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EU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사업체의 재택근무 도입률은 5.4%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다른 유연근무제도와 비교하여 보면 매우 낮은 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를 주로 활용한 노동력을 보면, 자영업자(Self-employed)들이 주를 이루며, 사업체에 종속된 근로자(Dependent employees)중에서는 약 11%정도만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지식 집약적(Knowledge-intensive) 산업에 속한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제를 활용하여 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9). 이는 재택근무제는 새로운 근무제도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제한적으로 경험한 제도라는 점에서 다수의 근로자와 사업체에게는 매우 새로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재택근무제와 같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확산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다. 첫째, 최근 디지털 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 곳곳에 확산되면서 이는 근무방식의 전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디지털 기술과 이와 관련한 기기들의 성능

6)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노세리(2021),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과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노세리 외(2021)의 “비대면 근무방식의 출현과 과제”를 요약·보완하였음

향상은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근무를 가능하게 한다. 기술은 모이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모여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의 빠른 발전은 대면을 전제하였던 업무방식에서 비대면성을 가정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의 전환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둘째, 혼밥, 혼술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이 근무방식의 전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인이 즐기는 문화는 2016년 후반부터 시작된 것으로,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는 코로나19를 만나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생활도, 소비도, 일도 '언택트'에 익숙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더 이상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는 단지 젊은 층이 즐기는 삶의 형태라고 이해하기에는 이슈를 축소화 하는 것으로, 결국 이들이 주요 노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조직문화도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하는 방식의 뉴노말이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재택근무제 확산은 가능한가, 왜 확산될 것인가, 어떠한 형태도 현장에 정착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일하는 방식의 '뉴노말'은 무엇인가

재택근무제 시행률을 산업별로 보면, 시행률이 높은 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행률이 높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과 같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은 공공기관이 많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외 시행률이 높게 나타나는 산업을 주목해야 하는데,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지식 집약적 산업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시행률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30~99인 사업체의 제도 시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72.3%), 300인 이상 사업체는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사업체들이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상할 수 있듯이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재택근무제 시행률이 낮으면,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제도 시행률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3] 산업별 재택근무제 시행률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림 2-14] 기업규모별 재택근무제 시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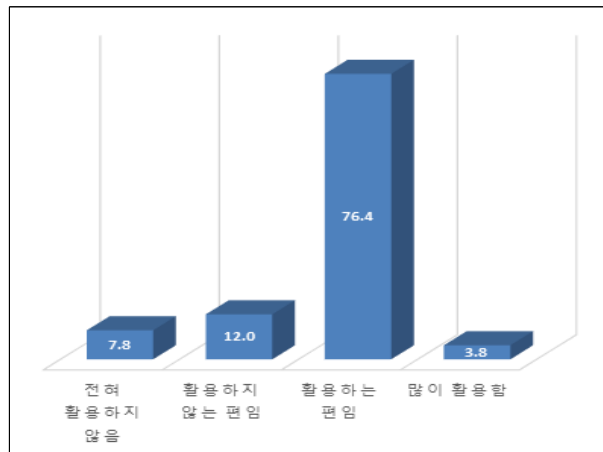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이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에게 조직구성원들이 재택근무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묻은 결과, 전체 중 92.7% 사업체들이 활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제도 활용비율을 살펴보면, 전체근로자의 20-40%가 활용한다는 응답(27.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0-20%가 활용한다는 응답이(24.2%)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의 경우 40-60%가 활용한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20-40%가 활용한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고, 40-60%가 활용한다는 응답이 2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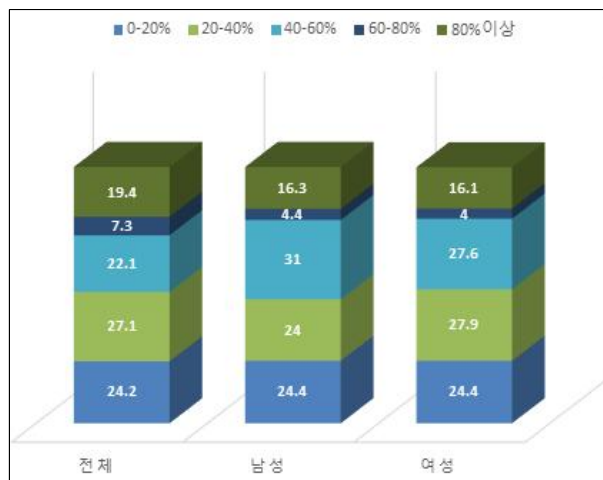
과는 제도는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들만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림 2-15] 재택근무제 시행 인식 정도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림 2-16] 재택근무제 시행 비율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근로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일주일을 기준으로 몇 번이나 재택근무를 하는지 묻은 결과, 일주일에 1번 재택근무를 한다는 응답이 57.0%으로 가장 많았고 2번이 34.4%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직급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림 2-17] 일주일 기준 재택 근무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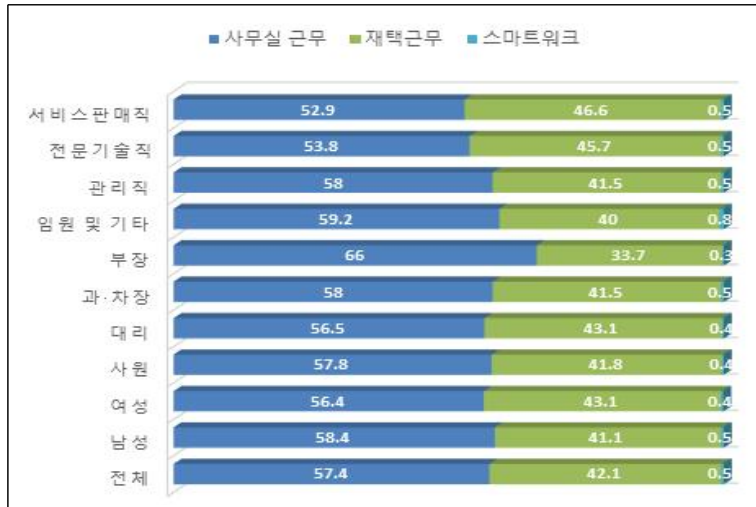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리고 일주일을 기준으로 사무실, 재택, 스마트워크 등의 근무방식 중 선호 형태를 조사한 결과, 100%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을 때 사무실 근무를 57.5%, 재택근무를 42.1%, 하고 싶으며 나머지 0.5%를 스마트워크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에게 스마트워크라는 제 3의 근무형태를 제시하여도 근로자들인 사무실 근무와 재택근무로 양분하여 사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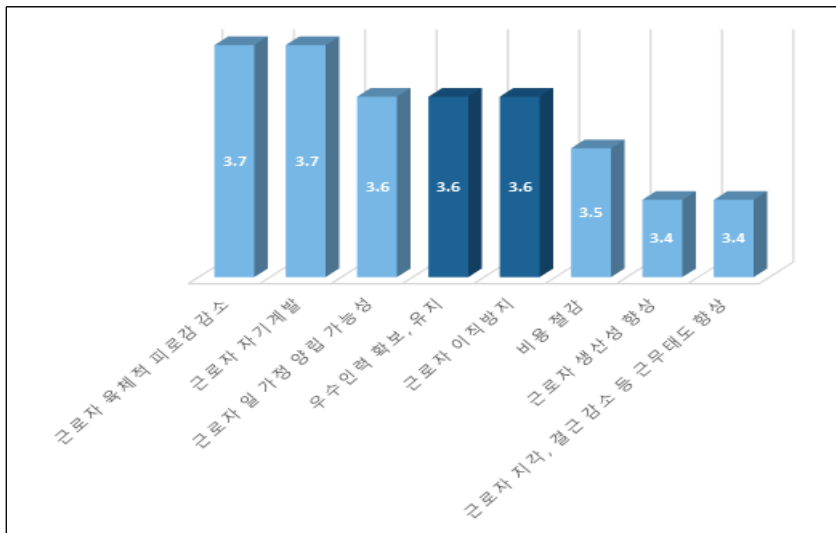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제의 주 효과는 근로자 웰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사업체 응답을 보면, 근로자 육체적 피로감 감소(3.7), 근로자 자기 계발(3.7) 등이 대표적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이며, 다음으로 근로자 일 가정 양립 가능성(3.6),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3.6), 근로자 이직 방지(3.6)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체들은 재택근무제가 소속 근로자 웰빙(well-being)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조직 내 인재 유인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18] 선호하는 근무방식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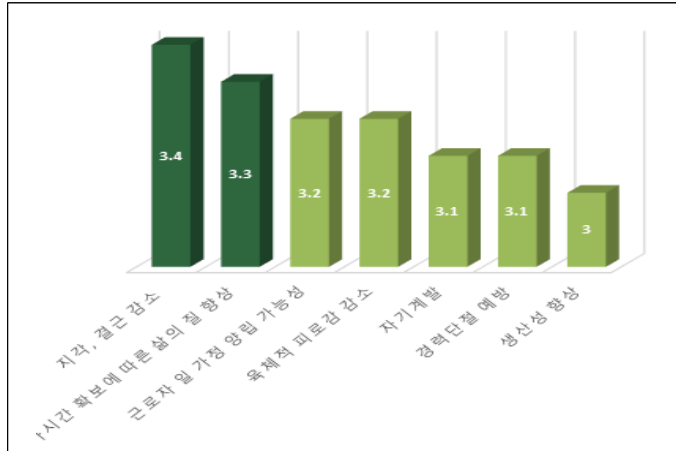
[그림 2-19] 사업체 재택근무제 평가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리고 근로자들에게도 재택근무가 어떠한 측면에 도움에 되는지 조사한 결과, 지각, 결근 감소(3.4)가 대표적인 긍정적인 효과이며, 이어서 여가시간 확보에 따른 삶의 질 향상(3.3), 일 가정 양립 가능성(3.2), 육체적 피로감 감소(3.2), 근로자 자기 계발(3.1) 등이 대표적인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등을 보고하였다.

[그림 2-20] 근로자 재택근무제 평가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생산성은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제도의 주요 효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2020년과 2021년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평가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도의 사업체 조사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는 45.5%인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 조사를 보면, 2020년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40.3%이고, 반면 생산적이지 않다는 평가는 32.5%인 것으로 나타나고, 2021년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32.3%이고 부정적인 응답이 29.4%인 것으로 나타난다. 즉, 우려와 달리 재택근무제에 대한 생산성 평가는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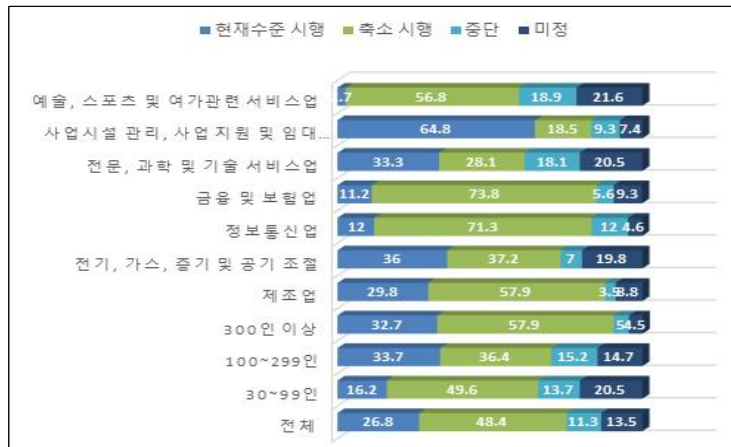
이어서 코로나 19가 종식되어도 재택근무제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체 중 사업체 중 48.4%가 계속시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보다는 축소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현재 수준으로 계획 시행(26.8%)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사업, 기업규모별로 차이는 없었다.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재택근무제를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1] 재택근무제 생산성 평가, 2020-2021년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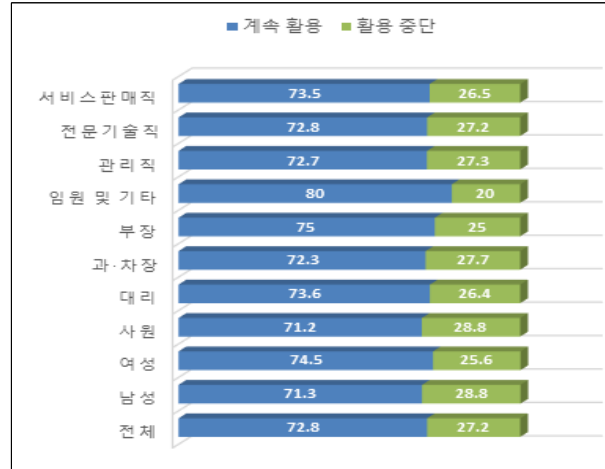
[그림 2-22]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계획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향후 코로나19가 종결되어도 재택근무를 계속 할 의향이 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 중 72.8%가 계속해서 제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2-23]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활용 의사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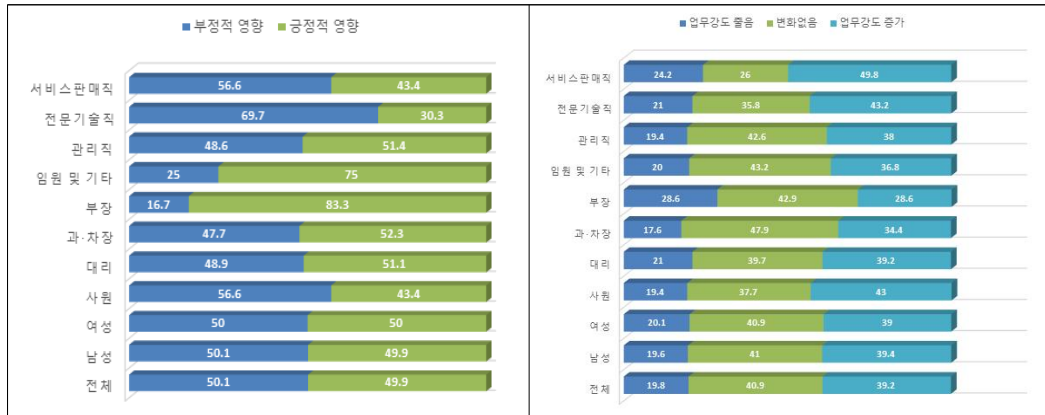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택근무제는 한시적 제도가 아닌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택근무제 활용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것, 그리고 사업체들 또한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계획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재택근무제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재택근무제의 확산을 예상하는 것은 제도가 가진 효과 때문인데, 재택근무제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결국 기업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재택근무제를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는 방식은 독립적이기보다는 사무실 근무와 결합하여 생산성 최적화를 추구하는 조합으로 존재할 가능성을 가진다. 이는 더 이상 한 공간에서 다 같이 같은 시간에 일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하는 공간과 시간을 근로자들이 선택하고 재량을 가지고 일하기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제가 있는가

재택근무제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우선 재택근무제의 시행에서 발견되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재택근무제가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와 가지는 관계를 보면, 긍정적이지 않은 않다.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증가를 인식하고, 업무강도 강도는 전체값을 보면 아니지만, 서비스판매직 전문기술직의 직종에서 그리고 사원과 같은 저 직급에서 업무강도 강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택근무로 인한 과노동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4] 재택근무제와 근로시간과 노동강도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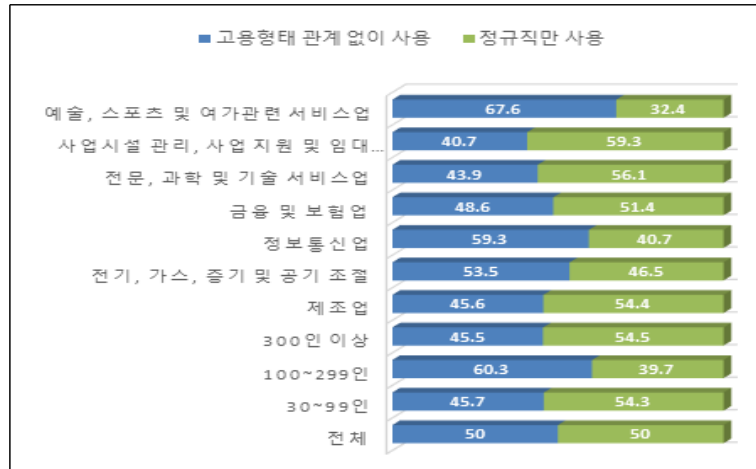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리고 사업체에서 재택근무제 사용과 고용형태가 관계있는지 묻은 결과, 제도는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업체가 50%이며, 나머지 사업체에서는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를 나누어 보면, 30~99인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정규직만 제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업종에서는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임대서비스업, 그리고 노조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정규직만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작된 재택근무제 활용 가능성이 고용형태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차별적 환경을 만드는 제도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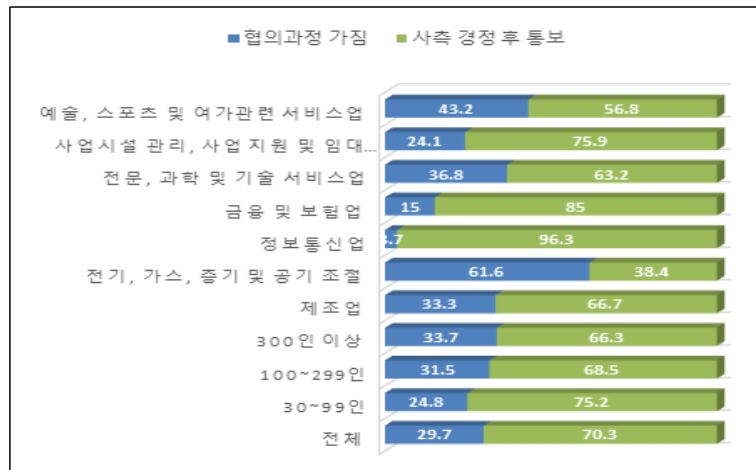
또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기 전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대상으로 협의과정을 가졌는지 묻은 결과, 이러한 과정이 없었으며 사측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가 70.3%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는 전체 경향과 유사하며, 업종의 경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협의 과정 가짐 61.6%)을 제외하고 전체 경향과 유사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준비 없이 시작한 제도이라는 점에서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로 인해 사측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5] 고용형태별 재택근무제 활용 가능성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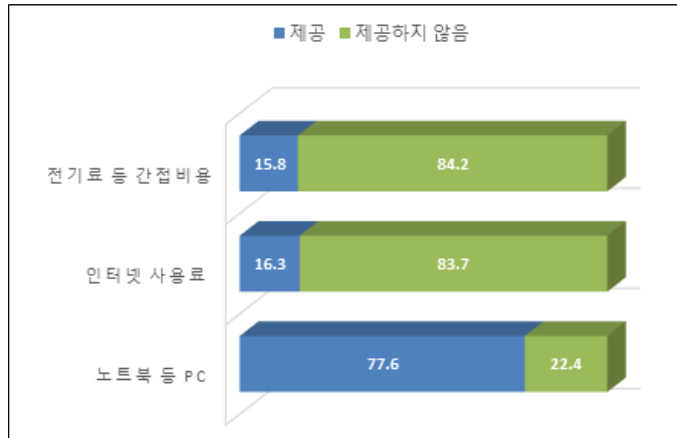
[그림 2-26] 재택근무제 시행에 대한 협의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리고 인프라는 재택근무를 통해 생산성을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인프라를 제공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업체 중 77.6%가 노트북 등 PC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드웨어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업체 중 16.3%가 인터넷 사용료를 제공하고, 15.8%가 전기료 등 간접비용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사업체 제공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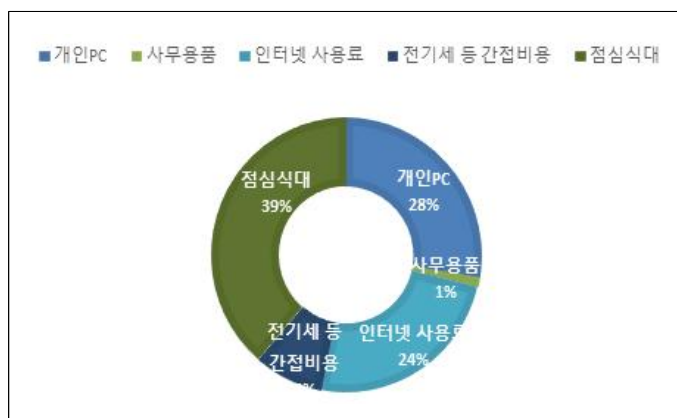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동시에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가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희망 인프라를 조사한 결과, 점심식대(55.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트북 등 개인 PC지급(38.0%), 인터넷 사용료(33.5%)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업체들은 재택근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각종 비용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자들은 식대, 인터넷 사용료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비용 처리가 이슈가 될 가능성 있다.

[그림 2-28] 근로자 희망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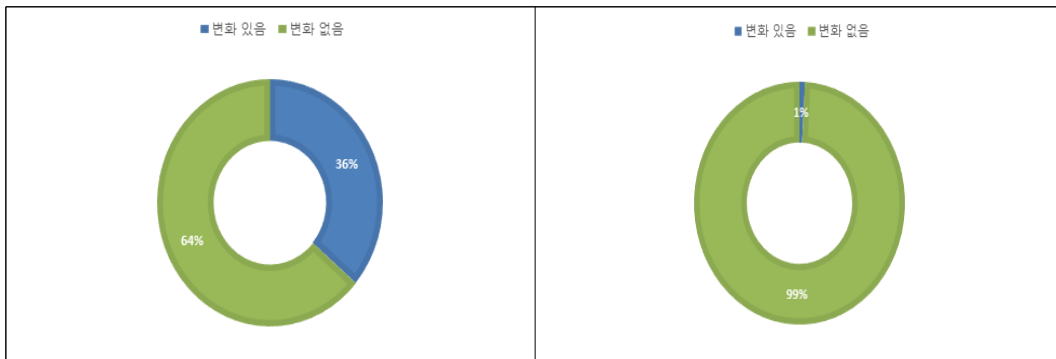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그리고 사업체에서 재택근무제 시행을 위하여 관리요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

았다.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교육훈련 방식의 변화를 주었는지 묻은 결과 사업체 중 63.7%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재택근무 시행으로 인하여 보상관리 방식이 변화하였는지 묻은 결과, 사업체 중 99.2%가 변화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별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는데, 첫째, 사업체들은 재택근무제가 이전과 다른 일하는 방식이지만 코로나19로 도입된 한시적인 제도일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관리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는 어떠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지 모를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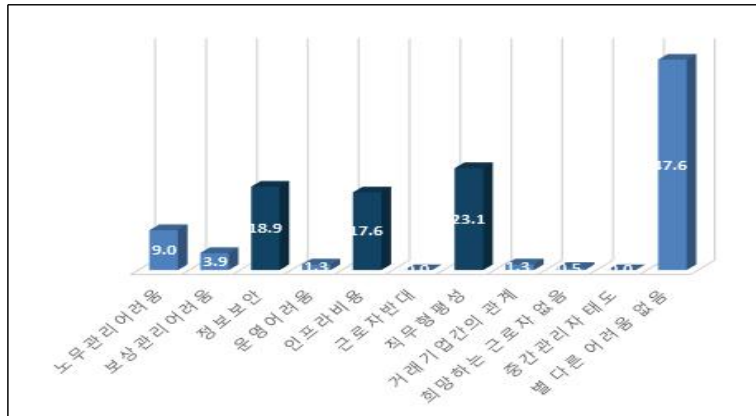
[그림 2-29] 재택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육훈련, 보상관리 체계 변화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마지막으로, 사업체와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보면,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렇다 이러한 응답을 제외하고 보면, 그 다음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움 직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업체가 23.1%이고, 정보보안 문제가 제기된다는 사업체가 18.9%,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이 문제로 제기된다는 사업체가 17.6%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 문제가 해소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재택근무를 통해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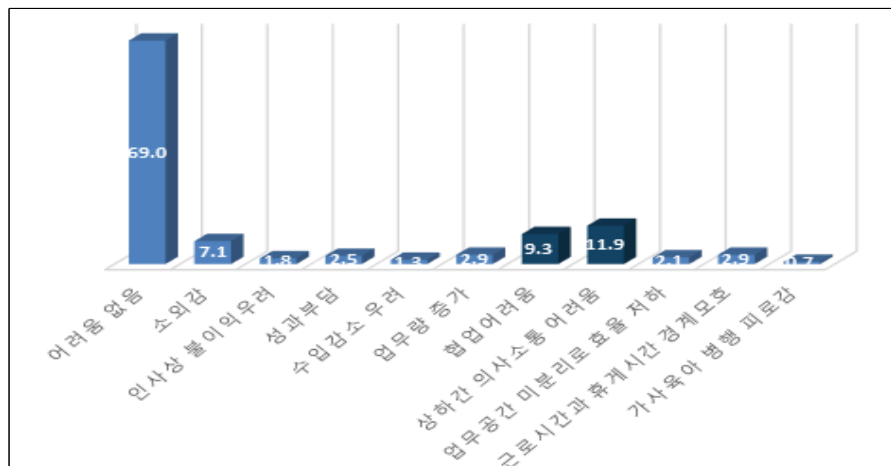
[그림 2-30] 사업체의 재택근무제 시행 어려움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또한 근로자들에게 현재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은 결과, 다수가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함(68.0%). 다음으로는 상하간 의사소통의 어려움(11.9%), 회의 및 협업을 통한 업무 수행 어려움(9.3%)를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택근무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의사소통 방식을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31] 근로자의 재택근무제 활용 어려움



출처: 노세리 외(2021), 비대면 시대 새로운 근무제도의 확산과 과제

3.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 19로 인하여 시작된 재택근무 경험은 혁신을 할 수 있는지 시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앞서 조사에서 파악 했듯이 변화에 대한 니즈는 존재하지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확인되지 않는다. 여전히 제도는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재택근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베네핏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택근무는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진짜 스마트하게 일하기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야 하며,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과노동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재택근무로 인한 직무소진의 우려가 존재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근무태만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재택근무가 일상화가 되면서 오히려 과노동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요 원인은 성과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여야 일하는 것이라는 생각, 근로시간과 같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불안하게 되었고, 결국 성과 증명의 압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감정노동자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는 앞으로 근로자의 소외감, 우울감 등 정서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특히, 대면 상황에 익숙한 세대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하는 방식 전환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 필요가 있다.

두번째,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조사결과 보면, 정규직 위주의 제도 시행, 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관리자 권한 확대, 그리고 사측의 일방적인 제도 운영 결정이 확인되는데 이는 결국 노사 간의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급작스런 변화이기는 하지만, 어느 제도 보다 제도 시행 취지, 제도 활용 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제도이다.

세번째, 인프라 관리가 필요하다. 인프라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인프라는 제도를 통해 생산성을 내는데 매우 기본적인 자원이다. 생각해볼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개인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어쩌면 일의 차이로 인한 문제보다는 인프라 제공을 인한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정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사업체들은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번째, 일을 조직하는 방식을 재검토 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로 인해 협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을 조직하는 방식을 바꾸면 협업 가능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흐름의 변화, 즉, 작업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의 변화

가 필요하다. 업무와 역할의 분담 등 일 배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디테일하게는 회의, 문서작업 방법을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잘 일어나려면 어느 때보다도 관리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집단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일의 지시와 동시에 생산적 피드백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인사관리 방향성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택근무제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량’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을 통해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과정관리와 통제 중심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조직관리를 멤버십이 아닌 직무 단위로 해야 하고 일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재량을 바탕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근로자 역량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과정 통제를 통해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닌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리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상황이 불안 등 부정적 무드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절

플랫폼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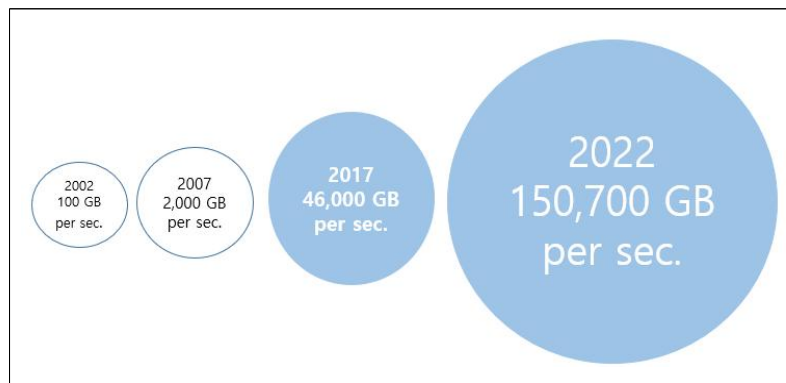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미·중 통상갈등으로 그동안 약화 일로에 있던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에 대한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한편,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팬데믹 극복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 측면에서 특히 변화가 크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이동을 가늠할 수 있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20년 동안 약 1,500배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그 속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점으로 점차 빨라지고 있다.

[그림 2-32]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data-flow proxy)



출처: UN (2019), Digital Economy Report 2019

7)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장영신(2021), 플랫폼 경제와 반독점법 규제”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신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산업 융복합으로 인한 사업영역이 파괴(Big blur)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나. 목적

본고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및 거래구조를 살펴보고, 온라인 플랫폼이 발생하고 있는 친경쟁적 및 반경쟁적 효과를 포함한 현황을 정리한다. 또한 경쟁법적 이슈를 검토하며 플랫폼 관련 해외 규제 및 입법례 현황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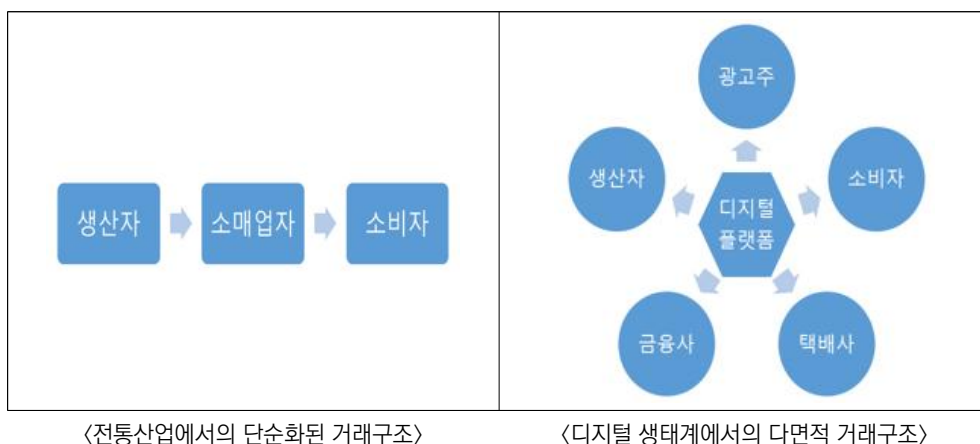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과 경쟁법적 이슈

1) 온라인 플랫폼의 특징 및 거래구조

디지털 경제에서 테크플랫폼 기업(GAFAM, FANG, etc.)이 상당한 규모의 경제, 직간접 네트워크 효과 및 데이터 소유를 통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전통산업에서는 단순화된 거래 구조를 보이지만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다면적인 거래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33] 전통산업과 디지털 생태계의 거래구조 비교



플랫폼의 3가지 특징은 경제성장, 소비자 선택, 생산성 제고 및 혁신으로 긍정적인 경쟁효과를 보인다. 낮은 한계비용으로 생산 측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멀티호밍을 통해 수요 측면의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빅테크 기업은 온라인 스토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선택폭을 확대할 뿐 아니라 생산자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폭을 확대하는 등 혁신적 가치기반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플랫폼의 3가지 특징은 반경쟁적 효과도 초래하고 있다. 범위의 경제가 발생하면서 지배력을 남용하고 독점화하고 있으며, 데이터도 플랫폼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격책정의 불투명성(price structure, not price level)을 통해 가격 형성 합리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숨겨진 수수료나 광고비용의 소비자 전가라는 부정적인 이슈가 등장하게 되었다.

플랫폼의 지배력 향상과 독점화로 인해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접근제한, 자사 상품 우대, 데이터 독점, 끼워팔기, 알고리즘 가격책정, 살인적 인수(killer acquisitions) 및 복합기업 합병(Conglomerate mergers) 등 플랫폼의 전략적 경쟁제한행위와 고착효과(lock-in) 및 쏠림 효과(tipping)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특징인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집중 현상 등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 각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반경쟁적 효과도 동시에 초래하였다.

〈표 2-2〉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2000년 이후)

구분	인수합병 거래건수	인수합병 거래액 (십억 달러)	주요 인수합병 대상 기업(거래일/거래액)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	224건	40.6	- 유튜브('06. 10. 9 / 16.5억 달러) - 더블클릭('07. 4. 13 / 31억 달러) - 모토로라 모빌리티('11. 8. 15 / 94억 달러) - 네스트랩('14. 1. 13 / 32억 달러) - 지오 플랫폼('20. 7. 15 / 39.9억 달러)
애플	90건	7.8	- 비츠일렉트로닉스('14. 5. 28 / 32억 달러) - 인텔 스마트폰 모뎀 사업부문('19. 7. 25 / 10억 달러)
페이스북	73건	24.7	- 인스타그램('12. 4. 9 / 10억 달러) - 왓츠앱('14. 2. 19 / 194.7억 달러) - 오쿨러스VR('14. 3. 25 / 21.8억 달러) - CTRL 랩스('19. 9. 23 / 10억 달러)
아마존	83건	20.3	- 트위치인터랙티브('14. 8. 25 / 10억 달러) - 홀푸즈('17. 6. 16 / 136억 달러)

출처: 장영신 외(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및 이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를 정리하면 ① 제품·서비스 융복합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VS. 문어발 확장 ② 동태적 경쟁 가능 vs. 고착효과(lock-in effects)로 인한 경쟁 어려움 ③ 멀티 호밍가능 vs. 쏠림현상(tipping) 등이 있다.

제품·서비스 융복합으로 인한 사업 다각화 VS. 문어발 확장을 살펴보면, 플랫폼 사업 특성상 특정 서비스(검색엔진, SNS 등)에서 시작된 사업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플랫폼이 가진 특성을 활용하여 인접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업 확장은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경쟁활동이라는 견해와 독과점화를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전통 제조업 등에 비해 시장 진입이 어렵지 않고, 후발주자 진입이나 선발주자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주장에 의거해 플랫폼은 동태적 경쟁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고착효과와 데이터 집중이 가능한 플랫폼 특성상 본질적으로 경쟁이 어렵다는 주장으로 나뉘고 있다.

플랫폼은 멀티호밍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가 초과이윤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으며 반면에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쏠림현상으로 인한 지배력이 확보되면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경쟁법적 평가와 함께 시장 획정, 소비자 후생, 시장지배력 등의 기준과 측정에 대한 이슈가 따르고 있다. 첫째,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s)이 플랫폼에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에서 소비자는 플랫폼 이용자(Platform users), 최종 사용자(end-user), 개발자(web-developer), 광고주(advertiser) 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플랫폼은 양면적이고 다면적인 시장이므로 시장 획정이 복잡하다. Zero (monetary) price인 시장으로 보이나 소비자의 관심에 따라 데이터의 대가가 정해진다. 가격 수준(level) 보다는 가격구조(structure)가 중요하고, 가격경쟁보다는 품질, 혁신 경쟁이 중요하다. 상품·서비스 융복합과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로 수요대체성 인식 변화 예측이 어렵다는 점도 시장 영역 파괴(Big Blur) 현상과 이어져 있다.

셋째,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력 측정이 어렵다. 망외부성, 데이터 집중 등 디지털 경제 특징들은 시장점유율(M/S)과 같은 기존 지표의 유효성을 저하시킨다. 또한 시장점유율이 높아도 멀티 호밍이 가능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도 소비자편의(default, framing) 또는 데이터 독점을 활용하여 소비자선택을 고착화(lock-in effects) 할 수 있으므로 시장지배력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대한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쟁제한적 효과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하고 있다. 쏠림현상 우려되어 과잉으로 집행하면 긍정오류(false positive)를 발생하여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반대로 혁신저해가 우려되어 과소 집행할 경우 부정오류(false negative)가 발생하여 규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

에 따라 파급력을 측정하고 예측할 때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 진행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나.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 반독점 규제 동향

1) 미국

2021년 6월에 발의한 미 하원의 반독점 패키지 법안 등은 2020년 10월에 발표한 “반독점 소위 조사 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2020년 10월부터 바이든 정부의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10월, 하원 법사위는 “반독점 소위 조사 보고서(디지털시장에서의 경쟁과 법집행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들인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사업모델 및 이들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2019.6월~2020.10월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동 보고서는 ①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을 위해 플랫폼의 차별적 취급과 자사 우대 행위 금지, 플랫폼 간 호환성 및 데이터 이동성 확보, 입증 책임 전환 등을 권고, ② 반독점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하여 법위반 유형을 서면법(제2조)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입법취지를 성문화하는 방안 등 제시 ③ 시장감시 강화를 위해 경쟁 당국의 인력 및 예산 증액 및 사적 집행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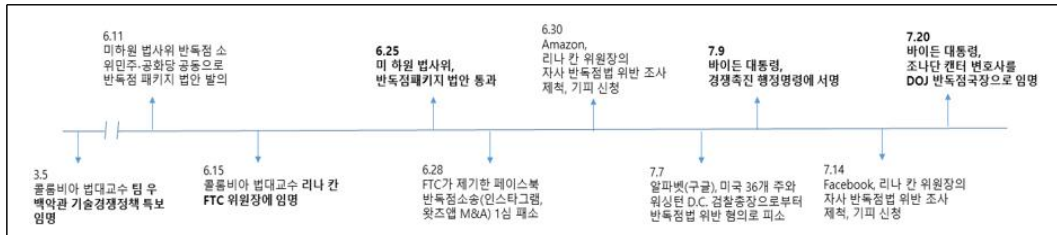
2021년 2월, 상원은 「경쟁법집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Competition and Antitrust Law Enforcement Reform Act)」을 상원 법사위 경쟁정책/반독점/소비자권리소위원회 의장인 에이미 클로부처(Amy Klobucher)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경쟁법 집행 강화를 위하여 ① 기업결합 금지요건 강화, 수요독점규제, 경쟁제한성 추정조항 등 기업결합 규제강화, ② 클레이튼법에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조문을 신설하고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있어서도 경쟁 제한성 추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배제행위규제 강화, ③ FTC에 경쟁 주창 실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시장분석과, 데이터센터를 두고 DOJ, FTC 예산 대폭 증액 등 경쟁 당국의 조직을 확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1년 6월, 하원에서 플랫폼의 반경쟁행위규제 패키지 법안 발의하였다. 미국의 혁신 및 선택을 위한 온라인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 경쟁 및 기회에 관한 법(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서비스 전환 촉진을 통한 호환성 및 경쟁 강화법(Augmenting Compatibility and Competition by Enabling Service Switching Act)이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다.

2021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피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동하였다.

[그림 2-34] 2021년 미국의 경쟁정책 관련 주요 진행경과



출처: 장영신 외(2021), “미국의 경쟁정책 및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 ”

2) 유럽연합(EU)

유럽은 2020년 7월부터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파생되는 P2B 거래관계의 불공정행위 규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시행하고 있다.

<표 2-3>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용대상	- EU 역내 설립된 온라인 중개 서비스/검색 엔진에 적용 - 거래대상 일부가 EU 역내 소비자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성 (fairness)	- 거래 전(全) 과정에 걸쳐 약관 제공, 약관 변경 시 사전통지(미준수 시 무효) - 플랫폼 서비스의 제한·중단시 사유 통지/계약 해지 시 30일 전 사전통지
정보제공의 투명성 (transparency)	- 검색 노출 배열순위의 주요 결정요소 - 자사 우대, 최고 우대조항(MFC) 등의 내역 및 근거 -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
원활한 분쟁해결 절차	- 내부 민원 처리시스템(internal complaint-handling system) - 조정(mediation)에 의한 신속·유연한 분쟁 해결 - 단체소송을 통한 불공정행위 금지 청구

2020년 12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안을 발표하였다. EU 집행위는 그 동안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2017~2019년 기간 중 구글 등 빅테크기업들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적발하여 총 82.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사후적인 경쟁법집행의 속성상 위법성 해소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게이트키퍼)을 지정하여 자사우대행위 금지, 데이

터 이동성, 호환성 보장 등의 의무(DMA)와 플랫폼 사업자의 판매자 관리 및 불법 콘텐츠 관리 의무(DSA)를 부과하는 사전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게이트키퍼 플랫폼의 경쟁제한 및 불공정행위 규율을 위한 사전규제에 해당하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Regulation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을 2020년 12월 15일에 발표하고, 2021년 11월 23일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역내시장소비자위원회(IMCO: Committee on 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수정의결된 바 있다.

2021년 11월 25일, EU 경쟁력이사회(competitiveness council)에서 일반합의(general approach) 투표를 완료하였고, 향후 유럽의회, EU 이사회, EU 집행위의 3자 협의(trilogies)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여 내년 11월까지 유럽의회, EU 이사회 승인을 마친 후 2023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3) 일본·중국·한국

일본은 2021년 2월, 「디지털플랫폼 거래 투명화 법」을 시행하였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 조건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하고 별도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은 없으며, 경제산업성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확인 시 일본 경쟁 당국인 JFTC에 조치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법 (2019)」 및 「플랫폼 분야 반독점 지침 (2021.2월 시행)」을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합리한 제한, 불공정한 조건 및 비용 부과 등 불공정행위 금지하고 있으며, 「플랫폼 분야 반독점 지침」은 담합 금지, 입점업체 차별대우 금지, 끼워팔기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 동향을 고려할 때,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시 집행의 외부성, 중복규제 문제 해소, 입법적 규율방식과 내용, 산업정책적 측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평가

주요는 테크 대기업들의 지배력과 승자독식 구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기존의 경쟁법 체계로는 이들 테크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미국, EU 등 각국 정부는 새로운 경쟁법 패러다임의 도입을 경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을 위한 경쟁 당국 중심의 규율 강화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나 그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비교형량이 쉽지 않아 규제 도입에 있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현재의 경쟁법 집행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시 고려사항

해외 주요국의 플랫폼 반독점 규제 동향을 고려할 때,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 시 집행의 외부성, 중복규제 문제 해소, 입법적 규율방식과 내용, 산업 정책적 측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별 규제 도입 및 집행의 외부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규제 경쟁으로 인한 과잉규제 도입 효과(Strictest Regimes Win)와 과소규제(Underregulation)로 인한 무임승차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선제적 규제를 도입할지, 다른 국가의 입법 동향과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규제 도입 추진할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입법과정에서의 중복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 경쟁(regulation race)은 지양해야 한다.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경쟁촉진'과 '혁신'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규제 권한의 합리적 조정과 배분이 필요하다. 예시로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 촉진 행정명령은 백안관 내 범정부적 부처들이 참여하는 경쟁위원회설립을 통해 조정되고 있다.

셋째,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규제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규율방식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멀티호밍과 호환성, 개방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되, 특정한 사업모델 자체를 사전 금지하는 획일적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체법적 규제에 앞서 절차법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규제도입으로 인한 경쟁 촉진 효과가 혁신 저해 효과보다 크다는 확신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정책적 측면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U와 달리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기축 플랫폼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뉴딜과 같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2022 국내 전망



제1절

거시경제·산업⁸⁾

1. 배경 및 목적

미·중 분쟁 장기화, 코로나19 불확실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및 첨단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여정이 본격화되면서 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제품 수요가 창출되고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공급망 관리, 제품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 역시 강해지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2022년 주요 산업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13대 주력산업의 2022년에 예상되는 대내외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2022년 주요 산업의 부문별(생산·내수·수출·수입) 전망을 통해 산업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2022년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1) 대외 여건 변화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세계수요는 일정 부분 회복되나, 미·중 분쟁 장기화,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경기 둔화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세계 주력산업 수요는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일반기계, 철강

8)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박상수(2021), 2022년 산업전망”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등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기반한 인프라 및 SOC 투자 확대로 수요산업 성장이 전망되지만, 동남아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경기 위축 등은 수요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품 수요는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방호·위생용품 관련 석유화학 중간재, 섬유, 바이오헬스, 비대면 전환 관련 정보통신기기(5G폰, PC, SSD 등), 반도체 등의 세계 수요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정책으로 자동차(전기동력차), 조선(친환경선박), 이차전지(전기차 보급 확대) 등 친환경 관련 제품군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가전은 코로나19 특수 교체수요 소진,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노트북, 테블릿용 OLED 확산 지연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22년 국내 주력산업의 주요 수출국 수요는 미국, 유럽, 베트남 등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시장 대부분에서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대중국 수출은 중국 경기 위축으로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일반기계,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정보통신기기 등의 대미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베트남 수출은 섬유, 일반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5~10%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주요 수출시장인 중국은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일반기계, 철강, 정유, 가전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의 경우 코로나19 특수 종료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제품가격 상승으로 대부분 권역으로의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만,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IT제품 생산기지인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글로벌 경쟁 여건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중국과의 기술 및 제품 경쟁이 2022년 우리의 글로벌 경쟁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기조 강화 역시 우리의 경쟁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기술력과 제품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미·중 무역, 기술 분쟁과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는 우리나라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섬유,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전용 플랫폼 적용을 통해 상품성 및 효율성이 향상된 국내 전기차,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친환경 저탄소연료추진선박(LNG, LPG 등), 플래그십 IT 제품 및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은 세계 수요의 회복과 함께 해외 현지 공장의 생산능력 확충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권역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멕시코 등 북미지역과 유럽, 아시아 등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공장 생

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는 코로나19 영향이 축소되고 반도체 수급 차질 문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베트남, 인도 등 해외공장의 가동률이 정상화되어 현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차전지 해외생산은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2) 국내 여건 변화

내수 여건은 소비 촉진 정책에 의해 올해 교체수요가 실현되었던 자동차, 가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산업이 수요산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년 내수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는 내수 여건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산업에서는 부품과 원자재 공급망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전반적인 공급능력의 위축 가능성이 우려된다.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균형 지속에 따른 공급망 불안, 외자 업체의 생산축소 등이 공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보통신기기, 가전은 해외 생산 확대와 반도체 공급부족 여파로 국내 공급능력은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차전지 역시 원료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원자재 수출량 제한 등 공급차질은 국내 공급능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유와 석유화학은 생산설비 신증설 투자가 대부분 완료되어 공급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전방산업의 공급망 불확실성 증대가 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간접적인 영향 역시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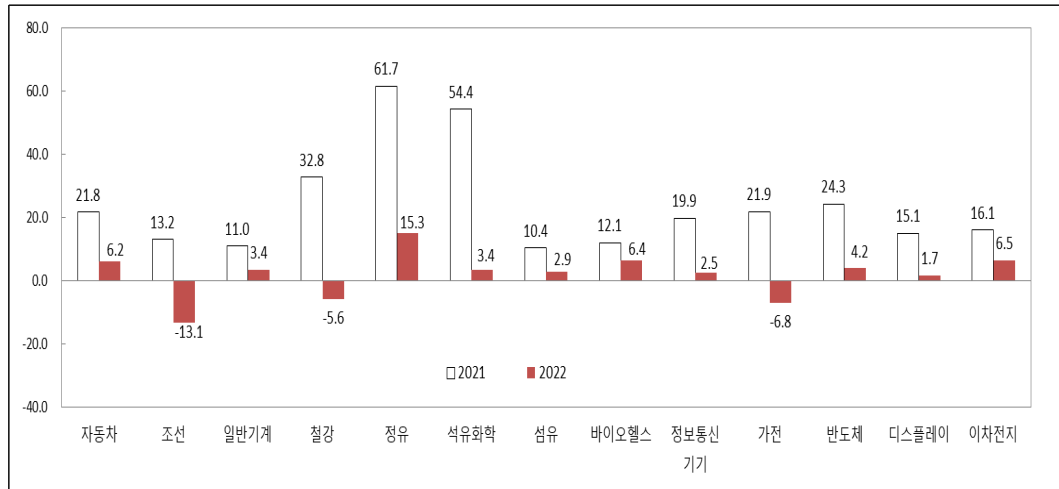
나. 2022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1) 수출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세계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폭은 둔화하여 전년(25.6%)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기계산업군 전체적으로는 2.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증대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하여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IT산업군 수출은 가전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3.3%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22.1%)에 비하면 증가세는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2) 내수

2022년 13대 주력산업 내수는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세를 유지겠지만, 성장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에 내수 증가세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내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내수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2021년 내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군 내수는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수요 증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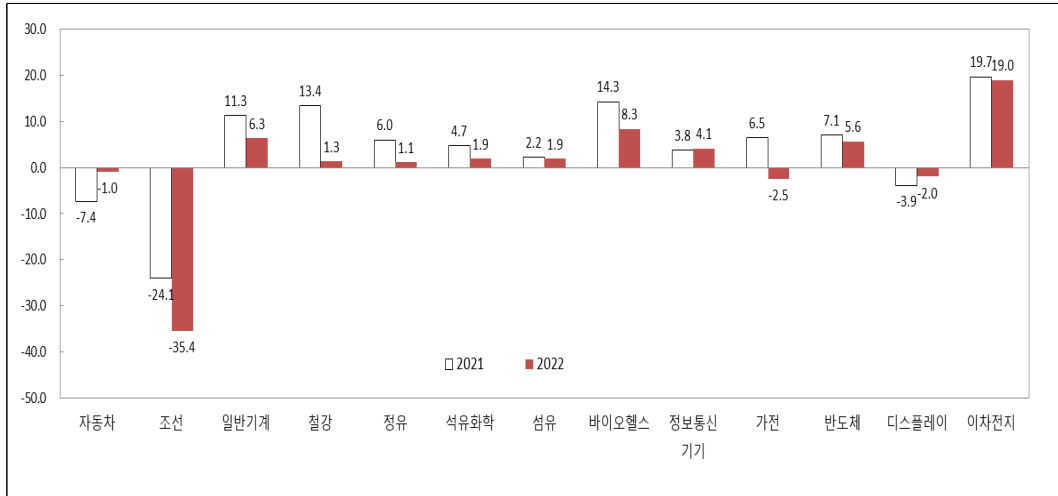
3) 수입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가 하락 및 전년 큰 폭의 수입증가(22.1%)에 따른 기저효과로 2.8%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조선은 해외 인도량 및 기자재 수입이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입이 늘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산업군 수입은 수입단가 조정과 전년 수입액 급증(39.7%)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군에서는 가전과 디스플레이 수입이

감소하지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산업군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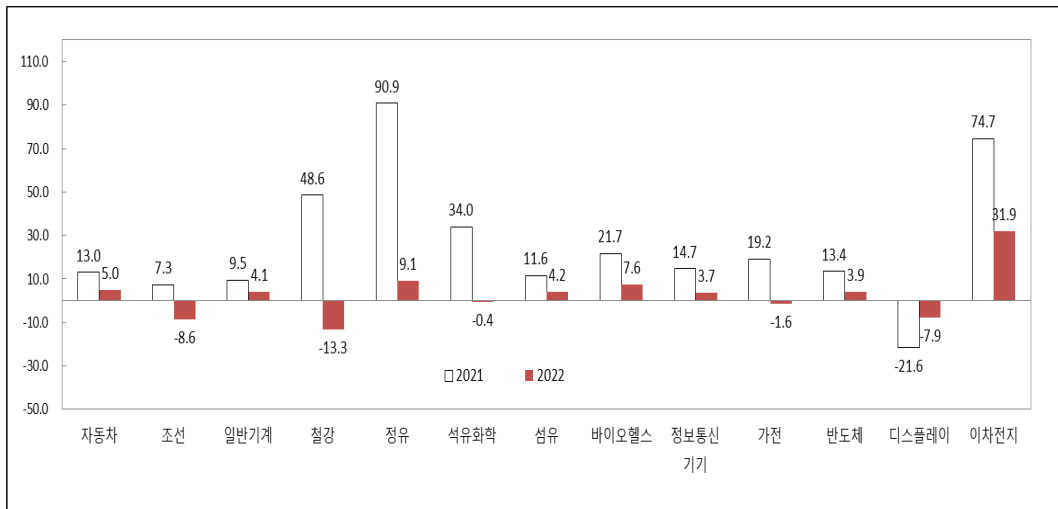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그림 3-3]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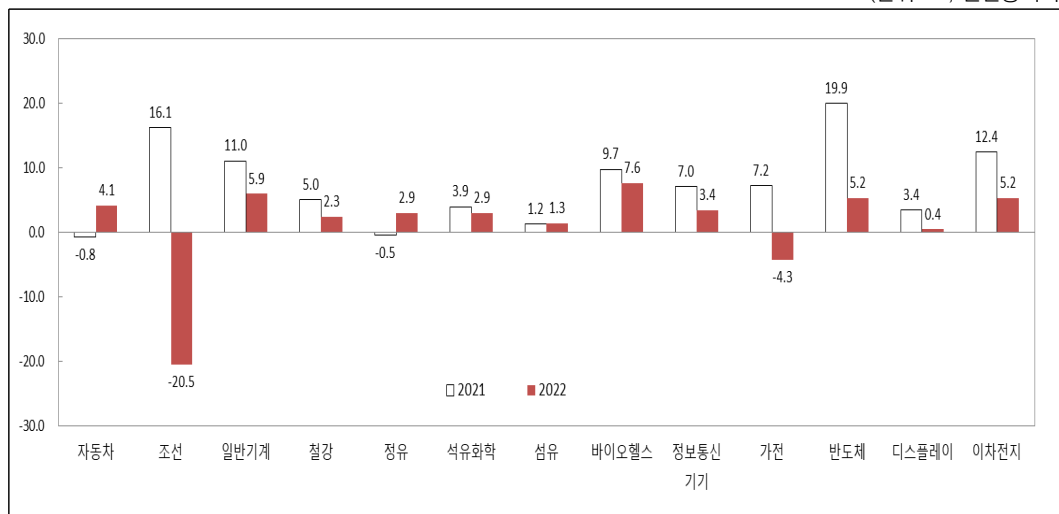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4) 생산

2022년 13대 주력산업 생산은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선 생산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생산은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산업군에서는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지만,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 2022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가율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3. 정책적 시사점

가.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20.10)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면서 친환경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과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대응이 요구된다.

〈표 3-1〉 산업별 환경규제 및 탄소중립 대응방안

	대응방안
자동차	- 수소전기 상용차용 대용량 충전소 구축 및 연료 보조금 신설 - 부품국산화율을 전기동력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적용 고려 - 전기차 시장 초기 보급확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A/S 정비공장 구축 의무화 -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 저리 특별 금융, 신용보증 확대
조선	- 친환경(LNG·LPG·메탄올)선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국제 표준 주도
일반기계	- 일반기계산업 맞춤형 ESG 강화전략 마련 - 오픈플랫폼을 통한 산업공정 에너지전환 및 고효율화 계획 정보 공유
철강	- 생산공정의 디지털 전환 확대 - 에너지효율기술 지속 발굴 -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 개발 및 실증 기반 마련
정유	-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술인 CCS(Carbon Capture & Storage) 및 e퓨얼 등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한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 기술개발 지원
석유화학	-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조달 부문 사용 권고 및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섬유	-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제품 생산 기반 및 관련 생태계 구축 지원
이차전지	- 대체소재 개발 및 국내 소재기업의 친환경제품 개발 지원 - 핵심 다배출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배출현황 및 에너지전환, 에너지효율 등 전방위적인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미·중 무역·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품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여 원료·소재의 대중 의존도 경감, 수출입선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 공급망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3-2〉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방안

	대응방안
정보통신기기	- 미·중 기술분쟁, 미국의 공급망 조사, 주요국의 보호무역 및 자국중심 경향에 예의주시하고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 - 기업들의 글로벌 온라인 유통 및 마케팅 강화, 수출입선 다변화 및 시장개척을 지원
반도체	-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
이차전지	- 국내 전자산업의 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원자재 부문에 있어서 특정국 의존도 개선이 필요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다.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제품 수요가 창출되고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공급망 관리, 제품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유망 기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요구된다.

〈표 3-3〉 산업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대응방안
자동차	-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 공급망 내재화 연계나 전략 품목 공급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필요 -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내재화 지원
철강	- 유망 수요 대응을 통한 산업 구조·제품 구조 고도화 필요
정유	- 정제설비 고도화 - 석유화학복합시설 투자 확대 - 정유·석유화학 통합설비 개발 및 도입 추진
섬유	- 섬유산업 생산공정 및 밸류체인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 관련 고기능성 섬유 개발 지원
바이오헬스	- 바이오헬스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연계 강화 - '기초·원천 단계 혁신적 R&D'에 대한 투자 확대
정보통신기기	-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확보 및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인프라(5G망, 데이터 활용 기반 등) 구축 지원
가전	- '스마트홈'으로 대표되는 품목구조 변화와 서비스 융합의 확산을 촉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
디스플레이	- OLE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저변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출처: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2021)

제2절

보건·복지⁹⁾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20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지난 1990년 이후 대부분 제도를 구비했으나, 상병수당만은 도입 시기가 미뤄졌다. 서구에서 상병수당이 최초의 사회보험 모델로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다소 뒤늦은 결정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복지국가라는 독특한 오명을 유지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은 한국 복지국가의 ‘마지막 미싱 피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클 것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은 노동 문화에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문화적 변수와 상병수당 부재라는 제도적 변수가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한국에서의 노동 문화 및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상병수당 본 제도의 모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5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첫해에는 6개 시·군·구에 예산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상병수당이 협소한 대상자, 낮은 급여 수준, 짧은 급여 기간, 긴 대기기간의 모습으로 도입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제도의 보편성과 포괄성, 충분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상병수당 제도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고, 한국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발행한 문제를 짚은 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 본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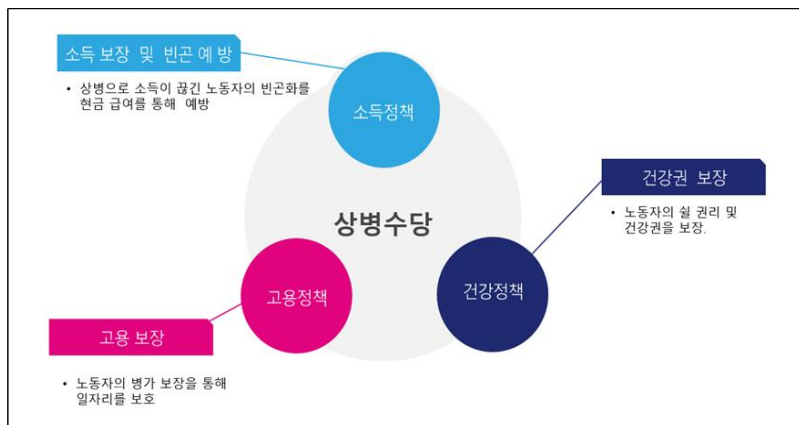
9)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김기태(2021),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및 향후 방향”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도 도입을 위해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상병수당의 개념

[그림 3-5] 상병수당의 개념



자료: 노대명 외(2020)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 방안. 76쪽 그림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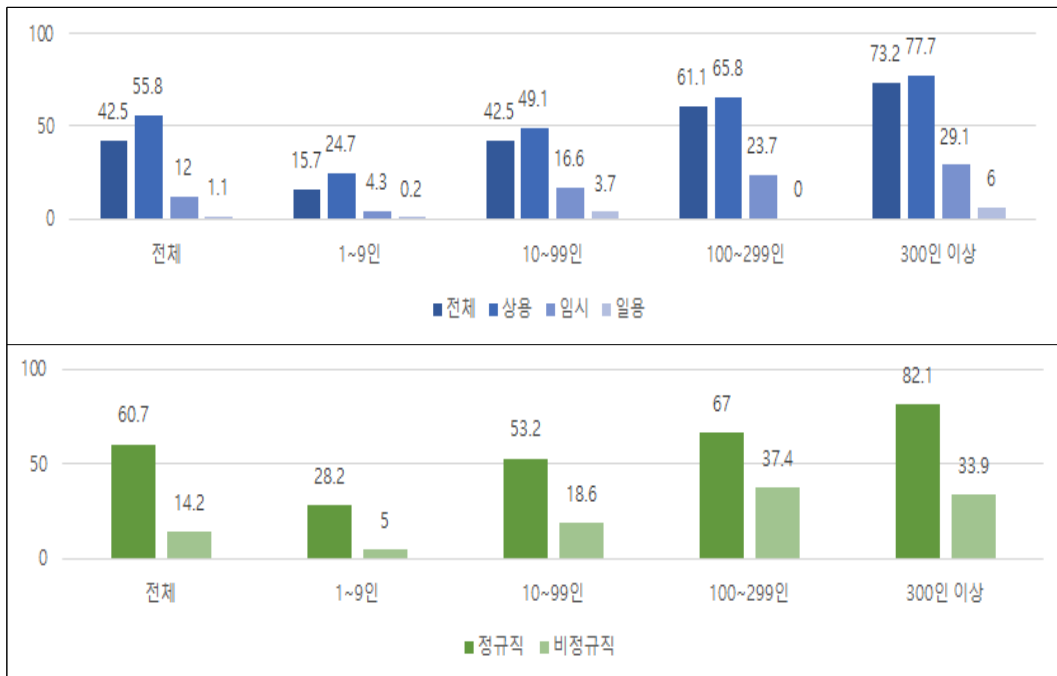
상병수당은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병가 이전 소득에 대한 정률 혹은 정액으로 주어지는 수당(Spasova et al, 2020, p. 1)”이다. 상병수당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소득 보장 정책의 성격을 가지며, 노동자의 쉼 권리 및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건강보장 정책의 성격도 있다. 또한 아픈 노동자의 병가 동안 고용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고용 정책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상병수당제도의 개념이 종종 혼선을 빚는 이유는 국가가 지급하는 상병수당과 별도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유급병가(sick pay)가 있기 때문이다. 유급병가는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병가를 얻을 때, 사용자가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주는 노동자의 임금 (가운데 일부)” (Spasova et al, 2020, p. 1)를 가리킨다. 상병수당과 유급병가는 아픈 노동자의 병가 동안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는 기능적 등가물이다. 따라서,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두 급여를 연계하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지급한다. 이를테면, 스위스와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단위의 상병수당이 없는 대신, 법정유급병가를 통해서 아픈 노동자의 쉼 권리를 보장해준다. 반면, 유급병가의 기능이 약한 대신 상병수당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국가도 있다.

한국에서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에서는 상병수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 단위의 유급 혹은 무급 병가에 관한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한국의 상병수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 한국에서 상병수당 부재의 현황

[그림 3-6]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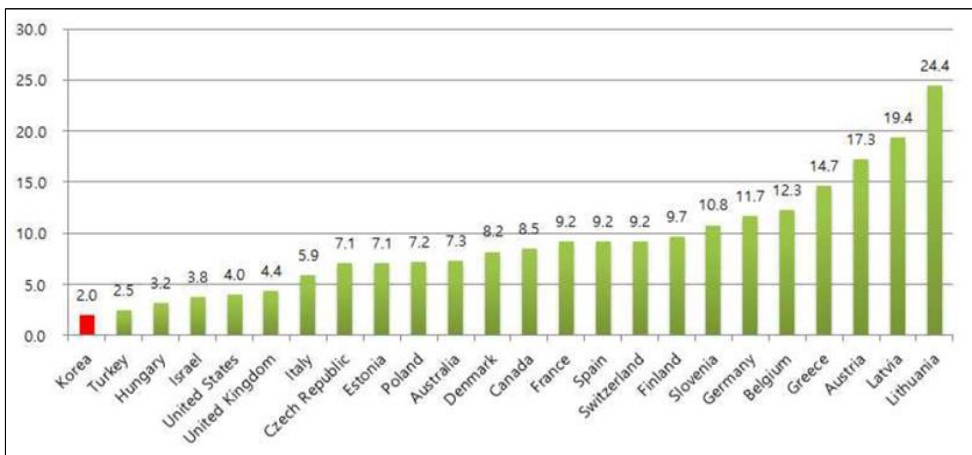
자료: 김수진, 김기태 (2020) 자료 분석 내용 다시 그림

한국의 노동 관련 법령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에서는 39조 병가에 관한 내용에서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19)라고 규정했지만, 바로 옆의 ‘작성시 착안 사항’에서 “필수적 사항은 아니”라고 명시해 놓았다. 또 휴직에 대한 내용을 담은 17조에서는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0’년의 범위 안에서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무급 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휴직 인정 사유와 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

붙었다. 병가는 사실상 사업장의 재량에 맡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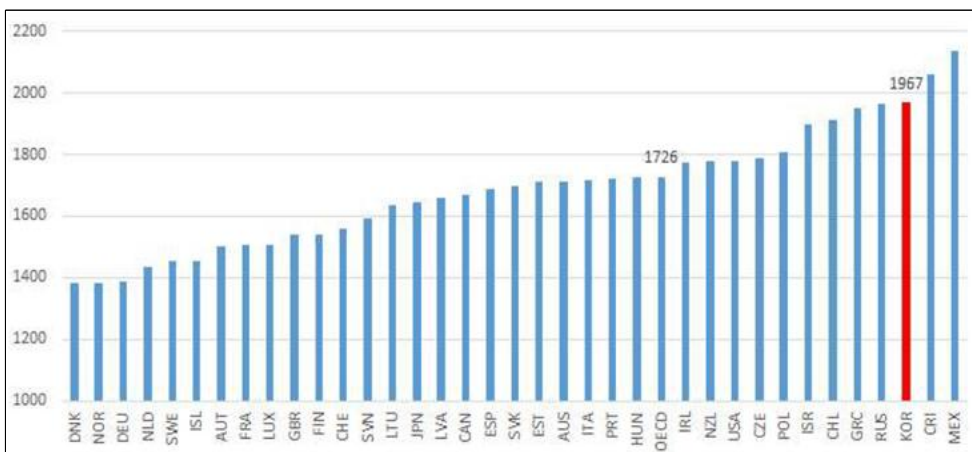
공적 상병수당이 없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규모가 크고,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병가를 받을 가능성은 크다. 김수진, 김기태(2020)가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자 본인이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5%였다. 상용직(44.8%)와 임시직(12.0%), 일용직(1.1%) 사이의 격차는 매우 컸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그림 3-7] OECD 회원국 노동자들이 말하는 1년 중 아파서 쉬는 날



자료: 노대명 외 (2020) 121쪽 그림 5-3

[그림 3-8] OECD 회원 국가의 노동자들 1년 평균 노동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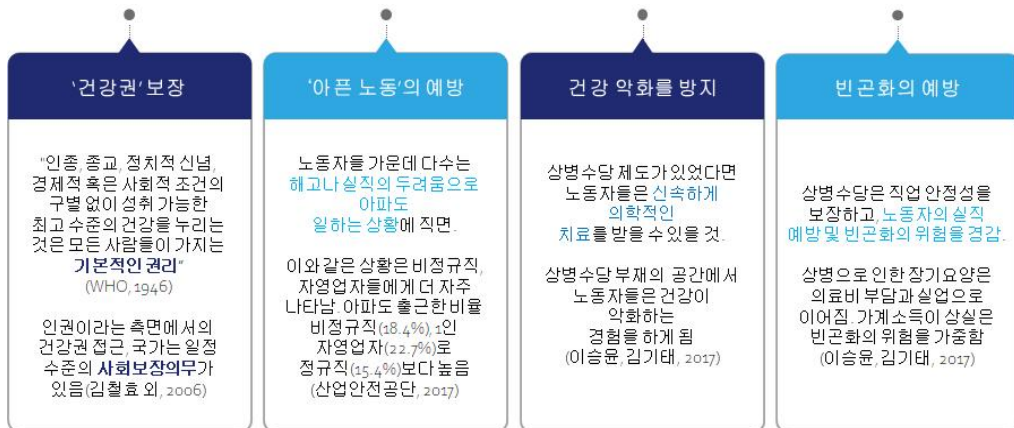


자료: 노대명 외 (2020) 121쪽 그림 5-4

실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국에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터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OECD (2020)의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18년 기준 아파서 쉬는 날이 1년 평균 이틀이었다(그림 3-7) 참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쉬는 날이 적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유독 건강할 이유는 없을 것이었다. 제도가 미비한 자리에서 노동자는 아파도 출근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였다(그림 3-8) 참고). 상병수당이 부재한 공간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다. 한국에서 상병수당의 필요성

[그림 3-9]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자료: 김수진, 김기태 (2020) 자료 분석 내용 다시 그림

상병수당과 같은 복지제도를 사회적인 비용만으로 볼 일이 아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사회적인 효용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병수당제도의 효용을 개인과 사회의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상병수당은 개인의 건강권을 보장해준다. WHO(1946)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성취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적시한 바 있다. 상병수당이 부재한 공간에서 노동자는 스스로의 몸을 훼손하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김철호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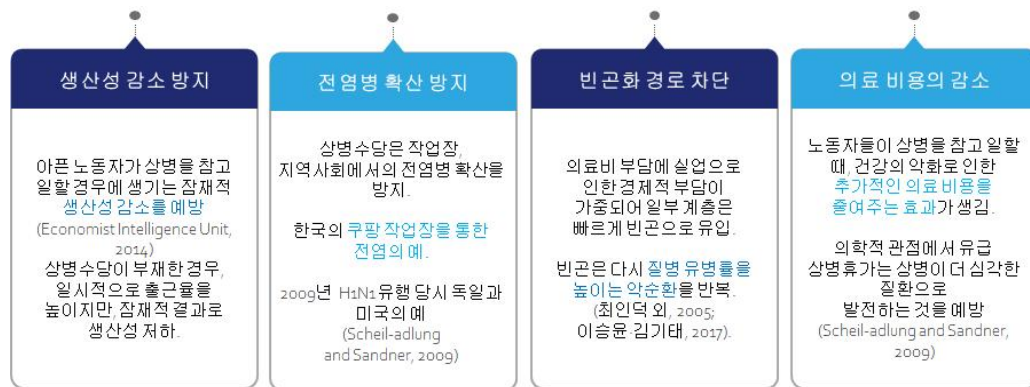
둘째, 노동자가 실직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일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상병수당은 예방한다.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은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 아파도 출근한 비

을 비정규직(18.4%), 1인 자영업자(22.7%)에서 정규직(15.4%)보다 높다(산업안전공단, 2017).

셋째, 상병수당은 예방적인 조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및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승윤, 김기태 (2017)은 업무 외 상병으로 소득이 단절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이들이 무리한 ‘아픈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하는 과정을 제시한 바 있다.

넷째, 상병수당은 빈곤화를 예방한다. 상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은 의료비 부담과 실업이 수반되어, 가계의 소득불안정을 초래하고 노동자를 극빈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림 3-10] 사업체 규모별, 종사상 지위에 따른 병가 제공 현황



자료: 김수진, 김기태 (2020) 자료 분석 내용 다시 그림

사회적인 관점에서 상병수당의 효용은 역시 네 가지가 제시된다. 첫째, 아픈 노동자가 참고 일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잠재적인 생산성 감소를 예방한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4)의 연구에 따르면, 상병휴가를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제공하거나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많은 노동자가 아파도 일터로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프리젠테즘의 잠재적 결과로 생산성이 저하됐다. 우리나라도 아픈 노동자가 소득손실의 두려움으로 가능한 한 일터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경향이 관찰됐다(이승윤·김기태 2017).

둘째, 상병수당은 작업장, 지역사회에서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한다. Scheil-adlung & Sandner(2009)는 유급상병휴가가 공중 보건과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관한 사례로서 H1N1 감염병 발발 상황을 제시했다. 2009년 H1N1 유행성 전염병이 발발했을 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수많은 노동자가 아픈 상태로 출근하였고, 이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하여 미국에서만 700만의 감염자를 낳았다.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구조조정과 인원 삭감에 대한 두려움 등은 아픈 노동자들의 출근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셋째, 상병수당은 상병과 빈곤의 이중적 위협으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로를 줄이는 빈곤 방지 효과가 있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여 파산과 빈곤화의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의료비 부담에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일부 계층은 빠르게 빈곤으로 유입되고, 빈곤은 다시 질병 유병률을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최인덕, 김진수, 공경열, 2005; 이승윤·김기태, 2017).

넷째, 상병수당은 의료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의학적 관점에서 유급 상병휴가는 노동자로 하여금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만들고, 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한다(Scheil-adlung and Sandner, 2009). 이는 다시 국가의 의료 수요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3. 정책적 시사점

한국형 상병수당은 2015년 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들은 무수하다. 주요한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포괄성 문제가 있다.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전통적인 사회보험제도에서 일부 배제됐던 특수형태고용자, 자영업자들을 얼마나, 어떻게 포괄하느냐의 문제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도 대기기간과 급여 수준은 달리 설정하더라도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추세다. 특히, 한국에서 상병수당 도입의 논의가 촉발된 배경에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배달 노동자 등의 잇따른 감염병 확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면 제도의 대상자를 가능한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이들 집단의 소득 파악의 문제가 함께 결부된다.

둘째,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의 문제다. 적정 급여 수준 책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급여의 충분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다른 제도와의 조정 및 연계 가능성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마지막 변수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실업자가 아픈 경우에 받는 상병급여는 퇴직하던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돼 있고, 산재 보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책정돼 있다. 제도 간 연계를 고려하면 상병수당의 급여 수준은 60%~70%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서는 급여 상한 및 하한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병수당의 대기기간 및 급여 기간의 문제다. 이 의제는 상병수당의 목적이 단기적인 근로 복귀에 있는지, 혹은 장기적인 빈곤화 예방에 있는지와 결부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고, 급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두 기간 모두 길게 갈 가능성이 크다. 급여 기간은 다른 제도(예, 장애연금)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연계 및 조정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대략 절반 정도의 노동자들은 병가 혜택을 받고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유급병가와 새로운 상병수당과의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을 경우, 상병수당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부담을 국가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가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을 수급하는 동안, 고용보장의 문제도 핵심 의제일 것이다.

다섯째, 의료적 인증 기준 문제다. 상병수당의 자격 요건에 관한 의료적 인증의 조건과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제도의 포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픈 노동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운영 기관 심사, 재인증으로 이어지는 경로 역시 검토의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 및 산재 등 다른 제도와 연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구 국가에서 일부 발견되는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한 의료적 인증 기준 설정 역시 필요하다.

그 밖에도 운영 주체의 문제, 재원 마련의 문제, 다른 복지 급여와의 조정 및 연계의 문제, 민영 의료보험과의 관계 설정 문제, 제도 평가의 문제 등이 해결을 기다린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이 돼도, 현재의 사업장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는 효과성에서 한계를 보일 것이다. 병가를 쓸 때 동료와 회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상병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더욱이, 병가를 쓸 때 고용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면, 더욱 그러하다.

아플 때 쉴 수 있는 작업장 문화를 갖춰 가기 위해서는 보편성, 포괄성 및 급여 충분성이 갖춰진 상병수당 도입과 아울러 노동자가 아플 때 쉴 권리의 법적 보장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병수당을 통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조성되고, 그 문화가 다시 상병수당 제도 성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3절

청년¹⁰⁾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본 절의 주요 배경은 청년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청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저변 인식이 현시대의 청년의 삶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와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흔히 청년들은 세대 간의 이질성, 물이 해를 보이는 권위적인 사고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기성세대를 ‘꼰대’라는 은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빌려 보자면 우리는 꼰대인가 즉, 우리는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현 시대의 청년들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뽑자면 탈권위와 공정이라는 개념을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강하게 주장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청년 인식이 발생했을까를 탐색해 볼 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교육비 투입 여력, 자산의 대물림 등으로 인해 자사고/특목고 진학이나 이른바 상위권 대학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이 최근에는 대학 졸업 이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와 더불어 첫 사회 진출 이후 결혼 준비와 주거 마련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있다고 볼 만한 현상들을 많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는 학벌주의의 분화적 심화이다. 과거에는 성공적인 학력 성취라는 것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 졸업이후의 사회진출에 유리하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단순히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취업이 잘 안되는 학과나 전공으로 그 안에서도 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최상위권 고교생들이 전통적인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전국의 의대 진학에 몰려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셋째는 고학력의 대중화이다. 대학 진학이 기본적인 학력처럼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에 더해 이제는 지속적인 취업난과 맞물려 졸업 후 대학원 진학자의 증가로

10)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김형주(2021),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인한 고학력이 졸업자가 확대 일로에 있다. 넷째는 사회 첫출발 부터의 양극화이다. 이는 앞서 얘기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 확대와 직결된 것인데, 사회 첫출발선에서 학자금 융자나 각종 가계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으로 구분되고, 부모가 결혼자금과 주거자금을 대주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섯째는 공정의 개념에 대한 청년과 기성세대 간의 차이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 개념을 논할 때 전통적인 시각은 전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상위권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졸업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 등등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청년 취업난과 부모에 의한 자산 양극화, 그리고 해가 갈수록 격화되는 취업이 잘되는 학교나 전공에 대한 경쟁을 심화 등은 결국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를 성취한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한 박탈감과 사회적 불균형 인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둘러싼 실제 삶의 현상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은 현시대의 청년을 이해하고 미래를 기획하는데 중요하다.

나. 목적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년의 사회경제적 일과 삶의 실태는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조사 연구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본 절의 목적은 2020년 한국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취업과 경제생활, 삶에 대한 만족과 행복, 그리고 교육, 가치관, 신체 및 정신건강, 주거, 결혼, 양육, 출산, 문화생활 등 청년의 삶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청년들의 주거의식과 주거문제에 대해서 심층면담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2. 주요 내용¹¹⁾

가.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개요

2020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의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지표는 7대 대분류로 구분되는데 인구와 가족, 교육과 훈련, 경제와 고용, 주거,

11) 본 절의 주요 내용은 앞서 연구 목적에서도 언급했듯이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의 일부를 요약·발췌한 것임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 등이다.

- 조사대상 : 만 18 ~ 34세 일반국민 3,520명
- 조사기간 : 2020년 7월 6일 ~ 9월 18일
- 조사방법 : 지역별 인구비례 가구방문조사
- 표본추출틀 :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리스트
※ 1차 층화 : 행정구역별, 2차 층화 : 아파트조사구/일반조사구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2.9\%$ p
- 조사지표 : 7개 대분류, 14개 소분류, 115개 핵심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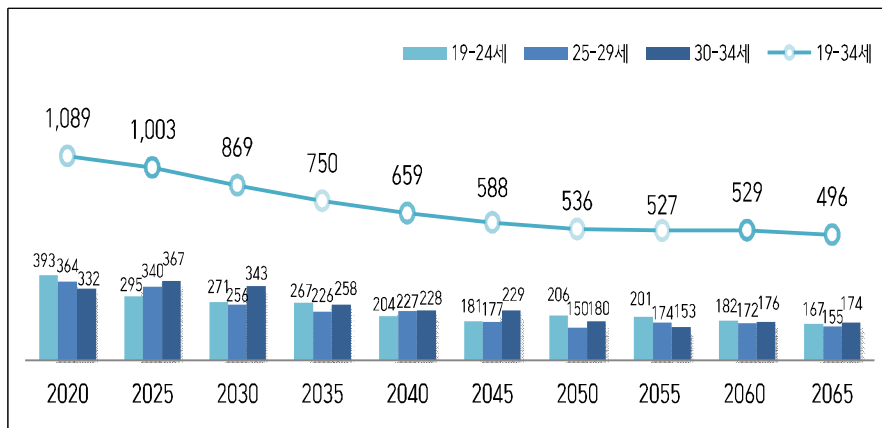
나. 한국 청년의 일과 삶 실태

1) 인구와 가족

① 청년층 인구 전망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인 만 19세~34세 인구수는 2020년 1,089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496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1] 청년층 인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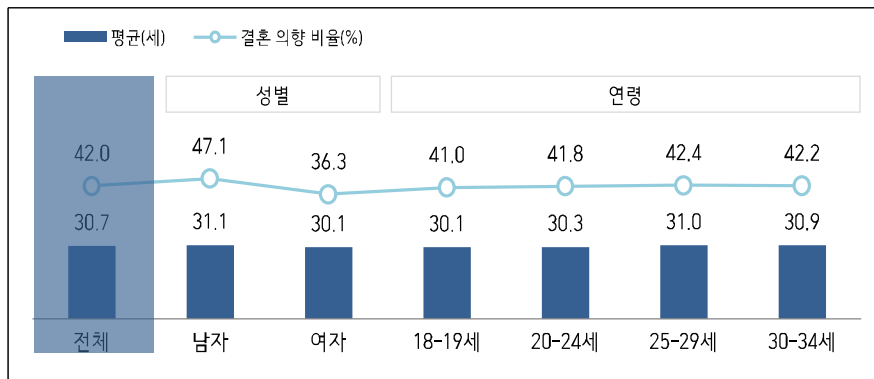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 KOSIS 국가통계 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12에서 2020년 9월 21일 인출.

② 결혼 의향과 적정 결혼 시기

결혼 의향을 묻는 질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2.0%로 남자(47.1%)가 여자(36.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적절한 결혼 연령을 물어본 결과, 평균 30.7세로 2019년 조사 결과인 30.4세와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 3-12] 결혼 의향과 적정 결혼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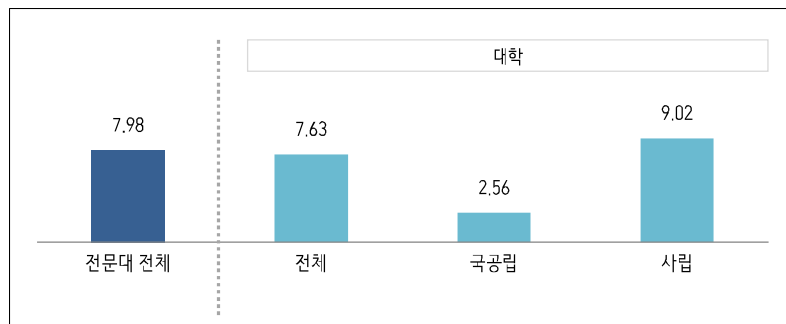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125

2) 교육과 훈련

① 대학 학자금대출 비율

2020년 전문대 전체 기준 7.98%, 4년제 대학 전체 기준으로 7.63%이다. 전문대의 등록금 대출자 비율은 매년 감소하는데 비해, 4년제 대학의 경우 2019년 소폭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등록금 액수가 큰 사립대학이 대출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대학 학자금대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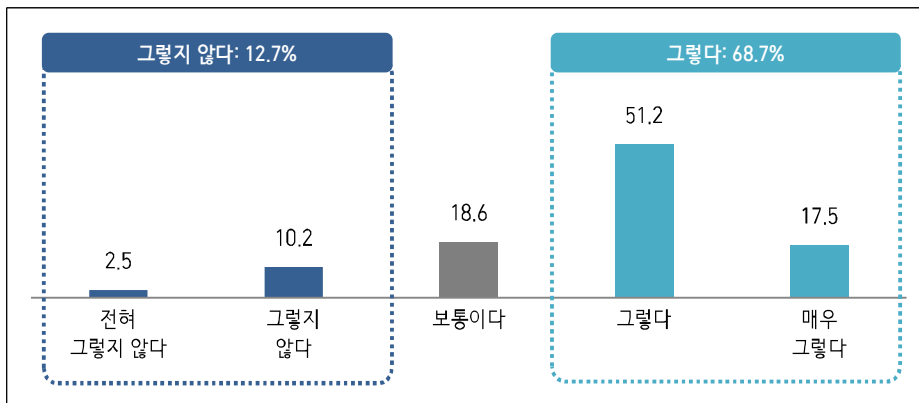


출처: 대학알리미(각 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공시항목 12-다-2). 대학알리미 웹사이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년 9월 28일 인출.

② 학벌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8.7%(‘그렇다’ 51.2%+‘매우 그렇다’ 17.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12.7%(‘전혀 그렇지 않다’ 2.5%+‘그렇지 않다’ 10.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4] 학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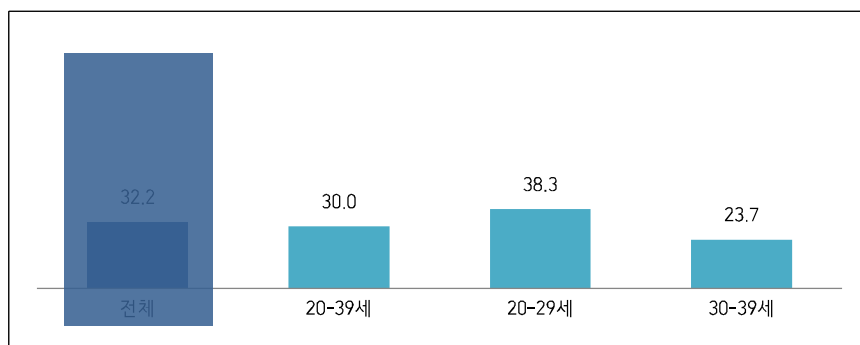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179

3) 경제와 고용

① 비정규직 비율

20-39세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비율은 2019년 기준 30.0%로 나타났다

[그림 3-15]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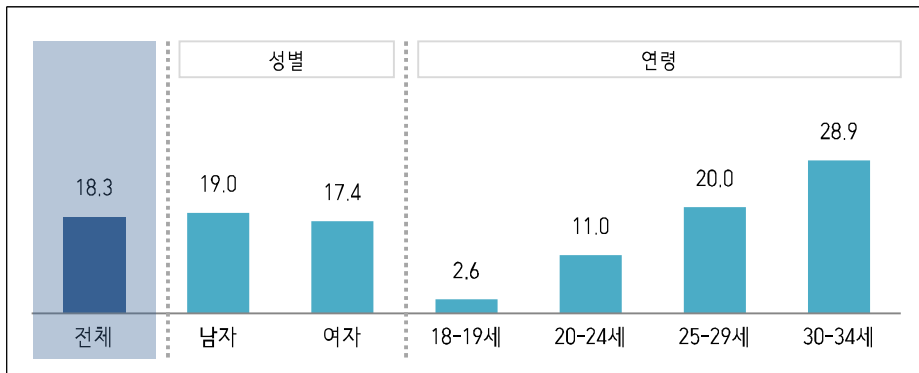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각 년도b).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KOSIS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E7006S&conn_path=1에서 2020년 9월 29일 인출.

다. 연령대별로는 30대(23.7%) 보다 20대(38.3%)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14.6%p 높고, 2011년 이후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비율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청년층 채무 여부

18-34세 청년들에게 은행,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채무가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채무가 있다는 응답 비율 또한 증가(18-19세 2.6%, 20-24세 11.0%, 25-29세 20.0%, 30-34세 28.9%)하였다.

[그림 3-16] 청년층 채무 여부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242

4)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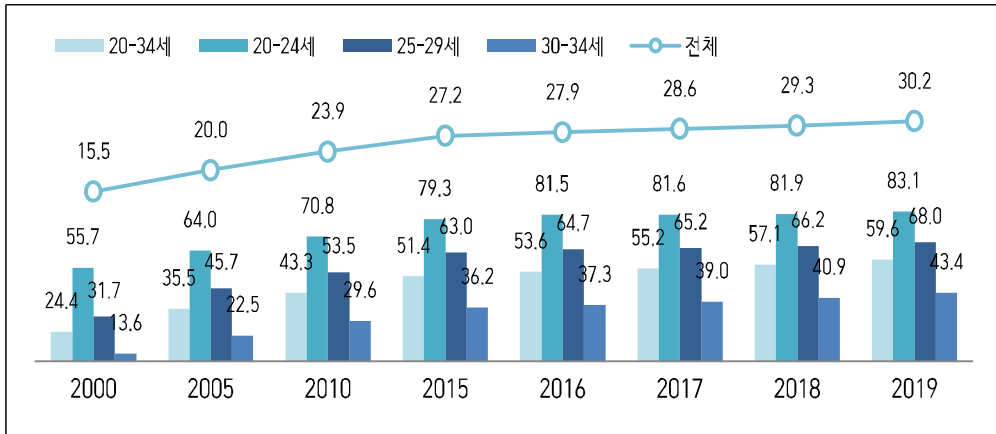
① 청년 1인 가구 비율

20-3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2019년 기준 59.6%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 대비 2.5%p 상승하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인 가구 비율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전부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2019년 기준 전체 1인 가구 비율(30.2%)과 비교했을 때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59.6%로 약 두 배 가량 높다. 특히 20-24세 청년 가구주의 1인 가구 비율은 83.1%로 전체 대비 52.9%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부모 도움 없이 주거 마련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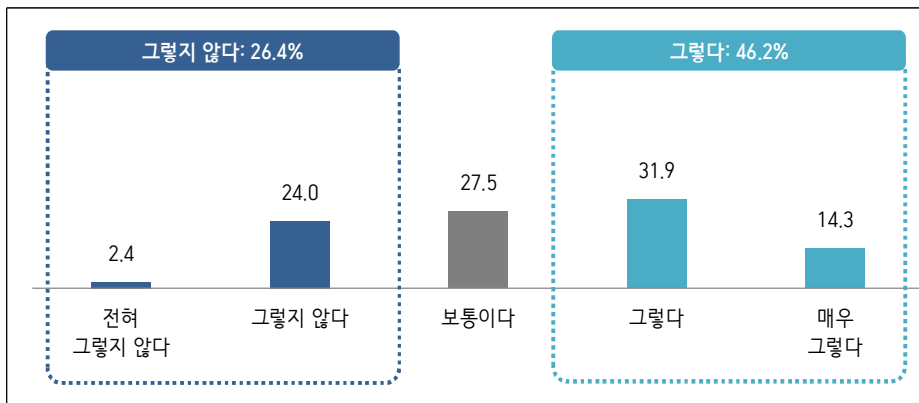
‘부모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도움 없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은 46.2%(‘그렇다’ 31.9%+‘매우 그렇다’ 14.3%)로 ‘그렇지 않다’(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응답 비율 26.4%(‘전혀 그렇지 않다’ 2.4%+‘그렇지 않다’ 24.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 스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3-17] 청년 1인 가구 비율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260

[그림 3-18] 부모 도움 없이 주거 마련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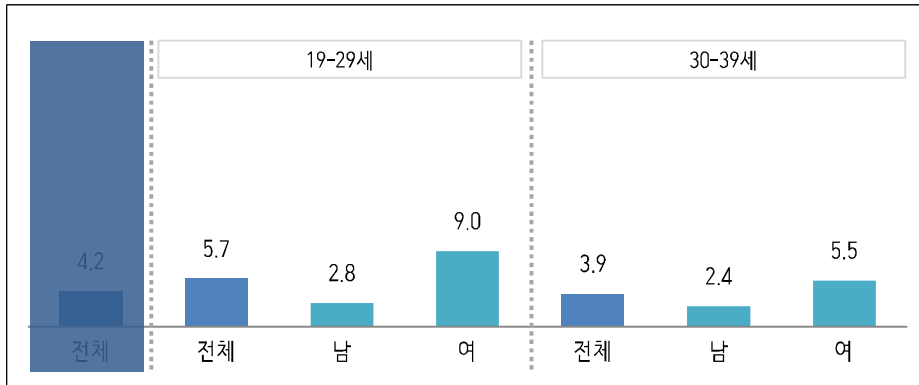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283

5) 건강

① 우울증

우울장애 유병률은 1년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비율로 집계되며, 2018년 19세 이상 전체 기준 4.2%로 2016년 5.6% 대비 소폭(1.4%p) 하락하였다. 19-29세 및 30-39세 청년층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장애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19-29세의 청년층은 우울장애 유병률이 전체 평균 4.2% 보다 높은 5.7%로 나타났다.

[그림 3-19] 우울증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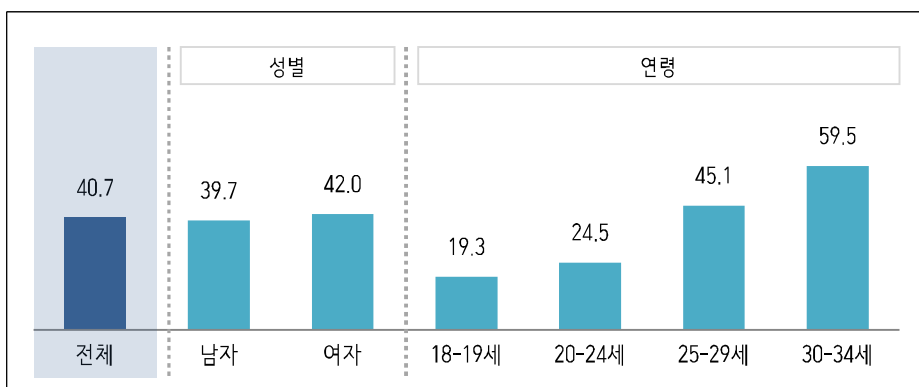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80-82쪽 추이표1-17. 우울장애유병률: 성별, 만19세이상, 2014-2018을 재구성. 질병관리본부 웹사이트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0년 10월 3일 인출.

② 건강검진 수검 여부

지난 1년간(2019년 6월-2020년 5월)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8-34세 청년들의 40.7%가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초반 이전(18-19세 19.3%, 20-24세 24.5%) 대비 20대 후반 이후(25-29세 45.1%, 30-34세 59.5%) 연령대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20] 건강검진 수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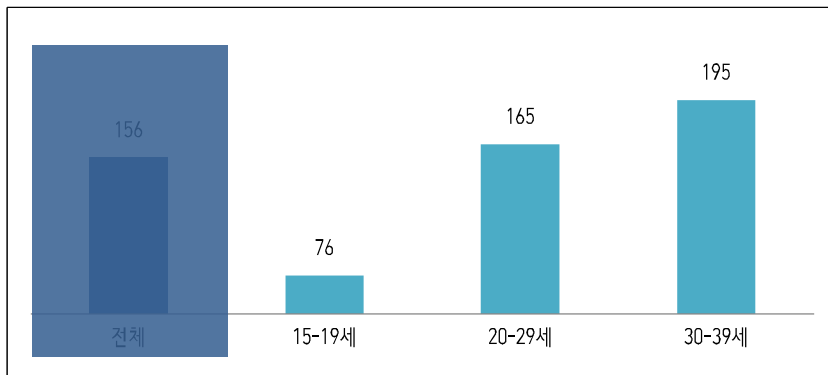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319

6) 문화와 가치관

①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15세 이상 전체 기준 2019년 청년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은 월평균 15만 6천 원으로 2018년 15만 1천 원 대비 5천 원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3-21] 문화 및 여가생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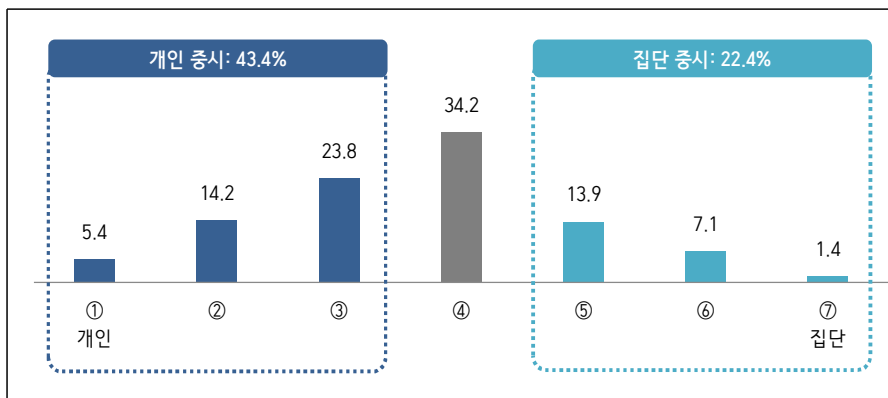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a).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예술지식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s://policydb.kcti.re.kr/> 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②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 선호도

집단과 개인 중에서는 개인을 중시한다는 응답이 43.4%로 집단을 중시한다는 응답 22.4%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 개인과 집단에 대한 가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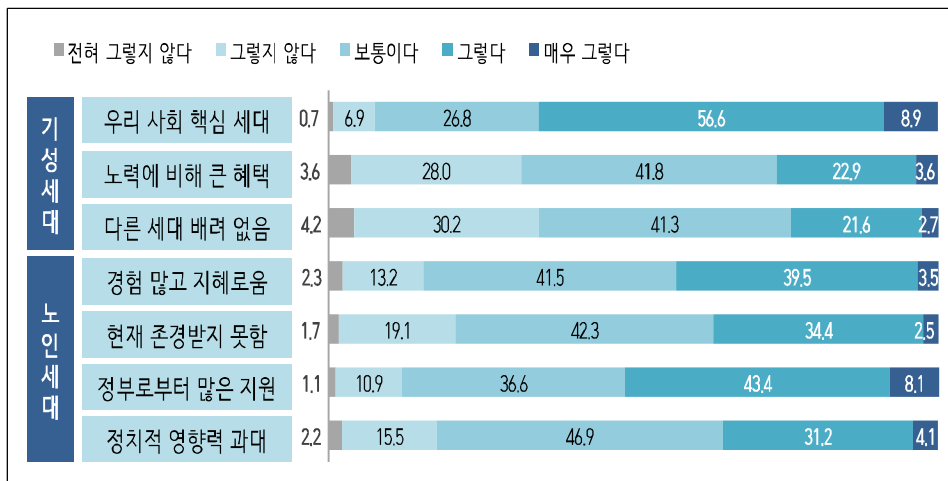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344

7) 관계와 참여

① 세대갈등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의 핵심 세대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며, 노력에 비해 큰 혜택을 받거나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단,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지혜로움과 그만큼 존경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하고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여러 노년층 복지 제도의 시행에 비하여 부족한 청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23] 세대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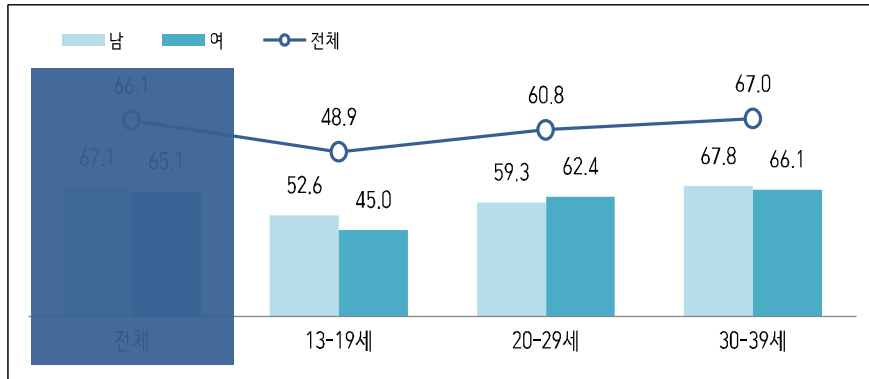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355

② 단체 참여

단체 활동(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스포츠 및 여가활동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등의 단체)에 지난 1년간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13세 이상 전연령 기준 66.1%로 2017년 49.7%에 비해 16.4%p 증가하였다. 13세-19세 48.9%, 20세-29세 60.8%, 30세-39세 67.0%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단체참여율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3-24] 단체 참여



출처: 통계청(각 년도c). 사회조사(단체 참여(지난 1년간, 복수응답, 13세 이상 인구)). KOSIS 국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52R&conn_path=I2 (2009-2017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1SSSP048R&conn_path=I3 (2019년)에서 2020년 10월 5일 인출.

3. 정책적 시사점

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면 현시대의 청년들은 단적으로 사회적 격차는 인정하지만 기회의 균등 부여 보다는 진입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가치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성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벼락부자는 못되도 벼락거지는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사회 첫진출 때부터 사회적 약자로 물리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앞서서 여러 분야로 구분하여 청년의 사회·경제 실태를 살펴본 것은 현재 청년이 직면한 삶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과 고용이 확보로 가능하다는 오래된 관념을 혁파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오랜 청년 취업난은 청년의 일과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득지원정책이나 고용정책 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 소득, 주거, 교육, 건강, 문화 등 다차원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 정책 제언

본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살펴보면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이라는 비전 하에 6개 분야 총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25] 한국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 비전 및 제어 분야



출처: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p.519

첫째,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셰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제4절

인력·교육¹²⁾

1. 배경 및 목적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논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필요성에 따라 이뤄져왔으며,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방법에 대한 전환 방향이 모색되어왔다. 5.31 교육개혁에 이은 ‘Post 5.31’ 교육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을 위한 교육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논의의 양상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원격수업 활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수업을 포함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학교 교육에 자리를 잡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혁신 또는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는 교육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즉 ‘개인화(personalization)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디지털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화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교육이 개인화 수준을 더욱 심화한 소위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고 있다. 이는 2020년에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정책 방향과 과제는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을 목표로, 학습자의 특성·상황·수준·정서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위한 초개인화 학습환경 구현을 주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으로 정의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학습이 교실과 같은 제한적인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현재는 디지털 기술이 교육환경에 접목되면서 학습이 점점 시공간적인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고

12)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손찬희(2021),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손찬희(2021a; 2021b), 손찬희 외(2019)를 토대로 작성

있으며, 학습자들이 네트워크화된 학습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정의석 외, 2016:3, 손찬희 외, 2019 재인용).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개별 학생의 역량을 진단하고, 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안하며 학생의 학업 성취를 예측, 피드백하는 이른바 지능형 학습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다(계보경 외, 2018:2). 이러한 교육 분야의 데이터 분석은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이라는 새로운 응용 분야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절은 교육에서 개인화를 넘어서 ‘초개인화’로 그려볼 수 있는 교육의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에서의 초개인화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이 지향하는 교육 방법, 즉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초개인화 교육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초개인화와 교육

1) 초개인화란?

사실 초개인화는 기업 마케팅 활동의 핵심 트렌드로 우리에게 보다 익숙하다. 마케팅의 관점에서 초개인화는 실시간으로 소비자의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경험과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기술로, 초개인화 기술은 소비자의 취향을 맞춤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조정해 주는 도구로 진화해 왔다(이영훈, 2021). 이러한 초개인화 기술의 핵심 키워드는 ‘데이터’다. 초개인화는 인지(Aware), 지원(Assist), 그리고 예측(Anticipate)이라는 3A의 관점에서 설명되기도 한다(트렌드 코리아, 2020). 3A 관점의 초개인화는 실제 소비자의 행동 및 소비자가 처한 맥락을 인지(Aware)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소비자를 분석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지원(Assist)하며, 소비자의 패턴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필요한 것을 예측(Anticipate)하는 것을 의미한다. 3A는 방대한 양의 실시간 행태 및 맥락 데이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초개인화와 데이터의 연결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초개인화 기술의 핵심 기능은 데이터 수집, 고객 세분화, 개인화된 경험 경로 탐색, 개인화된 경험의 지속적인 분석으로, 이를 위해서 자동화된 AI 기반의 초개인화 기술 플랫폼을 필요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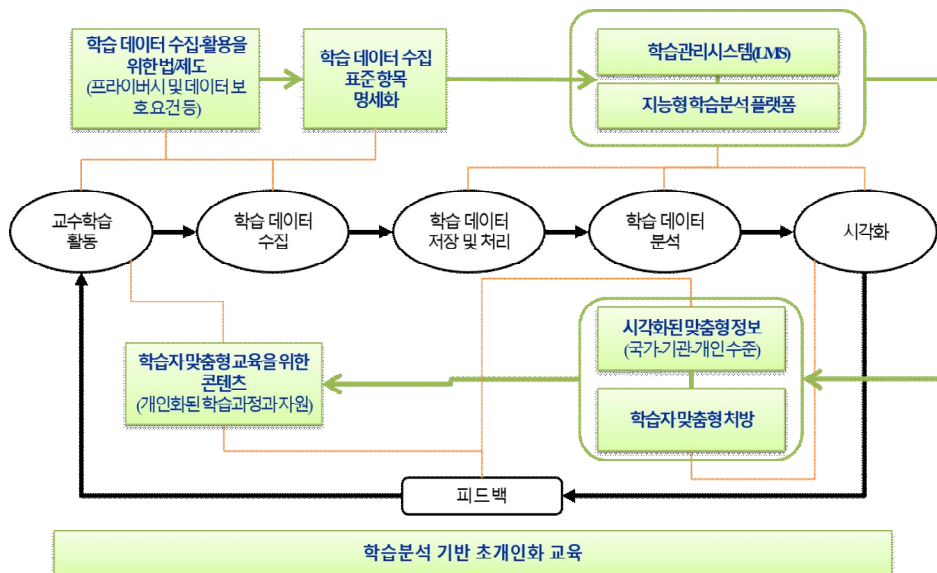
2) 초개인화 교육

위에서 설명한 기업 마케팅 활동 관점의 초개인화 정의에서 ‘소비자’를 ‘학습자’로 ‘상품’을 ‘교

육’으로 대체하면, 교육에서의 초개인화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다(손찬희, 2021).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 보다 구체화하면 학습자의 특성, 상황, 수준에 따라 교육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습자에게 더 맞춰지는 교육이다(관계부처합동, 2020). 사실 개인화는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해 온 교육 방법으로,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 기반의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손찬희, 2021). 개인화 교육의 필요성은 지속해서 강조되어왔으나 기술적 한계와 인프라 부족 등 활용 기반 미비 등으로 실제적 적용에 한계가 있었으나, 최근 에듀테크의 비약적 발달로 기존의 한계가 상당 부분 해결되어 개인화를 넘어 초개인화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 에듀테크 활용 확대로 학습활동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학습분석 기술과 AI 알고리즘의 발달로 학습에 대한 기술(descriptive), 진단(diagnosis)을 넘어 예측과 처방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초개인화 교육은 학습분석이라는 하나의 응용학문영역으로 특화되어왔다. 학습분석은 “학습과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최적화를 위해 학습자와 그들의 맥락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 수집, 분석 및 보고하는 활동”이다(Siemens et.al., 2011). 학습분석은 교수·학습 활동과 그와 관련한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와 분석, 그리고 시각화(visualization)를 매개로 하는 피드백이 순환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아래 [그림 3-26]은 이러한 학습분석의 흐름에

[그림 3-26] 학습분석 기반 초개인화 교육의 흐름과 요건



출처: 손찬희 외(2019:6)의 그림 내용 일부 수정

따라 초개인화 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 혹은 요소를 보여준다. 학습분석의 결과로 제시되는 맞춤형 정보 또는 처방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micro)는 물론, 공급자인 교수자를 포함한 교육 기관(meso)의 입장에서든 유용하다. 또한 국가 및 지역 수준(macro)에서도 증거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나.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초개인화 교육을 데이터 기반의 보다 고도화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고 볼 때, 초개인화 교육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예견한 미래이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며, 정확히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 미래일 수도 있다. 단지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방대한 데이터 생성과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의 비약적 진보로 우리에게 급속한 속도로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일 뿐이다. 이러한 전제로 초개인화 교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의 모니터링과 예측(Anticipation), 학습 경로 및 환경의 최적화(Adaptiveness), 그리고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Assessment)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기술의 혁신과 수용이 심화되면서 더욱 정교화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모니터링과 예측은 학습자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의 패턴 또는 경향을 알아보는 것으로 다른 교육 지원의 전제가 된다. 학습이 진행되면서 학습자들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습분석 결과를 시각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보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성과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 도움을 받게 되며, 학생이 세운 목표와 진행 상황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고, 교수자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 사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저성과 위험군 학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수업에 참여하는 개별 학생의 성과를 상세히 분석하여 교사는 제시 시간에 학습 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만일 어떤 학생의 성적 결과가 다른 학생보다 좋지 않은 경우 이는 해당 학생이 수업 진도에 맞출 수 없거나 제대로 학습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은 차후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커진다. 학습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발견하고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 학생들이 필요한 학습 개입전략을 적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교를 그만두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재학생의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 관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측에서 예측 모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상담, 학습 자원 지원, 개별 학습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신속한 후속 조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재학생

의 학업 중단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습 경로 및 환경의 최적화는 학습분석 결과로 파악되는 개별 과정마다 가장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한 학습자의 사례를 참조하고 해당 학습자의 적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과목을 추천,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학습자의 학습자 정보와 학습활동 이력 데이터를 종합하여 학습 능력, 집중력 등을 알아내어 다음 주제로 진행해도 되는지, 진도가 늦지 않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알맞은 학습 자료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수자에게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동기, 선수지식, 학습양식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내용, 학습전략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적응적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은 학습분석을 통하여 정기적인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퀴즈와 같은 방식 등 다양한 학습 이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학습자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매 학년의 모든 학생의 학습활동을 수집하게 되면 기존 학습 콘텐츠의 적정성을 분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교육 자료의 수준을 조정하고 교육과정의 개편작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가. 디지털과 피지컬 융합 학습 환경 조성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비단 온라인 교육에 국한된 논의는 아니어야 한다. 교육 전반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과 피지컬을 융합하는 블렌디드 러닝, 현장 체험형 학습, 문제기반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융합형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최근 발달하고 있는 IoT, 센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피지컬한 교실 내 수업 환경 및 교실 외 학습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무궁무진한 학습자-콘텐츠, 학습자-학습자, 학습자-교수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학습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의 관찰(macroscopic), 디지털 학습환경에서 학습분석시스템에 의한 학습자별 현미경적 관찰(microscopic)과 학습자 간 망원경적 관찰(telescopic)을 삼각측정(triangulation)하여 학습자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과 피지컬, 정형학습과 비정형학습을 포함하는 전역적 유비쿼터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 학습분석시스템의 예측력과 처방력에 있어 극적인 개선과 함께, 전통적 교실 학습의 자연스런 공진화도 은연중 이뤄질 것이다.

나. 초개인화 학습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 제도 개선

학습분석의 전제가 되는 학습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하여 맞춤형 교육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호’와 ‘규제’에 초점을 두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용제도를 ‘안전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안전한 활용은 개인정보 유출과 이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또는 정보주체 개인에게 어떤 형태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정보주체인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학습자가 자기 정보 및 데이터를 직접 받아서 활용하거나 누군가에게 그것을 분석하도록 요청 또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학습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처럼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을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MyData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는데, 특히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10). MyData 제도 도입은 각 개인정보처리자(학습 데이터 보유기관)에 의한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은 물론, 복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반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MyData 도입을 통해 학습 데이터 보유기관 간 학습 데이터 연계 활용 체제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인식 전환

현행 온라인 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주로 ‘강의 동영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교육, 달리 표현하면 이러닝은 도입 초기부터 교사가 강의하는 것을 촬영하여 만들어 낸 강의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강의 동영상은 한번 녹화되면 재촬영을 하지 않는 한 부분적인 수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전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새롭게 개발(재촬영)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그렇다 보니 막대한 콘텐츠 개발 예산이 반복되어 투입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일부를 재사용하여 투입되는 개발 예산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맞춤형 교육은, 특히 온라인에서의 맞춤형 교육은 실시간 화상수업이 아닌 이상 ‘매우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다양한 콘텐츠’는 학생의 수준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학생의 학습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콘텐츠의 질적·양적·형태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투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그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콘텐츠 개발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교육용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디지털 교재 형식의 콘텐츠를 기존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와 혼합·연계 되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디지털 교재가 갖는 수정의 상대적 용이성과 유연성을 감안할 때, 기존 강의 동영상과 비교하여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서 디지털 교재를 활용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이러닝의 형식을 강의 동영상 ‘시청(watching)’ 중심에서 탈피하여, 디지털 교재를 통해 학생 스스로가 학습 내용을 읽고(reading) 성찰(reflection)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디지털 교재를 온라인 교육의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 시간이 아닌 학생의 실질적인 성취를 중시하는 이수 기준의 적용이 동반되어야 한다.

제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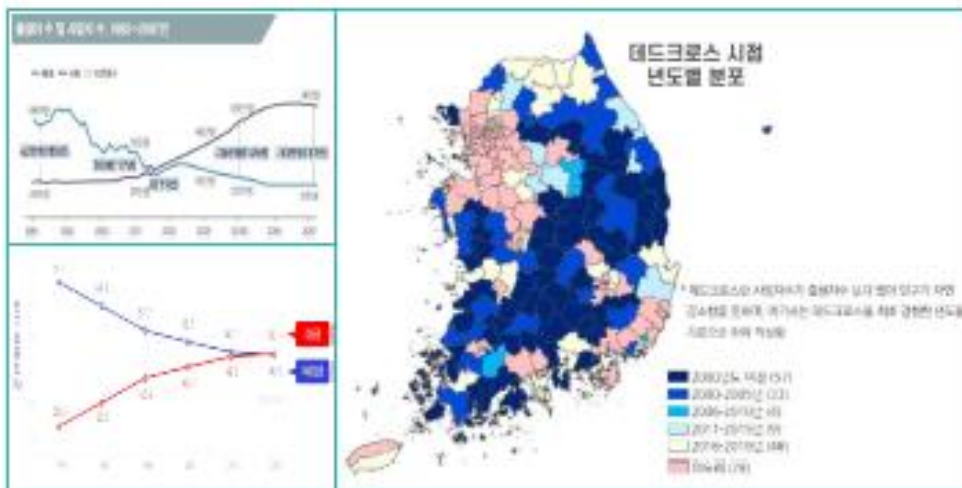
국토·교통¹³⁾

1. 배경 및 목적

2020년 우리나라는 인구와 관련해 첫째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넘는 ‘인구 데드크로스’¹⁴⁾ 현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로 분석해본 결과, 시·군·구의 약2/3(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1/4(25%)은 200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수가 출생아수의 최대 6.9배에 달하는 지자체마저 발생하였다.

둘째는 수도권 인구가 50.1%로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였다. 수도권 인구는 1970년 28.3%,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2010년 49.3%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게 되면서 “지방소멸” 위기의식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림 3-27]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추이와 시군구별 데드크로스 실태



출처: 차미숙외(2021, 행정안전부)

13)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략대회』 중 “차미숙(2021),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2021, 차미숙외)를 요약·보완하였음

14)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은 사망자수가 출생아수 보다 많아 자연감소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지칭함

2005년 이래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직속 기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응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공통의 문제의식을 갖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2022년 1월 현재 10개의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과 관련한 입법안의 국회에 발의. 계류 상태이다.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TF(2022)도 발족하였다.

본 절은 첫째, 지방의 인구감소 및 소멸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국회에 발의. 계류 중인 입법안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한 지원시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가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기본체제 구축을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과 범정부 차원의 활용 가능한 정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지방의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1)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자립기반 저하

2000~2022년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51곳(66%)의 시·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고, 30% 이상 감소한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또한 1975년 이래 인구정점 대비 현재 절반 이상이나 인구가 감소한 지방 중소도시가 발생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인구정점인구가 12만 명에 비해 2021년 인구가 4만 명으로 감소하여 약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이외에, 생산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화, 지역적인 편재로 인해 지방의 인구구조 취약성과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첫째, 2000~2020년 기간 동안 지자체 인구 규모별 변화 분석에 따르면 인구3만 미만의 시군구가 6에서 18개로 세 배가 증가한 반면,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가 1개에서 4배로 증가하였고, 인구1만명 미만의 군이 발생하였다. 둘째, 1인가구 증가로 20~30대 청년 1인가구¹⁵⁾는 서울시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1인가구¹⁶⁾는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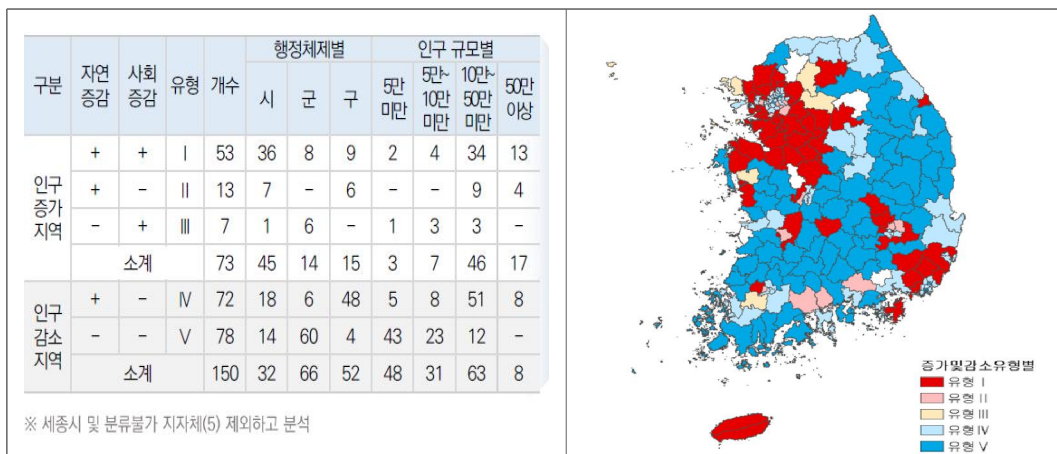
15) 20~30대 청년1인가구는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마포구 등으로 서울시에 집중해있음

16) 65세 이상 고령1인가구는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경남 의령군 등으로 군 단위에서 주로 나타남

2) 지방의 인구감소 요인과 인구이동 양상

지방의 인구감소 요인은 무엇일까? 그동안 저출산과 고령화를 주요 요인으로 삼아 대응해왔다. 그러나 지방의 인구감소는 인구이동(유출)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감사원, 2021). 2000~2020년 기간 동안 시·군·구의 인구증감요인 분석 결과, 인구감소 지역의 공통점은 사회적 증감이 (-)로 나타난 점이다(그림 3-28). 그리고 평균 합계출산율(2019년)도 군(1.25명) - 시(1.05명) - 구(0.82명)순으로 나타나고, 최대 합계출산율을 나타난 전남 영광군(2.538명)이 가장 낮은 서울시 관악구(0.536명)에 비해 거의 4.8배 이상이나 높은 출산력을 보인다. 지방 인구감소는 낮은 출산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이동(유출)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림 3-28] 지방의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유형화와 공간 분포 현황



출처: 차미숙외(2021, 행정안전부)

지방 인구의 이동 양상은? 첫째, 최근 3년(2018~2020년) 기간 동안 인구이동 실태 분석 결과 20~30대는 군부에서 일자리와 주택, 교육 목적으로 유출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0~60대는 군부로 유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 등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한 공간 선호와 지역간 이동 양상은 지원정책 마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둘째, 강원도와 경북, 전남의 청년 이동 양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강원도 청년은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반면, 경북과 전남 등 인접 광역시가 있는 경우는 수도권과 광역시로 이동이 고르게 나타났다. 셋째, 2000년 청년과 2010년대 청년의 인구 이동 양상을 보면, 2000년대 청년에 비해 2010년대 청년이 교육과 직업 목적으로 서울로 이동이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 청년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 별 차이가 없었다.

〈표 3-4〉 2018~2020년간 인구이동 양상(연령별, 지역별)

최근 3년간 20~30대의 지역간 이동 목적

구분		순이동을 평균(%)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수도권	서울	0.35	-0.92	1.64	0.70	-1.07
	시부	1.46	0.71	0.47	-0.14	0.42
	군부	-0.31	0.24	-0.05	0.20	-0.70
광역시*	시부	-1.38	-0.27	-0.81	0.06	-0.36
	군부	3.93	1.96	0.43	-0.30	1.84
도	시부	-1.75	-0.21	-1.33	-0.40	0.19
	군부	-4.65	-1.27	-2.26	-0.90	-0.22

최근 3년간 50~60대의 지역간 이동 목적

구분		순이동을 평균(%)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수도권	서울	-1.55	-0.95	-0.18	0.03	-0.45
	시부	0.82	0.59	0.01	-0.01	0.23
	군부	2.57	1.88	0.24	0.01	0.44
광역시*	시부	-0.86	-0.39	-0.19	0	-0.28
	군부	3.36	2.11	0.40	0	0.85
도	시부	0.51	0.21	0.22	0	0.08
	군부	1.43	0.40	0.52	-0.01	0.52

주 1: 같은 지역 유형별 순이동을 평균 산출 *인천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주 2: (순이동자수 ÷ 총인구수) × 100이면 사회적이동으로 인구 증가/−이면 사회적이동으로 인구 감소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8~2020년) 재구성

출처: 차미숙외(2021, 행정안전부)

3) 지방소멸 위기와 장래인구추계 전망

국토연구원(2020)과 감사원(2021)에 따르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2020)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인구집중도가 2020년 50.1%에서 2070년에는 5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2021)¹⁷⁾은 합계출산율 0.98명 가정하에 소멸 고위험지역이 12개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2117년에는 서울 강남구 등 8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2021년 12월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2020~2070)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정점이 2020년(5184만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은 인구정점을 2028년 즈음으로 전망해왔는데, 인구정점 시기가 2020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졌다.

나. 지방소멸 대응 현실과 과제

1)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과 한계

우리나라는 인구대체수준이었던 1983년도 한참 지난 1996년에야 산아제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였다. 이후 별다른 정책 대응이 없다가 2005년에서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설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왔다. 이후 4차례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해왔다. 그리고 2019년 범부처

17) 감사원은 총인구도 5,136만 명(2017년)→ 4,771만 명(2047년)→ 3,689만 명(2067년)→ 1,510만 명으로 전망하고, 수도권 인구는 49.6%→51.6%→52.1%→5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감사원, 2021).

인구정책TF를 구성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 영향과 정책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2021)이 수행한 전문가와 정책실무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하여 현행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의 효과에 대해 ‘효과 없음’이 67%에 달하고, 정책 효과가 낮을 것으로는 이유로 ‘지역 현실과 괴리된 정책 추진’ ‘수도권 집중 유발정책의 지속 추진’ ‘잘못된 지방소멸 원인 진단’ 등을 꼽았다.

2021년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89곳 지정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2022~2031)을 마련하여 향후 10년간 연 1조원씩 지원할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2) 지자체 차원의 지방소멸 대응 현황과 과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국고보조사업 추진으로 지자체에서도 청년층 위주의 저출산, 고령 사회정책에 해당하는 시범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광역 및 기초지자체 대상의 조사 결과, 지방소멸 대응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임신부, 이동, 청소년 위주이며, 지원 내용은 보육, 일자리, 귀농귀촌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일자리 창출 등 단일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 이동, 의료, 교육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이 미비하여 정착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지역 이주 및 정착단계에서 지역주민이나 지역 청년들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인 정착과 이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지원시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탐색-이주-정착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인 지원시책 발굴 및 추진,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장년, 노년, 여성, 외국인 등으로 생애주기 확장과 사회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을 한곳에서 지내는 사회(place-bound tradition)에서, 인생주기와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사회(time-bound tradition)로의 전환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3)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심층 조사와 시사점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 사례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벤치마킹 요소와 개선과제,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였다. 2021년 4~9월 동안 22곳의 추진사례(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전입 및 정주여건)와 심층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그림 3-29]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심층조사 대상

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전입·정주·복합
① 함양 작은학교살리기 (서하초등학교)	⑥ 안산 마을주치의	⑧ 의성 스마트팜 창농 지원	⑮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② 곡성 농촌유학 (오산초등학교)	⑦ 홍성 마을주치의	⑨ 홍성 젊은협업농장	⑯ 의성에서 한달살기(청춘구 행복동)
③ 지자체-지역대학 협력 (영남대)		⑩ 문경 리플레이스&화수현	⑰ 문경 달빛탐사대
④ 기초지자체-전문대학 협력(거창 송강기대학)		⑪ 목포 팬텀아마울	⑱ 곡성 청춘작당
⑤ 논산 KT&G 상상마당		⑫ 과산 자연드림파크	⑲ 보성 천연염색공예관
		⑬ 넥스트로컬 제주	⑳ 빈집활용 한달살기
		⑭ 서천 삶기술 학교	㉑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㉒ 공주 청년마을만들기

출처: 차미숙외(2021,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심층 조사를 통한 시사점과 검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발전 중장기 전략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시책 추진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도록 한다. 현재 추진사례 대부분이 개별 단위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 이주와 정착을 유도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교육-생활 등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 지원시책이 청년층 위주와 한달살기 등 지역탐색 단계에 치중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지역탐색 단계 이후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져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계적이고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는 청년, 신중년, 노년,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 추진 주체가 활약할 수 있도록 세대조화 및 통합형 지원시책의 발굴과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외지 청년의 지역 이주와 정착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 청년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방소멸과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함께 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재택근무 증대 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의 확산과 4도3촌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2지역거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인구의 확충을 위한 정책적 상상력이 요구된다.¹⁸⁾

18) 일본은 2지역거주와 관계인구 시범사업 추진, 프랑스는 2지역거주와 제3의 공간 시책 추진, 독일은 복수주소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1)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력 제고 위주의 기존 인구사회정책 접근을 탈피하여 지역발전정책과의 정책 융합(policy mix)을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자체가 주도하여 특성적인 지원시책 발굴 및 통합적인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등 정책 추진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 및 적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을 지향점으로 삼고,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목표는 첫째, 활력 있는 지역 만들기, 둘째, 동등한 삶의 질 구현, 셋째, 자립적인 지역 만들기로 삼았다. 세 가지 목표에 따라 5개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그림 3-30]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출처: 차미숙외(2022a)

첫째는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 실현 전략이다. 지방의 보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 출산장려 국가책임제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

자체 간 출혈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인구사회정책을 추진하되, 도시와 농산어촌 등은 지역 지원과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내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우수인재의 양성, 의료 및 건강인프라 조성¹⁹⁾이 필요하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의 여건을 반영하여 방문진료사업 확대와 마을주치의 도입 등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마을 만들기를 제안하였다.

둘째는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 전략이다. 재택근무, 4도3촌, 한달살기,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평생 한곳에서 사는 사회에서 인생 주기와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의 생활인구 및 관계 인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다지역 거주 등 유연 거주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사회·경제활력을 증진하도록 복수주소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이다. 농림축산어업의 브랜드화와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창출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의 산업기반과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기업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는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 전략이다. 일자리, 관광행태를 기준으로 유연한 생활권의 설정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시 운영경비 인센티브 제공, 도-농간 교류와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과소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생활 서비스의 적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는 지방 청년의 유입으로 활력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및 지방 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류 촉진과 상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는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 강화 전략이다.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앙정부 주도와 지방의 국고보조금 의존 행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방소멸의 현상인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계획 수립과 중앙-지방간 협약 체결, 계획 단위 포괄 보조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으로 지방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기반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해야 한다.

19) 기대수명은 서울 83.3세, 전남 80.7세로 2.6년의 격차를 보이며, 건강수명은 서울(69.7세)이 경남(64.3세)보다 5.3세가 길며, 농촌지역의 사망률이 도시지역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수정 외, 2021)

3. 정책적 시사점

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행 방향

19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되어 오랫동안 전개되면서 국정운영 정책 결정이나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소멸 위기 인식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소멸 위기는 해소는 가능할까? 한두 가지의 정책 수단으로 오랫동안 누적되어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단기간에 원하는 정책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고 현재의 위기를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면, 결국 국가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실행을 통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에 입각한 정책 실행이 요구된다. 첫째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토대로 적절한 지원시책과 맞춤형 특례를 적용하여 인구감소 시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지방의 주도성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지원시책과 특례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인구감소라는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대와 협력체계의 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림 3-31] 지방소멸 대응 정책 실행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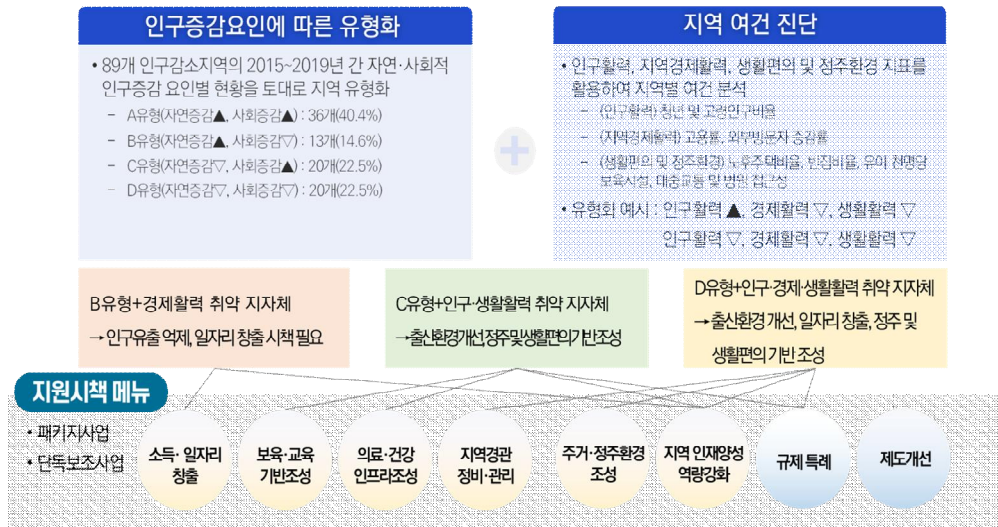
출처: 차미숙외(2021, 행정안전부)

나. 지역 주도의 분권형 추진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재원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연계(우대 합의), 지방교부세, 고향사랑기부금 등이 있다. 이들 재원을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적절한 지원시책과 맞춤형 계획의 수립 및 지역 주도의 책임 있는 실행이 요

구된다. 중앙정부는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지원과 중앙-지방 협약, 지방 소멸 위기 진단 및 계획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실증기반 강화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그림 3-32] 지역 주도의 맞춤형 지원 방안 (예시)



출처: 차미숙외(2021,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제도 개선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대부분 인구성장기에 인구 규모나 연령 기준 등을 설정하여 지원해왔던 시책이나 제도들이 인구감소 시대로 접어들면서 불합리한 상황과 불편함 마저 초래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및 정책 제언



제1절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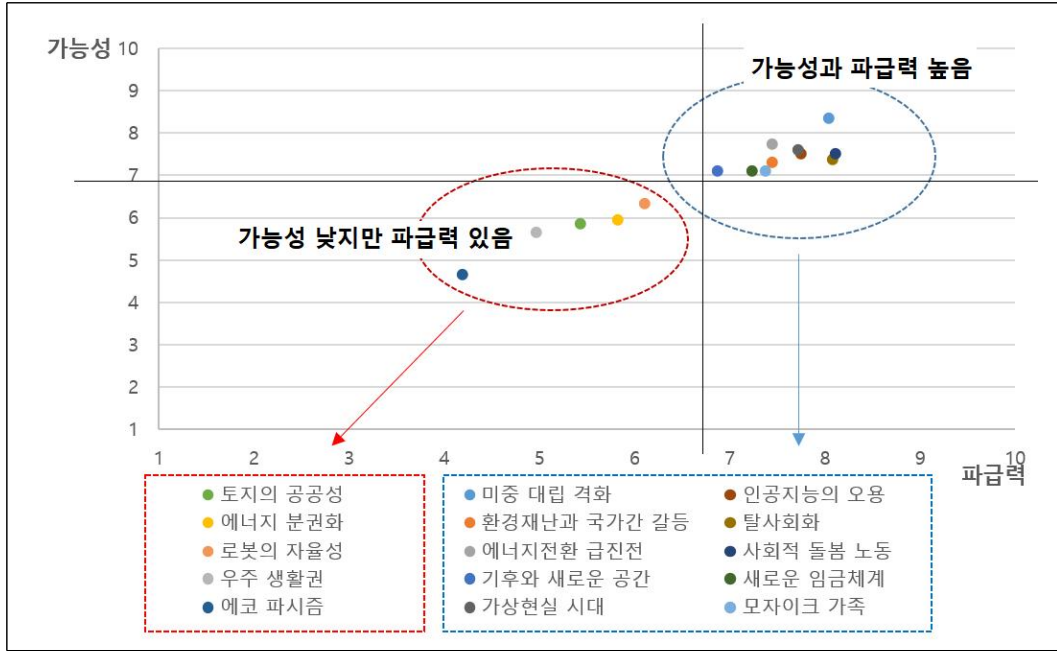
1.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15선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는 장차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킬 이슈를 말한다(Ansoff, 1984; Hiltunen, 2008). 이런 이슈들은 5-10년 후 지배적 트렌드로 성장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ivo-oja, 2012). 미래는 과거, 현재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미래는 5년 이상을 뜻한다. 달라지는 양태는 표면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Mendonca et. al., 2004). 질적, 구조적 변화는 과거의 누적된 갈등, 대립, 고통이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 환경, 경제, 정치, 과학기술적 조건과 결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머징 이슈 연구는 다양한 사회변동을 이해하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관점의 전환에 실패하면, 변화에 역공을 당한다. 예를 들면, 1980년대 세계적 환경파괴나 기후변화 경고에 대응하지 못해 기후 위기 시대를 맞이한 사례가 있다. 1990년대 한국 저출산 징조에 대응하지 못해 인구변화 대응에 실패한 것도 주요 사례다. 변화를 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전략과 정책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우선순위의 재조정)할 수 있는 것도 이머징 이슈 연구의 장점으로, 본 절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2022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를 다루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이머징 키워드 추출했다. 신규성, 확장성, 타 분야 파급효과를 고려했다(Cozzen et. al., 2010; Rotolo et. al., 2015). 이런 노력과 병행,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송민 교수 연구팀과 또 다른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이머징 키워드를 도출했다. 두 연구팀이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면서 최종 이머징 키워드를 발굴한 것이다. 이 키워드와 맥락적 정보(연관 키워드, 키워드가 포함된 문단, 저널 이름 등)를 7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키워드가 내포하는 이머징 이슈 제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키워드 고려 없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를 제기하도록 요청했다. 키워드를 통한 이머징 이슈와 전문가 스스로 제기한 이머징 이슈를 분석하고 통합했다. 전문가 42인을 대상으로 가능성과 파급력을 기준으로 도출한 15개 이머징 이슈는 다음과 같다.

20) 본 절은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중 “박성원(2021),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그림 4-1] 가능성과 파급력 순위로 분류한 이머징 이슈



출처: 박성원 외(2021), 이머징 이슈 연구

가.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 10선 및 주요 내용

1)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가능성 8, 파급력 8.3)

- ① 경제와 안보를 엮어 미국이 반도체, 희토류, 의약품, 배터리 등에서 동맹국의 연합을 강조
- ②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보호주의의 진영화’ 가속
- ③ 미국+동맹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 등장으로 기업들의 가치사슬 전략 변경

2) 환경재난의 빈발, 국가간 갈등 확대(가능성 7.5, 파급력 7.3)

- 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던 환경 재난이 국가 간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
- ② 중국의 황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
- ③ 환경 재난의 책임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의 갈등

3)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가능성 7.4, 파급력 7.7)

- ①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에너지 전환이 급속히 전개됨
- ② 독일 2018년 세계 최초 수소열차 상용화, 유럽 2040년 경유 열차 퇴출
- ③ 풍력 날개,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수소탱크 등에서 폐기물 증가는 우려

4)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가능성 6.9, 파급력 7.1)

- ① 폭염, 폭우, 폭풍, 산불에 대비하는 새로운 건축물, 안전가옥 등장
- ②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하는 도시재생법안 마련으로 도시의 구조 변화
- ③ 재난이 일상화된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에 재난 결합시켜서 안전공간 구축

5) 가상현실의 급진전(가능성 7.7, 파급력 7.6)

- ① 2026년 세계 35억명 5G 가입 전망, 인공위성을 통한 6G 시대 예고
- ②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界
- ③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게임 로블록스, 미국 16세 미만 청소년 55% 가입

6)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가능성 7.6, 파급력 7.5)

- ① AI기술로 개인의 얼굴 조작, 합성 포르노 확산, 유력 정치인의 메시지도 조작
- ② 모든 인간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 인공지능의 분석 자료가 됨
- ③ AI 의견에 의존하면서 기존 미디어의 공론장 역할 축소, 타자 혐오 증가

7) 탈사회화(가능성 8.1, 파급력 7.4)

- ① 1인가구 증가, 전일제 노동 감소,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원격근무 확대
- ② 개별화된 제품과 소비 확산으로 즉시성(즉각 욕구해결)과 개인주의 강화
- ③ 이런 경향은 개인의 탈사회화이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감소를 의미
- ④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어 돌봄의 양극화도 초래

8)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가능성 8.1, 파급력 7.5)

- ① 초고령 노인, 감염병 환자, 비대면 유아/아동 돌봄 등의 수요 증가
- ② 혈연 중심 가족 관계에 균열, 개인적 차원에서 돌봄 대응이 어려워짐
- ③ 정신건강 악화로 영국과 일본, 고독부 장관(Ministry of Loneliness) 임명

9)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능성 7.2, 파급력 7.1)

- ① 평균수명 70대, 3차산업사회 모델이 근간인 현재 임금체계는 변화 불가피
- ② 인력 운용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임금 줄이고 정년 늘리는 방식 제기
- ③ 유효수요의 부족, 만성적 디플레이션, 자동화를 통한 인력 감소 고려

10)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가능성 7.4, 파급력 7.1)

- ① 1인 가구, 탈북민,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혼인률과 출산률 급감
- ②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③ 공교육 및 복지제도가 다양성, 포용성, 이질성, 연대, 돌봄의 가치를 중시

나.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 5선 및 주요 내용

1) 토지의 공공성 부각(가능성 5.4, 파급력 5.9)

- ① 인구소멸 지역의 증가로 중앙정부에서 관리해야하는 토지 증가
- ② 농산림/하천/갯벌 등 지켜야 할 토지의 공공성이 생태순환시스템의 관점에서 부각
- ③ 토지가격 증가로 빈부격차 심화도 토지의 공공성 논의에 한몫

2)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가능성 5.8, 파급력 6)

- ① 에너지 자립, 자원 순환 등이 추구하는 분산화는 자치분권화와 결합
- ② 수익성 낮지만 필요하다면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례 증가
- ③ 농촌형 태양광사업에 도농, 지역주민, 농민단체 간에도 갈등 빈번
- ④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의 자치 분권이 연결

3)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가능성 6.1, 파급력 6.3)

- ① 인간형 로봇, 고령자 돕는 로봇, 군사용 로봇, 우주개발 로봇 등장
- ②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AI도 편견에 쌓여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
- ③ 규칙 기반 방식이 아닌 경우, 임의의 상황에서 AI의 예측 불가능한 결과
- ④ 로봇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면서 로봇의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4) 우주 생활권 진입(가능성 5, 파급력 5.7)

- ① 로켓 기술의 비약적 발전, 우주 진출의 장애물 감소, 우주를 넘나드는 초고속 운송수단
- ② 우주를 인류의 생활권으로 재인식, 이에 우주 지정학도 등장
- ③ 중국 우주정거장 구축(22년), 미국 아르테미스 달 상주 프로젝트(28년)

5) 에코 파시즘(가능성 4.2, 파급력 4.6)

- ① 탄소 저감, 기후위기 극복 어렵게 되면 극단적 사상인 '에코 파시즘' 부상
- ② 에코 파시즘은 생태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극단주의의 일종
- ③ 극단적 동물권 옹호론자들을 중심으로 인간에 대한 혐오의 징후가 보임

2. 시사점

가능성과 파급력 높은 10가지 이슈는 현재 일어나고 있으며 장차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기술경쟁으로 치열한 대립을 보일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에너지 전환은 급전개되며 이에 따른 혼란과 새로운 기회의 혼재할 것이다. 인공지능기술이 야기할 새로운 불확실성과 사회적 우려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주의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립, 새로운 약자의 등장, 전통적 가족 관계의 와해가 예상된다. 10개 이슈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다.

〈표 4-1〉 위기의 다층화 진행 및 주요 내용

위기의 다층화	주요 내용 및 미래 변화
지구	기후변화로 인류세의 위기, 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 다양, 해양 오염 및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등) 증가
국제관계	미국과 중국의 경쟁 격화, 남중국해 전쟁 가능성, 이 지역은 동아시아의 무역통로로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은 위기감 가중
국가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이후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안 미비, 국가적 난제(초고령화, 양극화 등)의 대안도 불명확
개인	청년 실업 증가, 중고교 학업 포기(탈학교 학생 전국 42만명), 개인의 고립감과 우울증 심화

출처: 박성원 외(2021), 이머징 이슈 연구

한편, 가능성은 작지만 파급력 있는 이슈 5선을 종합해보면 공공의 영역, 기술의 영향력, 인간의 관계는 확대 경향을 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보존의 정치적 반동으로 에코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이 예상된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공성, 사회적 합의, 분권화는 부각될 것이다. 기술의 급진적 전개에 따라 안전지대의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를 인간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새로운 흐름도 예상할 수 있다.

본 결과에서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프레임이 관찰되는데, 이는 개인주의 프레임의 우세가 예견된다. 또한, 개인이익 대 공공이익 프레임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프레임에 따르면 개인이익의 프레임이 우세할 것으로 예견된다.

〈표 4-2〉 개인 대 집단(공공) 프레임 비교

프레임	비교 내용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탈사회화, 모자이크 가족 (모두 파급력 높음)	에코파시즘 (파급력 상대적으로 낮음)
개인이익 대 공공이익	개인이익	공공이익
	새로운 임금체계 구축, 가상현실 시대 (파급력 높음)	토지의 공공성 확대, 우주생활권, 로봇의 자율성 논란 (파급력 상대적으로 낮음)

출처: 박성원 외(2021), 이머징 이슈 연구

이슈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를 꼽으면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어, 모든 분야에서 개인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공적 해결 거버넌스의 미비 때문이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다양화가 예상된다. 모든 분야에서 위기가 발생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위기의 일상화, 불안의 상시화를 경험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환경폐기물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술적 진보의 이면이 다양하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을 예고한다.

제2절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결과를 기초로 정책 분야별로 2022년의 국가 의제를 도출하여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과 학계 및 연구계에서 매년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전망 연구를 집대성하여 전망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융합·학제적인 현황 진단은 물론, 이를 기초로 통합적·미래예견적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했다. 즉, 본 연구는 국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의 정책 전망을 통해, 국민에 부응하는 국가 정책 연구 방향을 수립하고 국책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 제고를 위한 사회적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5대 분과, 국내 차원에서의 5대 분과를 선정하여 각 분과에 따른 주요 주제 및 이슈를 발굴하였다. 글로벌 5대 분과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① 세계 경제·통상, ② 평화·안보, ③ 환경·에너지, ④ 노동, ⑤ 플랫폼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국내 5대 분과는 현재 국내에서 관찰 가능한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쟁점과 소관 연구기관 각각의 특성 및 역량에 기반하여 ① 거시경제·산업, ② 보건·복지, ③ 청년, ④ 인력·교육, ⑤ 국토·교통 분야를 선정하였다. 최적의 전망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 최고 권위의 분야별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분과별 전망에 대한 대국민 확산 활동으로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를 개최하였다.

분야별 2022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전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22 글로벌 전망

1) 세계 경제·통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11월 시점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는 다음과 같다.²¹⁾ 먼저 2021년 세계 경제는 5.9% 성장한 후 2022년에는 4.6% 성장하여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국별로 2022년 성장률을 보면, 미국 3.8%, 유로 4.6%, 일본 3.3%, 중국 5.5%, 인도 7.9%, 아세안 5.2%, 러시아 2.9%, 브라질 1.5%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세가 2022년에도 지속되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 이유는 2022년 성장률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 성장률보다 대부분 국가에서 더 높게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에 비해 2022년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중국경제가 정부의 각종 규제에 인하여 성장세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나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2019년에 비해 2022년에 더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저효과로 인하여 성장세가 급반등한 2021년에 비해 2022년 성장률이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본과 아세안 5 국가에서는 2022년에 더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었다. 이들 국가에서는 코로나19가 2021년에 크게 확산하면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억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22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망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9%에서 3.3% 사이에 있다. 국내기관인 한국은행과 KDI는 3.0%를 전망하였고 IMF는 3.3%로 좀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OECD는 2.9%로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하였다. 다만 전망 시기에 따른 전망치의 추이를 보면 최근에 올수록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2) 평화·안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경쟁은 전통적인 군사·경제 분야를 넘어서, 그 이면에서 미래국력을 좌우할 기술경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그 기술경쟁의 양상도 전통적인 자원 권력 게임을 넘어서 좀 더 복잡한 ‘신흥권력’ 게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부 분야별로 경쟁과 갈등 및 협력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이며, 좀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경쟁의 주체가 더 이상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미 양국의 거대 테크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은 전통적인 ‘국제정치(國際政治, Inter-national politics)’라기보다는,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벌이는 일종의 ‘망제정치(網際政治, inter-network politics)’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결과로 발생할 글로벌 권력구조의 변환도 과거와 같은 ‘세력전이’의 양상이라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세력망 재편’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 경쟁이 ‘단판의 복싱 게임’이

21) 세계경제전망은 2022년에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에 진입하고 신흥국에도 백신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며 조화로운 통화정책 정상화로 급격한 국제자본이동이 억제되고 유가는 60달러대를 유지한다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니라 ‘올림픽 종합 게임’의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코로나19 사태는 미중경쟁의 가속화가 초래할 미래 국제질서의 모습을 앞당겨 보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미중 양국이 벌이는 체제경쟁의 양상을 부각시켰다. 미·중 체제경쟁은 이전에도 무역 분야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그 성격을 변화시켰다. 자국 정치경제 체제의 특수성과 우월성을 과시하는 경쟁에서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 즉 적합력(fitness)과 복원력(resilience)의 경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봉쇄 모델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 및 회복의 전 과정에 걸친 거버넌스 역량이 위기 해결 모델의 관건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 리더십의 판단과 결단력, 정보의 공개와 투명성 등도 쟁점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모두가 이러한 차이점을 상대국에 대한 체제 우월성의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활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환경·에너지

21세기 말(2081~2100년), 전지구 평균기온은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995~2014) 대비 +1.9 ~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전반기에 나타날 평균기온 변화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0.57℃/10년으로 유사하나, 중반기 이후 기온상승 경향은 온실가스 배출정도의 영향을 받아,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SSP5-8.5에서 +0.66℃/10년으로 가장 크게 전망된다. IPCC의 AR5(5th Assessment Reports)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아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데 이어, 이번 AR6(6th Assessment Reports)에서는 ‘과학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파리협정 목표 1.5℃ 또는 2℃를 달성하더라도, 50년 빈도 이상기상은 8.6배 또는 13.9배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2100년까지 지구온도 1.5℃ 상승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다면 21세기 말 지구의 평균기온이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노동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집체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은 코로나19로부터 노동력을 보호하면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제도화 가능성을 가진 근무제도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가 쉽사리 종식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제2 또는 제3의 팬데믹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 공간에서’, ‘다같이’, ‘같은 시간에’ 등이 전제된 보편적인 일하는 방식이 무너지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도

래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사업체들은 재택근무제를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입된 한시적인 제도로 보고 있는 경향도 확인되지만, 향후 재택근무제를 한 가지 근무방식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택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업무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상사와의 의사소통 및 협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5) 플랫폼

각국 정부는 팬데믹 극복 수단으로 디지털 경제를 활용하면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중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산업 융복합으로 인한 기존 사업 영역이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 역할은 GAFA로 대표되는 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이들이 갖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최근 경쟁법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테크 대기업들의 지배력과 승자독식 구조에 대한 문제 인식,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을 위한 경쟁 당국 중심의 규율 강화 필요성, 디지털 경제의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나 그 효과들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비교형량이 쉽지 않아 규제 도입에 있어서 여전히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방침에 대한 추이가 주목된다.

나. 2022 국내 전망

1) 거시경제·산업

2022년 13대 주력산업²²⁾ 수출은 세계수요 회복과 수출단가 상승으로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저효과 및 동남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반도체 수급 불균형, 중국 경기둔화 등의 제약 요인으로 증가 폭은 둔화하여 전년(25.6%)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는 성장세가 지속되나 조선은 수주 부족으로 감소세로 전환하여, 기계산업군 전체적으로는 2.2%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수출은 전방산업 수요 증대로 대부분 산업에서 성장세가 지속되나, 기저효과로 전년(41.2%) 대비 4.6% 증가하여 증가폭은 축소될 전망이다. IT산업군 수출은 가전을 제외한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3.3% 증가가 예상되나, 전년(22.1%)에 비하면 증가세는 크게

22)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정유, 석유화학, 섬유, 바이오헬스, 정보통신기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3대 주력산업 내수는 수송기기(자동차, 조선), 가전, 디스플레이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세를 유지겠지만, 성장 폭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일반기계는 수요산업 설비 확대로 내수 증가세가 예상되나, 자동차와 조선은 수요 부족과 발주 감소로 내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내수는 전방산업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2021년 내수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폭은 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군 내수는 가전,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수요 증대가 IT산업군 전체 내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3대 주력산업 수입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가 하락 및 전년 큰 폭의 수입 증가(22.1%)에 따른 기저효과로 2.8%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조선은 해외 인도량 및 기자재 수입이 감소하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입이 늘어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재산업군 수입은 수입단가 조정과 전년 수입액 급증(39.7%)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IT산업군은 가전과 디스플레이 수입이 감소하지만,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내수 확대가 IT산업군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하여 전년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13대 주력산업 생산은 코로나19로 건조물량이 감소한 조선산업과 해외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전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 및 내수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산업군의 경우 자동차와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선 생산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주절벽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재산업군 생산은 내수와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로 모든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IT산업군에서는 가전 생산은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감소하지만, 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생산은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보건·복지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이 2022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3년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25년부터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첫 해에는 6개 시·군·구에 예산 1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세 가지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은 한국 복지국가의 '마지막 미싱 피스'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가 클 것이다. 한국은 OECD 국

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와 같은 노동 문화에는 아파도 쉬지 못하는 문화적 변수와 상병수당 부재라는 제도적 변수가 작용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은 한국에서의 노동 문화 및 일-가정 양립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청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인 만 19세~34세 인구수는 2020년 1,089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는 496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의 핵심 세대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며, 노력에 비해 큰 혜택을 받거나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단, 노인세대에 대해서는 지혜로움과 그만큼 존경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정치적 영향력이 과대하고 특히 다른 세대에 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여러 노년층 복지 제도의 시행에 비하여 부족한 청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청년들의 사회·경제 실태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면 현시대의 청년들은 단적으로 사회적 격차는 인정하지만 기획의 균등 부여보다는 진입 경쟁이 공정한 사회를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성 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벼락부자는 되지 못해도 벼락거지는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경제적 구조로 인해 사회 첫 진출 때부터 사회적 약자로 몰리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4) 인력·교육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사회·경제적 변화 혹은 보다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이뤄져 왔다. 크게는 5.31 교육개혁에서 시작하여 최근 4차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전환과 함께 Post 5.31 차원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논의가 그것이다. 교육 패러다임 전환 논의는 주로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 패러다임 전환 논의에서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의 등장은 2020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의 방향과 핵심과제’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발표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학습자의 특성, 상황, 수준, 정서에 맞춘 개별화 교육을 위한 ‘초개인화 학습환경’으로, 이를 위한 기반으로 데이터와 지능화를 강조하고 있다. 학습분석을 통한 초개인화는 결국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관

점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변화는 학습 성과의 예측과 처방(모니터링과 예측), 학습의 최적 경로 발견과 효율성 증대(개별화), 학습 과정의 평가와 즉각적 피드백(평가와 피드백), 학습환경의 최적화(개인화된 적응적 교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국토·교통

2000~2022년 동안 우리나라 총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51곳(66%)의 시·군·구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고, 30% 이상 감소한 지자체도 11곳에 달했다. 또한 1975년 이래 인구정점 대비 현재 절반 이상이나 인구가 감소한 지방 중소도시가 발생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인구정점인구가 12만 명에 비해 2021년 인구가 4만 명으로 감소하여 약 3분의 일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이외에, 생산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와 고령화, 지역적인 편재로 인해 지방의 인구구조 취약성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첫째, 2000~2020년 동안 지자체 인구규모별 변화 분석에 따르면 인구 3만 미만의 시군구가 6에서 18개로 세 배가 증가한 반면, 100만명 이상의 시군구가 1개에서 4개로 증가하였고, 인구1만명 미만의 군이 발생하였다. 둘째, 1인가구 증가로 20~30대 청년 1인가구²³⁾는 서울시 등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 1인가구²⁴⁾는 지방에 집중적으로 분포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방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구원(2020)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인구집중도가 2020년 50.1%에서 2070년에는 52.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원(2021)²⁵⁾은 합계출산율 0.98명 가정하에 소멸 고위험지역이 12개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57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2117년에는 서울 강남구 등 8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이 소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런데 2021년 12월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2020~2070)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정점이 2020년(5,184만 명)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은 인구정점을 2028년 즈음으로 전망해왔는데, 인구정점 시기가 2020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졌다.

23) 20~30대 청년1인가구는 서울시 관악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마포구 등으로 서울시에 집중해있음

24) 65세 이상 고령1인가구는 전남 고흥군, 경남 합천군, 경남 의령군 등으로 군 단위에서 주로 나타남

25) 감사원은 총인구도 5,136만 명(2017)→ 4,771만 명(2047년)→ 3,689만 명(2067년)→ 1,510만 명으로 전망하고, 수도권 인구는 49.6%→51.6%→52.1%→52.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감사원, 2021).

2. 시사점

2022년의 글로벌 전망과 국내 전망을 SWOT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글로벌 전망은 위기(Threat)이자 기회(Opportunity)로 작용하는 외부 환경요소이다. 가령, 코로나19에 의한 민간 경제에의 타격과 기후변화는 전 세계 공통적인 위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거시경제 부문에서 반도체 수급의 불안정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이었던 점에서 위기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미-중 경쟁의 가속화에 따른 평화·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비대면 노동 방식으로의 변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낮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다. 국내 전망은 강점(Strength)이자 약점(Weakness)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 문제, 지방소멸 문제는 대학교육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향후 미래 국정운영 방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추세에 맞춘 초개인화 교육이나 상병수당의 도입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되나, 앞서 언급한 부정적인 요소에 비해서는 다소 약한 실정이다.

제3절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에 따른 정책 제언

1. 경제·통상

가. 디지털 전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제품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요구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였다. 코로나 대응 관련 지출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체질을 형성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도 매우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이 이러한 경제체질 변화의 두드러진 분야인데 각국 정부는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전환을 위한 막대한 재정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제적 투자가 도중에 좌초될 우려가 있다. 미국은 공화당 및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2022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프라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다. 신흥국은 재정 여력의 약화로 선제적 투자를 할 여유가 적고 투자하더라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운 제품 수요가 창출되고 신산업이 출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공급망 관리, 제품 고급화 및 차별화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공급망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유망 기술·제품 개발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요구된다.

나. 환경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모색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탄소중립정책을 천명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녹색전환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을 도모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선점하려는 경쟁을 촉발하고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녹색경제에 필요한 희토류는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지정학적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 글로벌 공급망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원자재 가격 급등의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친환경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제도 개선과 생산공정 디지털 전환, 친환경제품 개

발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 및 대응이 요구된다.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대비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글로벌한 이슈의 해결에는 국제협력이 긴요하나 이러한 국제협력이 원활히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백신 격차는 그 단적인 예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대립과 반목은 백신 이외에도 매우 많다. 비중 갈등의 고조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국제협력을 지체시킬 것이다.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의 속도 조절, 글로벌 공급망 등 다양하다. 향후 국제협력의 지연으로 인하여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미-중 무역·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품에 대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여 원료·소재의 대중 의존도 경감, 수출입선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강화, 공급망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생태계 강화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라.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 역할 강화 필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정부 부채 규모가 늘거나 증세를 해야 하는 트릴레마(trilemma)²⁶⁾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직접세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방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특히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과학기술·ICT

가.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책 수립

국가 ICT정책에 대한 회고적인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 전략 기초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과거의 공급자 중심적이고 산업진흥에 국한된 ICT 정책에서 벗어나, 관련 정책 집단의 디지털 리더십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정책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안전망 구성, 디지털 신뢰 기반 구축, 디지털 포용 기반 강화 등을 통한 디지털 균형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26) 하나의 정책목표를 이루려다 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상태

포스트 디지털 정책이 필요하다. 사이버 팬데믹 대비, ICT 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 보안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²⁷⁾의 태도에 기반을 둔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나. 디지털 양극화 해소

코로나19는 디지털 비대면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개인의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기업 활동의 격차 발생 또는 지역의 격차 발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다시 개인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디지털 기술에 의해 구조화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근무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여 디지털이 급속하게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 글로벌 기술 패권 대응

미국, 중국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 체제를 갖춘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보 관점에서 산업·기술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이를 적절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협력 국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주도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와 비중 경쟁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한국의 대전략은 무엇보다도 먼저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같은 이분법적 발상을 넘어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기타 다양한 사안에서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이해관계의 구도를 파악하고, 이슈마다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관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조율’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이 발휘할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 이분법적 프레임을 넘어서라는 것이 적당하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라는 주문은 아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수준의 외교원칙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여성·청년

가. 젠더 불공정 해소 및 저출산 사회 대비

젠더 공정성 관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

27) 기존 기술에 대한 강한 신뢰를 깨고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의해 새로이 나타나는 위협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

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남녀 간 임금·고용 격차가 가장 크고, 기업 내 여성 고위 임원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로,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변화하는 임신·출산 양상(인공수정, 출산 부모와 양육 부모가 다른 경우 등)에 따른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현상을 출산 자체의 행위보다는 남녀 불평등 문제(여성 경제활동 비율)로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OECD 연구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10% 오를수록 합계 출산율이 12% 증가한다.

나. 기성세대와는 다른 청년의 사회적 관점 이해

현재 청년이 직면한 삶의 문제는 단순히 소득과 고용이 확보로 가능하다는 오래된 관념을 혁파해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즉, 오랜 청년 취업난은 청년의 일과 삶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소득지원정책이나 고용 정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취업, 소득, 주거, 교육, 건강, 문화 등 다차원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인구 및 교육·훈련 분야에서는 시도별 이주배경 청년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및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청년 내일채움 공제 확대 및 개선, 창업대학 지정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 및 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국가건강검진 내실화, 청년 정신건강지원 사업 확대, 청년층 특화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등이 필요하다. 넷째, 관계 및 참여 분야에서는 청년 정책참여 거버넌스 제도화 및 확대, 청년 대상 온라인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카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주택공급 확대, 세어하우스 공급 개선, 청년 주거상담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법·제도 기반 분야에서는 생애 전반기 법령체계 연계, 국가청년진흥원 설치 및 운영, 청년지원전담공무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다. 공정 이슈에 대한 재논의

공정의 문제는 추상성·복잡성이 높아 이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특히 공정 관련한 논의는 일단 기회 균등함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 정의, 평등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기대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주요 집단별로 논의되고 있는 공정이 어떤 공통점과 차별점을 갖는지 미시적이고 질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4. 노동·교육

가.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긴 노동시간·노동시장 양극화·위험한 작업장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노동과 같은 노동환경과 일자리 문화 변화의 흐름을 정부에서 세밀하게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주체적인 노사문화를 장려하고 정부 기능의 축소 및 전문화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즉,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노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기관은 시장 실패나 제도의 한계점을 탐색하고 유연한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나. 재택근무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

우선 재택근무제도 도입 시 기존의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과노동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재택근무가 코로나19로 인해 시작된 급작스런 변화이기는 하지만, 어느 제도 보다 제도 시행 취지, 제도 활용 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재택근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프라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위한 환경정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을 조직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재택근무는 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것으로, 현재는 이로 인해 협업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을 조직하는 방식을 바꾸면 협업 가능성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흐름의 변화, 즉, 작업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리 방향성과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택근무제를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량’을 바탕으로 하는 노동을 통해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과정 관리와 통제 중심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조직관리를 멤버십이 아닌 직무 단위로 해야 하고 일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관리가 필요하다.

다.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한 생태계적인 접근 필요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이 필요하며, 요소 간의 균형과 함께 그들이 잘 이어지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 정원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미래 사회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AI, 데이터사이언스 등의 전공에 한해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국토·교통

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력 제고 위주의 기존 인구사회정책 접근을 탈피하여 지역발전정책과의 정책 융합(policy mix)을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공간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자체가 주도하여 특성적인 지원시책 발굴 및 통합적인 접근(place-based integrated approach) 등 정책 추진방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실현해야 한다. 지방의 보육 여건 개선과 관련해 출산장려 국가책임제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된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 간 출혈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사회정책을 추진하되, 도시와 농산어촌 등은 지역 지원과 특성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내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우수인재의 양성, 의료 및 건강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고령화율이 높은 지방의 여건을 반영하여 방문진료사업 확대와 마을 주치의 도입 등을 통해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유출을 억제해야 한다. 재택근무, 4도3촌, 한달살기, 워케이션(work+vacation) 등 평생 한곳에서 사는 사회에서 인생주기와 삶의 추구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의 생활인구 및 관계 인구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다지역 거주 등 유연 거주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사회·경제활력을 증진하도록 복수주거소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업의 브랜드화와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창출로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지역의 산업기반과 구조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또한 기업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일자리, 관광행태를 기준으로 유연한 생활권의 설정과 서비스의 공동 이용시 운영경비 인센티브 제공, 도-농간 교류와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과소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생활 서비스의 적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는 지방 청년의 유입으로 활력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및 지방대도시와 농산어촌 지역 간의 교류 촉진과 상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기반을 강

화해야 한다. 지방소멸을 가속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중앙정부 주도와 지방의 국고보조금 의존 행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계획 수립과 중앙-지방간 협약 체결, 계획 단위 포괄 보조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으로 지방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기반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해야 한다.

나. 사회문제 해결 및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안 모색

인구구조, 양극화, 대전환과 같은 구조적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으나 해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 분야의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도로, 교통, 철도, 항만 등에 대한 집중적인 SOC 투자를 통해 지방 초광역 경제권을 생성함으로써 지방 인구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둘째,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성과 함께 온-디맨드(On-demand)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 제공에 초점을 맞춰 직주근접의 범위 확대로 다양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세대 모빌리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관련 경제·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인적 역량 확보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6. 환경·에너지

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지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환류(Feed back)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지원, 산업계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글래스고 합의’로 국제탄소시장 운영이 합의됨에 따라 NDC 이행 보조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 NDC에서 4.6%p에 해당하는 3,350만톤을 해외감축분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외감축 정책 정비, 국외감축 참여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EU의 국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 확대 등을 서둘러야 한다.

나. 남북 산림협력 추진

글래스고 기후변화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서명하였으며, 정상 연설을 통해 ‘남북 산림협력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산림은 남새밭 확대와 연료용 나무 채취 등으로 크게 훼손되었다. 우리나라의 산림복원 경험을 살려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우리나라의 감축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친환경차와 배터리, 수소경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장려하고, 태양광,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중심에 ‘탄소중립’이 자리 잡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 그리고 참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교육과 언론홍보 또한 매우 중요하며, 탄소포인트 제도와 같은 유인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제2장 2022 글로벌 전망]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1, 제2차 전체회의 발표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 고용노동부, 2019.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김상배, 2020, “코로나19와 신형안보의 복합지정학: 팬데믹의 창발과 세계정치의 변환”, 한국정치학회보, 54(4), pp. 53~81.

김상배, 편. 2021a.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신형권력 경쟁의 세계정치경제』 한울엠플러스.

김상배, 편. 2021b.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한울엠플러스.

노세리·권현지·노용진·박은연·정선욱·김미희, 2021, “비대면 근무방식의 출현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안성배 외, 2021, “2022년 세계경제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종인, 2020, “코로나-19 시대의 사이버 안보”, IIRI Online Series, No.67.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장원준·정만태·심완섭·김미정·송재필,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 연구보고서 2017-856. 산업연구원.

Casti, John, Leena Ilmola, Petri Rouvinen, and Larkku Wilenius, 2011, “Extreme Events. Helsinki: Taloustieto Oy”.

Drozhashchikh, Evgeniia, 2018, “China’s National Space Program and the ‘China Dream’”, Astropolitics, 16(3), pp. 175~186.

Gill, Amandeep Singh, 2019,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 Long View”,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33(2), pp. 169~179.

Gu, Xuewu, et al., 2019, “Geopolitics and Global Race for 5G”, CGS Global Focus, Center of Global Studies, Bonn University.

He, Qisong, 2019, “Space Strateg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 76, pp. 166~180.
- IPCC, 2021, Summary for Policymakers. in 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SPM-29.
- Johns Hopkins Coronavirus Resource Center, <https://coronavirus.jhu.edu/region/brazil>(검색일: 2021. 10. 12.).
- Johnson, Keith and Elias Groll, 2019, "The Improbable Rise of Huawei. How did a Private Chinese Firm Come to Dominate the World's Most Important Emerging Technology?", Foreign Policy.
- Lim, Darren, 2019, "Huawei and the U.S.-China Supply Chain Wars: The Contradictions of a Decoupling Strategy", War on the Rocks.
-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OWID_WRL(검색일: 2021. 10. 24.).
- Scripps 연구소 홈페이지 <https://keelingcurve.ucsd.edu/> (검색일: 2021. 12. 9.).
- UN, 2019, "Digital Economy Report".

[제3장 2022 국내 전망]

-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인구구조 변호 대응실태 I(지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발표자료집.
- 계보경·임완철·박영정·손정은·김정현·박선규·정태준, 2018, "지능형 학습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 API 고도화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용노동부, 2019, "표준취업규칙".
- 관계부처합동, 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2018. 6. 26.).
- 관계부처합동, 2020,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과제".
- 국토연구원, 202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공청회 자료".
- 국토연구원,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실무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김수진·김기태, 2020, "누가 아파도 쉬지 못할까: 우리나라의 병가제도 및 프리젠티즘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 논의에 주는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39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철효·설동훈·홍승권, 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7(2),

- pp. 93~129.
- 김형주·연보라·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노대명 외, 2020,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대학알리미, 각 년도, “학자금 대출 현황”,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9.28.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가활동조사”, <http://kosis.kr>에서 2020.10.5. 인출.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20, “2018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
<https://knhanes.cdc.go.kr>에서 2020. 10. 3. 인출.
- 손찬희, 2021, “고도화된 맞춤형 교육: 초개인화 교육으로의 진화”, 미래정책포커스 2021 겨울호
vol. 31, pp. 16~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손찬희·장혜승·김은영·김성미·이은주·조일현·정광식, 2019, “온라인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지
원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승윤·김기태, 2017,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한국사회정책. 24(4), pp. 113~50.
- 이영훈, 2021, “데이터 기반 개인화 기술”, *1e 매거진*, 28(1), pp. 27~30.
- 차미숙, 2022, “회색 코블스,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 국토 1월호. 국토연구원.
- 차미숙 외, 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
- 차미숙 외, 2022a,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제57권, 국토연구원.
- 차미숙 외, 2022b,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제52권, 국토연구원.
- 최인덕·김진수·공경열, 2005, “주요국의 상병수당 제도 운영 현황 및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 국민
건강보험공단.
-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보도자료.
- 통계청, 각 년도a,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0. 9. 21. 인출.
- 통계청, 각 년도b,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http://kosis.kr>에서 2020. 9. 29. 인출.
- 통계청, 각 년도c, “사회조사,” <http://kosis.kr>에서 2020. 9. 21. 인출.
- 하수정 외, 2021, “지역 불평등: 현황과 개선방안(부문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4, “Out of office: An overview of workplace absenteeism in
Europe (London)”.
- OECD, 2021, “Health Status: Absence from work due to illnes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23>에서 2021. 10. 19. 인출.
- Scheil-Adlung, X., Sandner, L., 2010, “Evidence on paid sick leave: Observations in times of
crisis”, *Intereconomics*, ISSN 1613-964X, Springer, Heidelberg, Vol. 45, Iss. 5, pp.
313~321.

- Siemens, G., Gasevic, D., Haythornthwaite, C., Dawson, S., Shum, S. B., Ferguson, R., Duval, E., Verbert, K., & Baker, R., 2011, "Open learning analytics: An integrated & modularized platform", Open University Press.
- Spasova, S., Bouget, D., Belletti, C., Vanhercke, B., 2020, "Sickness benefits in the EU: making sense of diversity", ETUI Policy Brief. Brussels: ETUI.
- WHO, 1946,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www.who.int/governance/eb/who_constitution_en.pdf. 2020. 8. 3. 인출.

[제4장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 및 정책 제언]

- 박성원 외, 2021, "이머징 이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 Ansoff, I., 1984, "Implanting Strategic Managemen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Cozzens, S., et. al., 2010, "Emerging technologies: Quantitativ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Technology Analysis and Strategic Management, 22(3), 361-376.
- Hiltunen, E., 2008, "The future sign and its three dimensions", Futures, 40(3), 247-260.
- Kaivo-oja, J., 2012, "Weak Signals Analysis, Knowledge Management Theory and Systemic Socio-Cultural Transitions", Futures, 44, 206-217.
- Mendonca, S., Cunha, M., Kaivo-oja, J., Ruff, F., 2003, "Wild cards, weak signals and organisational improvisation", Futures, 36, 201-218.
- Rotolo, D., Hicks, D., Martin, B., 2015, "What is an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Policy, 44, 1827-1843.

부록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결과보고서



I. 미래전망대회 개요

1. 행사 개요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Future Forecast 2022

행사일시	2021년 12월 9일(목), 09:30~17:50								
행사장소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행사장식	온라인 진행 (홈페이지-www.futureforecast.net,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튜브 채널)								
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오전 세션</th> <th style="width: 50%;">오후 세션</th> </tr> </thead> <tbody> <tr> <td>개회식</td> <td>3부 글로벌 전망</td> </tr> <tr> <td>1부 기조강연</td> <td>4부 국내 전망</td> </tr> <tr> <td>2부 특별세션</td> <td>5부 종합토론</td> </tr> </tbody> </table>	오전 세션	오후 세션	개회식	3부 글로벌 전망	1부 기조강연	4부 국내 전망	2부 특별세션	5부 종합토론
오전 세션	오후 세션								
개회식	3부 글로벌 전망								
1부 기조강연	4부 국내 전망								
2부 특별세션	5부 종합토론								
주최/주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1. 미래전략대회 개요

2. 프로그램



● 오전 세션

구분	항목	시간	주제	발표자 (소속)	
개회식	인트로 영상	09:30 ~ 10:00 (30')	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략대회 인트로 영상	
	오프닝		2'	사회자 오프닝	
	개회사		7'	개회사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축사		7'	축사	윤성로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환영사		7'	환영사	권호열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념촬영		6'	기념사진 촬영 및 장내 정리	
1부 기조연설	기조연설 1	10:00 ~ 11:00 (60')	20'	대만의 디지털 민주주의	오드리 탕 장관(대만 디지털부)
	기조연설 2		20'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전망	전의찬 위원장(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기조연설 3		20'	2022년 세계경제 전망	정성준 부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2부 특별세션 (강칭민외)	발표 1	11:00 ~ 12:00 (60')	20'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최관식 사무관(국인권익위원회 인권정보분석과)
	발표 2		20'	메이커 기반 주요 국가 외채 분석	김경훈 연구위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3		20'	NRC데이터정보시스템과 연구기획	정현주 전문위원(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오찬		12:00 ~ 13:00 (60')	60'	오찬	

5

1. 미래전략대회 개요

2. 프로그램



● 오후 세션

구분	항목	시간	주제	발표자	
3부 글로벌전망	발표 1	13:00 ~ 14:00 (60')	20'	2022 연보환경 전망	김상배 회장(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 2		20'	비대면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과제	노세리 부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발표 3		20'	플랫폼 경제와 반독점법 규제	장영신 팀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
4부 국내전망	발표 1	14:00 ~ 16:00 (120')	20'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상 이슈	박성원 그룹장(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발표 2		20'	2022년 산업전망	박상수 실장(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발표 3		20'	초개인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	손진희 실장(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
	발표 4		20'	한국의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및 향후 방향	김기태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5		20'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발표 6		20'	한국 청년의 일과 삶	김형주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휴식		16:00 ~ 16:10 (10')	10'	휴식시간	
5부 종합토론	발제	16:10 ~ 16:30 (20')	20'	2022 국가의제와 미래전략	조봉구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토론	16:30 ~ 17:50 (80')	80'	국민의 소리와 국정 운영 방향	* 진행 : 김형고 원장 (국회미래연구원) * 토론 : 김재진 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문미옥 원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문유경 원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 영 화장(한국정보사회학회) / 오재학 원장(한국교통연구원) 이원태 원장(한국인터넷진흥원) / 임춘택 원장(에너지경제연구원) 황덕순 원장(한국노동연구원)
폐회		17:50	-	폐회	

6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II. 대회운영

II. 대회운영

1. 홈페이지 운영



- 유튜브 연계, 홈페이지 실시간 스트리밍 진행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경청민의
데이터로 읽는 국민의 소리
2021. 12. 9.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경청민의
데이터로 읽는 국민의 소리

다들 물어봐요? 유튜브

본 행사에는 YouTube 생방송 실시간 상영계 있습니다.

문의처
futureforecast@kisdni.net
info@futureforecast@gmail.com

보도자료

- [2021년 11월 19일] KISDI,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경...'
- [2021년 11월 19일] KISDI,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경...'

프로그램, 연세소통, 사진등록, 갤러리, 후원금, 굿배우기

Copyright © 2021. Future Forecast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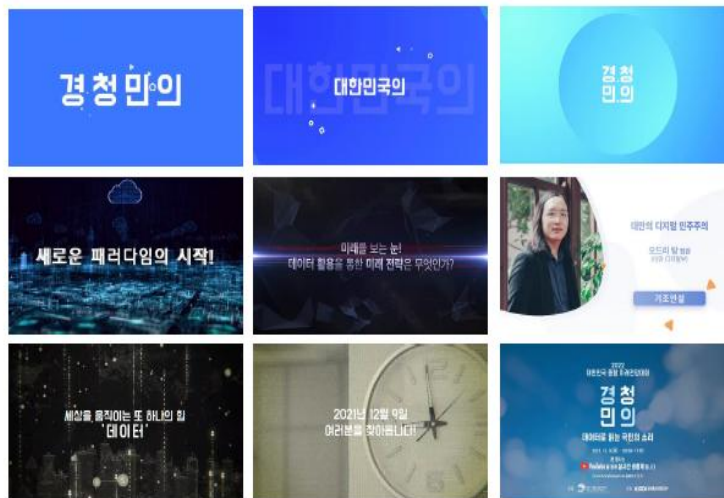
NPC KISD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홍보 영상 제작



④ 홍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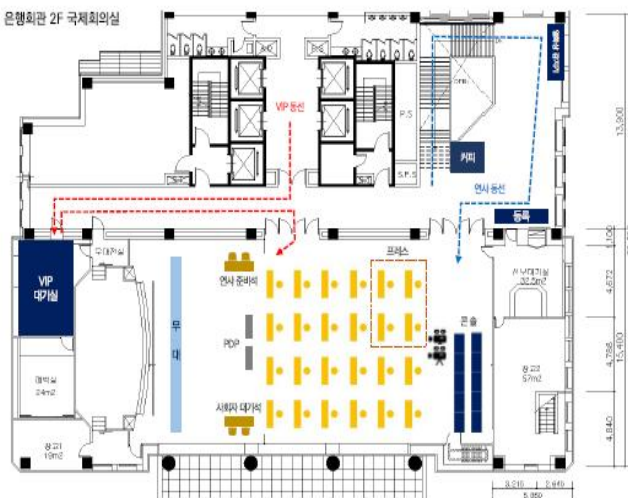
12

3. 행사장 구성



④ 전체 행사장 구성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13

II. 대회운영

3. 행사장 구성



● 전체 행사장 구성



[무대 전경]



[VIP 대기실]



[커피 브레이크]



[등록 데스크]



[등록 데스크_방역물품]



[시스템 관제]

14

II. 대회운영

4. 현장 프로그램



● 개회식 _ 오프닝 및 인트로 영상



[사회자]



[인트로 영상]



16

II. 대화운영

4. 현장 프로그램



◎ 개회식 _ 개회사 및 축사



[개회사_정배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축사_윤성로 위원장(4차산업혁명위원회)]



17

II. 대화운영

4. 현장 프로그램



◎ 개회식 _ 환영사 및 기념촬영



[환영사_권호열 원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념촬영]



18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대회

Ⅲ. 제작물

Ⅲ. 제작물

1. 제작물 운영



● 제작물 리스트

구분	항목	사이즈	규격	수량	내용	비고
현수막	VIP대기실 현수막	4400*700	mm	1식	• 환담장 가로 현수막	
배너류	프로그램 배너	1200*2000	mm	1식	• 프로그램 안내 배너	
	등록 안내 배너	600*1800	mm	1식	• 등록/안전 안내 배너	
	행사장 유도배너	600*1800	mm	4식	• 행사장 동선 안내 배너	
보드류	포디움 보드	600*150	mm	2식	• 포디움 타이틀 보드	
인쇄물	포스터	-	-	50부	• 키비주얼 포스터	
	발표자료집	A4	-	80부	• 대회 발표자료집	
	연사 명패	150*70	mm	-	• 대회장/오찬장 심의 명패	
	비표	96*123	mm	-	• 비표 6종(주최/연사/좌장/토론/스텝/프레스)	
	A3 안내 POP	A3	-	3식	• 안내 POP	
	A4 안내 POP	A4	-	-	• 안내 POP	
기타	예코백	290*34	mm	50개	• 자료집 포장용 예코백	

III. 제작물

1. 제작물 운영



④ 제작물



[행사장 동선 안내 배너]



[프로그램 동선 안내 배너]



[등록안내 배너]



[VIP 대기실 현수막]

38

III. 제작물

1. 제작물 운영



④ 제작물



[포디움 보드]



[발표자료집]



[연사 명패]

39

III. 제작물

1. 제작물 운영



● 제작물



[테이블 POP 및 스탠딩 POP]



연구보고총서 22-01-01

2022 대한민국 종합 미래전망연구

발행 2022년 3월
발행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화 044) 211-1000
홈페이지 www.nrc.re.kr
ISBN 979-11-5567-549-6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